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임시정부, 공화주의, 역사화해:
한국과 폴란드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publicanism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Korea and Poland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8. 05. 24(목) 10:00~18:00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폴란드 중동부유럽연구소
(Institute of East-Central Europe)

| 후원 |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Seoul

| 일정표 |

10:00~10:10	개회사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0:10~10:20	축사	피오토르 오스타셰프스키(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
10:20~10:30	기념촬영	
10:30~12:30	제1부 국제적 맥락에서 본 임시정부 활동과 공화주의의 확산	사회 : 김종학(동북아역사재단)
	제1세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폴란드 망명정부의 활동과 국제적 승인	
발표	폴란드 망명정부의 활동과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 - 마리아쉬 보웬스(Mariusz WOŁOS, 크라쿠프 사범대학교 부총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카이로회의에서 자유독립 보장 - 한시준(단국대)	
	제2세션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공화주의 기원	
발표	폴란드 공화정의 전통과 역사: 군주제와 공화주의 - 모니카 루다시 - 그로즈카(Monika Rudaś-Grodzka, 폴란드문학연구소)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 한국에서의 '민주' · '공화'의 수용과 결합 - 윤대원(서울대)	
	제3세션 폴란드의 독립 100주년 기념	
발표	11월 11일이 의미하는 전통과 폴란드 독립기념일 - 라파엘 부눅(Rafał Wnuk, 루블린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	
토론	김현철,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이동수(경희대)	
12:30~14:00	오찬	



14:00~16:00 **제2부 |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역사화해**

사회 : 김용덕(한국외대)

| 제1세션 |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역사 갈등

발표

동유럽에서의 역사 화해와 통합 그리고 남은 과제
- 마렉 라지본(Marek RADZIOW, 중동부유럽연구소)

동아시아 역사갈등의 역사와 역사화해의 길
- 신주백(연세대)

| 제2세션 | 공동역사연구 및 공동교과서 편찬을 위한 국제협력

발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서의 폴란드와 러시아의 협력
- 미로스와프 필리포비츠(Mirosław FILIPOWICZ, 중동부유럽연구소장)

공동역사교재 편찬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
- 김정인(춘천교대)

토론

서종진, 이병택(동북아역사재단), 천자현(연세대)

16:00~16:30 휴식

16:30~17:50 **제3부 | 종합토론**

사회 :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전 참가자

17:50~18:00 **폐회사** 이현주(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제1부]

국제적 맥락에서 본 임시정부 활동과 공화주의의 확산

| 제1세션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폴란드 망명정부의 활동과 국제적 승인

- 9** 폴란드 망명정부의 활동과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
발표: 마리아쉬 보워스(Mariusz Wołos, 크라쿠프 사범대학교 부총장)
- 27** 대한민국 임시정부, 카이로회의에서 자유독립 보장
발표: 한시준(단국대)

| 제2세션 | 공동역사연구 및 공동교과서 편찬을 위한 국제협력

- 49** 폴란드 공화정의 전통과 역사: 군주제와 공화주의
발표: 모니카 루다시-그로즈카(Monika Ruda-Grodzka, 폴란드문학연구소)
- 65**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 한국에서의 '민주'·'공화'의 수용과 결합
발표: 윤대원(서울대)

| 제3세션 | 폴란드의 독립 100주년 기념

- 75** 11월 11일이 의미하는 전통과 폴란드 독립기념일
발표: 라파엘 부눅(Rafał Wnuk, 루블린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
-



[제2부]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역사화해

| 제1세션 |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역사 갈등

- 89** 동유럽에서의 역사 화해와 통합 그리고 남은 과제
발표: 마렉 라지본(Marek RADZIWON, 중동부유럽연구소)
- 103** 동아시아 역사갈등의 역사와 역사화해의 길
발표: 신주백(연세대)

| 제2세션 | 공동역사연구 및 공동교과서 편찬을 위한 국제협력

- 109**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서의 폴란드와 러시아의 협력
발표: 미로스와프 필리포비츠 (Miroslaw FILIPOWICZ, 중동부유럽연구소장)
- 123** 공동역사교재 편찬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
발표: 김정인(춘천교대)
-

[제3부]

종합토론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임시정부, 공화주의, 역사화해:
한국과 폴란드



[제1부]

국제적 맥락에서 본 임시정부 활동과 공화주의의 확산

제1세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폴란드 망명정부의 활동과 국제적 승인

폴란드 망명정부의 활동과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

발표: 마리아쉬 보웬스(Mariusz WOŁOS, 크라쿠프 사범대학교 부총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카이로회의에서 자유독립 보장

발표: 한시준(단국대)

폴란드 망명정부의 활동과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

마리아쉬 보워스(Mariusz WOŁOS, 크라쿠프 사범대학교 부총장)

1926년 5월, 독립한 폴란드의 아버지 중 한 분으로 또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가를 건축한 유제프 피우수트스키(Józef Piłsudski) 총사령관은 쿠데타를 일으켜, 실제 독재자로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성취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입법부를 희생시켜 행정부를 강화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작업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본 작업에는 피우수트스키의 가까운 동료들이 참석했었고, 그들은 피우수트스키와 이후에 헌법에 적용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규정하는 이 중요한 문서는 피우수트스키를 국가 지도자로 생각하며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1935년4월에 총사령관이 사망하기 직전에 발효되었고, 그는 헌법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폴란드 공화국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으로 그의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민주주의적이었지만, 역사의 역설로, 폴란드가 두 강력한 이웃으로부터, 처음에는 9월 1일 독일 제3제국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이어 9월 17일에 유제프 스탈린이 이끄는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1939년에 매우 유익한 해결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침략자에 대한 짧지만 영웅적인 방어 후, 폴란드 당국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자 동맹국인 루마니아와 함께 국경을 통과하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측과 동맹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대통령, 총리와 폴란드 정부 또한 총사령관은 인질로 잡혀 독일과 소련뿐만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압박을 받는 루마니아인들

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폴란드의 동맹국인 후자 국가도 그들 영토에서 너무나 독립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던 피우수트스키 총사령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합법적인 당국이 자국을 떠날 수 있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35년 헌법에 의거하는, 즉 프랑스들로부터 인정 받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프랑스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비민주적인 헌법의 역설은 이전 폴란드 정치제체에 저항했던 피우수트스키 정부의 야당 및 그의 후계자 대표가 지금은 정치적 반대자들이 제정한 규칙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일부 교란 후, 루마니아에 억류된 폴란드공화국 대통령인 이그나치 모시치츠키(Ignatius Mościcki)는 이미 프랑스에 있는 브와디스와프 라츠키에비츠(Władysław Raczkiewicz)라는 경험 있는 정치가를 후계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식적으로 국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 총리와 총사령관은 프랑스에서 인정 받고, 존경 받는, 피우수트스키(Piłsudski)의 정치적 반대자인 블라디스와프 시코르스키(Władysław Sikorski)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파리에 설립한 정부는 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 정부에 대한 야당 대표 뿐 아니라, 온건파로 취급되는 피우수트스키와 관련된 몇몇 정치가들도 소속되었습니다. 과거의 대통령의 광범위한 역량은 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두면서 제한되었습니다. 일반 시코르스키(Sikorski)장군과 그의 측근은 실행했습니다.

프랑스에 처음으로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었던 폴란드 당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권력은 당국의 동의와 헌법의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둘째, 1939년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인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으므로 따라서 적어도 침략자 중 한 나라와의 전쟁에서 폴란드의 연합 파트너가 되었고, 이것을 제3제국이라고 합니다. 두 세력은 망명된 폴란드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더 큰 이유는 그들은 프랑스 땅에서 동맹군도 필요로 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폴란드공화국에서 장관 및 군인을 포함하여 국민 수천 명 떠난 점입니다. 드디어 셋째, 파리 및

영국에는 1차 세계 대전 때의 벨기에 casus를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정부는 독일 침략과 거의 모든 벨기에 영토에 대한 점령 이후 1914-1918년에 프랑스에 땅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영국의 정치 이민으로 거주한 폴란드 망명 국가 외에도 제3제국의 국가에 의해 점령당 하는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프랑스, 유고 슬라비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망명 정부는 전쟁 이전만큼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의 표현으로는 폴란드 내부 사안에 대한 프랑스의 간섭이었고, 심지어 파리에서 작은 지방도시인 양제로로 정부의 옮김이었습니다. 1940년 봄에 히틀러의 공격에 프랑스의 군대가 패배한 이후 라크스키에츠 (Raczkiwicz) 대통령과 시코 르 스키 (Sikorski) 총리는 함께 영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때부터 존재할 때까지 그들은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망명 정부의 위치는 국제 무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2차 세계대전 전선에서의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몰락 이후, 영국은 심지어 폴란드인이 영국인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나타낼 것을 촉구하였고, 이는 그들이 여전히 동맹국을 가지고 있으며, 히틀러와 고독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련에 대한 독일의 침략과 제3제국과의 싸움에서 윈스턴 처칠 총리와 영국이 인정한 이후, 망명한 폴란드 당국의 입장은 점차적으로 약화되었다. 이것은 반 히틀러 연합에서 소련의 중요성이 커짐에 반비례했다. 이것은 1943년 초 스탈린 그라드에서 소비에트 군대가 승리 한 이후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지휘하는 공산 정권을 폴란드에 실현하기를 원했고, 영국과 미국-서방국에 대해 더욱 잔인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빅3회의에서 폴란드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에 반영되었으므로, 즉 1943년 테헤란에서 일어난 스탈린, 처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Franklin Delano Roosevelt)와 1945년 2월 크림 반도의 얄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인과 미국인들은 소련이 1939년 소비에트 포로 생활을 했던 2200 명의 폴란드인 수감자, 주로 장교, 공무원 및 경찰을 살해했다는 사실조차도 스탈린에 대한 이러한 사실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범죄의 상징은 카틴(Katyn)입니다. 런던과 워싱턴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에 스탈린과 그의 정치 경찰, 즉 NKWD가 폴란드인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민에게 이것은 여전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광범위한 냉소주의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처칠 (Churchill)과 루스벨트 (Roosevelt)와 같은 사람들은 주로 그들의 나라의 정치적 이익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군대 잠재력이 제3제국의 승리를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군대와 인적자원과 비교하면 작았다. 또한 영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극동 지역에서 일본을 물리칠 스탈린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계산은 투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폴란드 문제에 있어서 스탈린은 폴란드를 포함한 중부 유럽을 모스크바에 의존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슬로건은 정치적 계산과 자신의 이익을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 당국에 허가를 받지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인은 스탈린의 원함에 따라 전쟁 후 폴란드의 경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고 이전에 소련과 접경하는 영토를 빼앗아 독일 소유의 지역을 보상 받을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란드를 소련의 은혜를 받고, 독일인들과 적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폴란드는 영토 변화에 있어 불이익을 겪었고, 이는 전쟁 전에 388,000km²에 이르렀고, 전쟁이 끝난 후 312,000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1944/1945년에서 1989년까지 지속된 모스크바에 대한 정치 의존도였고, 따라서 거의 절반 세기를 모스크바에 의존했다. 처칠과 루스벨트는 알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스탈린이 임시 민족연합정부의 설립에 찬성을 하였고, 스탈린이 인정한 망명된 폴란드 당국 및 공산당이 지배한 폴란드 당국자들로만 독점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후자는 물론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폴란드 국가의 결정이 아니라 두 세력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적군이 1944-1945년에 전적으로 취한 폴란드의 소비에트 화와 스탈린 화에 대한 동의를 의미했습니다. 서방 세력의 지원과 보안 당국과 경찰과 함께 강력한 소비에트 군대가 폴란드 영토에서 체류하는 동안 모스크바에서의 폴란드 공화국의 독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이 스탈린에게 폴란드 주도권을 주겠다는 합의와 임시 국가 정부 설립은 런던에 망명중인 여전히 합법적인 폴란드 정부에 대한 서구 국가 대다수의 인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1945년 7월 5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세력이 바르샤바 임시 정부 창설 후 정확히 1주일 만에 스탈린의 지도하에 폴란드 당국에 대한 인정을 철회했다. 망명 정부는 반 소비에트 적의를 표방하고 서방 세력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들에 의해 얼마 동안 인정 받았습니다. 이는 스페인 프랑시스코 프랑코 장군 (1968년까지),

아일랜드 (1957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2년까지 이민 정부를 공식 인정한 제자들의 성지 (Holy See)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산주의 당국이 종교에 대하여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대부분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정치적이면서도 공산주의 당국이 종교적인 문제로 싸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망명한 폴란드 당국은 3제국과 함께 1939년에 폴란드에 대한 침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합의를 모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41년 독일-소련 전쟁이 시작된 후 시코르스키 총리는 영국의 압력을 받지 않고 소련 측과 정치 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협정은 1941년 7월에 아주 빨리 진행되고 서명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모스크바의 주도하에 1939년 대사관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 수립, 소련에서 폴란드 군대 형성을 위한 스탈린의 동의와 교도소 및 강제 수용소에서 폴란드 시민의 석방에 관한 법안이었습니다. 폴란드-소련 국경의 경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구속력 있는 결정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1939년 제3제국과의 합의, 즉 폴란드의 실제 분단과 점령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 이것은 스탈린이 이전 국경의 복구에 대한 그의 승인을 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스탈린이 이전 국경의 복구에 대한 그의 승인을 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협정의 결과로 외교적 접촉이 재개되고 동부의 폴란드 군대가 형성되었으며, 소련에 남아있는 포로와 폴란드 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군은 1941년 12월에 독일군이 주변에 있었을 때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도시와 소련의 승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폴란드 시민권 자로서 모스크바가 권리를 주장한 폴란드 공화국의 동부 영토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의 대표자들을 대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부의 폴란드 군대는 소련군에 의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당국과 스탈린의 동의로 1942년 중동으로 대피했습니다. 스몰렌스크 근처 카틴 숲 대학살의 피해자의 독일인의 무덤에 의한 발견은 폴란드 망명 정부는 매장의 장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국제 적십자사에 게 요청했습니다.

독일인들이 폴란드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소비에트 측에 의해 망명된 폴란드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제3제국과의 협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을 공식화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39-1941 년에 히틀러의 최고 동맹국이었던 스탈린은 폴란드에 대해 최근까지 독일을 지원 한 것을 냉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시코르스키 총리의 후임인 스타니스와프 미코와이치 (Stanisław Mikołajczyk) 총리가 망명 정부의 차기 정부로 복귀하기 위한 소련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은 더 이상 런던의 폴란드 당국 대표와 대화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독일군의 동부 쪽을 부추기고 폴란드 정세에 서구 세력을 양보함으로써 그가 폴란드의 이민 정부에 의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바르샤바에서 권력을 넘겨 주려고 했던 폴란드의 신뢰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 그룹을 이미 그의 자리에 두고 있었습니다. 망명 정부가 동부 이웃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전에 폴란드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의 현상은 망명한 독립 국가의 건설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정치 당국과 폴란드 군대만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대변인은 정부의 배경, 비 당파 성원을 구성하는 모든 정당 대표뿐만 아니라 유대인 소수 민족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폴란드 공화국 전국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Poland)였다. 폴란드 외교 서비스는 매우 광범위했으며 반 히틀러 연합과 중립국에서 전 세계에 거의 모든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앙제, 그리고 나중에 런던에서 부처뿐만 아니라 현재 정책을 다루는 다른 정부 기관, 세계 폴란드에 흩어져 있는 폴란드인들 및 폴란드가 점령 당한 땅에서 폴란드 전쟁 전 폴란드의 재건 또한 정치 생활, 경제, 사회 및 문화 개혁 전반에 대한 현대적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폴란드 군인은 1939 년 9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제3제국 및 그 동맹국과의 전투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군대에 선두에는 폴란드와 비당 무장 동맹군과 같은 군부대 (ogólnopolski i bezpartyjny Związek Walki Zbrojnej), 크라쿠프 군대(Armia Krakowa), 농민 운동과 관련된 농민 대대(Bataliony Chłopskie) 또는 우파와 관련된 군대(Narodowa Organizacja Wojskowa)를 포함했습니다. 이 모든 조직은 유배지에서 작전중인 군사 명령에 종속되었고, 그곳에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간 부문은 정당과 국가 구조를 포함했습니다. 후자의 선두에는 부총리 계급의 정부 대표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폴란

드 국민은 유배 당국의 권위를 폴란드-리투아니아 독립 연방의 법적 연장으로서 인정했습니다. 예외는 자신의 군대와 정치 구조를 만든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 사회의 소수였습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한 후 많은 과학자, 문화 활동가, 예술가, 언론인, 작가, 시인, 엔지니어, 기술자 등 저명한 폴란드인들이 이민을 했습니다. 망명한 폴란드인이 건설에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폴란드인 집단이 모인 곳에서 과학 및 문화 기관이 등장했으며 폴란드 신문이 출판되었고, 모국어로 책이 출판되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1939년 파리에 폴란드 대학이 창립되었고, 그 대학은 10년 후에 런던에 설립된 폴란드 대학의 원형이었다. 1942년 뉴욕에서 거주하는 폴란드의 학자들은 크라코프에서 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폴란드의 학습 아카데미 (Polish Academy of Learning)의 한 분과로 계획된 미국의 폴란드 과학 연구소 (Polish Institute of America)를 설립했습니다.

1943년 뉴욕에서도 전쟁 당시 바르샤바에서 활발했던 동명의 기관의 전통을 이어가고 미국의 조셉 피우츠키스 연구소 (Józef Piłsudski Institute)가 설립되었습니다. 1945년 5월, 영국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망명한 폴란드 정부의 수장님을 기념하여 설립된 중요한 문화 및 과학 기관인 시코르스키 기념 역사 연구소 (추후에 폴란드 연구소와 브와디스와프 시코르스키 장군의 박물관)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현재 뉴욕이나 런던에서 자연스럽게 폴란드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민의 가장 중요한 문화 및 지적 센터는 2차 세계대전 후 다시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1947년 파리 근처의 이래 메종 라 피테 (Maisons-Laffitte)에 로마에 설립된 문학 연구소 (Literary Institute)가 1년 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실제 관심사와 영향 범위보다 훨씬 겸손한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 월간지 “문화”(„Kultura”)와 분기별 발행지 “역사 공책” (“Zeszyty Historyczne”)의 출판을 통해 연구소는 망명자와 소비에트 진영에서 거주하는 폴란드인들 몇 세대의 태도와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출판 연구소의 간행물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입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폴란드 이민 센터와 달리, 그는 과거를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에트로이크(Giedroyc)가 이끌고 있는 지적인 센터는 폴란드와 이웃 국가들과의 대화 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한때 광대한 공화국 영토에서 살았던 리투아니아,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였고, 2차 세계 전 이후에는 그들은 소련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늘 날 폴란드 외교와 많은 폴란드 지식인들에게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현이 때로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지정학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거의 유산도 결정됩니다. 2000년에 사망한 예쥬 기에드로이크(Jerzy Giedroy)의 문학 연구소도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것은 1939 년 이후 폴란드 이민의 매우 풍부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현대 폴란드 공화국은 상징적으로 망명에 있는 폴란드 권위의 합법화에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에 관한 표현으로 1990년 12월에 망명한 리자드 카코로스키 (Ryszard Kaczorowski)는 자유롭고 보편적인 선거에서 선출된 마지막 대통령인 레흐 바웬사 (Lech Wałęsa)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사건은 1991년에 폴란드공화국 전국위원회가 중단된 것이고, 따라서 폴란드에서의 자유로운 의회 선거가 개최된 이후였습니다. 망명한 폴란드 정부의 정치적, 문화적, 과학적, 심지어 경제적 경험과 이웃에 의해 습격 당하여 공화국이 붕괴한 이후 이것이 수많은 폴란드의 난민들이 여전히 현대 폴란드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웃 국가들, 특히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리투아니아와의 소통을 이루고자 합니다. 흔히 끔찍한 역사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민족주의 장벽을 극복 할 수 있습니다.

Aktywność polskiego rządu na uchodźstwie i jego wysiłki na rzecz uznania międzynarodowego

Mariusz Wołos (Uniwersytet Pedagogiczny w Krakowie)

W maju 1926 roku marszałek Józef Piłsudski, jeden z ojców polskiej niepodległości i budowniczy państwa po pierwszej wojnie światowej, dokonał zamachu stanu, przejmując władzę jako faktyczny dyktator. Możliwym i najważniejszym celem, jaki zamierzał osiągnąć, było wzmocnienie władzy wykonawczej kosztem władzy ustawodawczej. Prace nad nową konstytucją trwały kilka lat. Uczestniczyli w nich bliscy współpracownicy Piłsudskiego, którzy konsultowali z nim szereg rozwiązań, jakie zastosowano później w konstytucji. Ten najważniejszy dokument regulujący funkcjonowanie państwa pisany był z myślą o Piłsudskim jako jego przywódcy. Wszedł w życie w kwietniu 1935 roku, krótko przed śmiercią Marszałka, który nie zdążył skorzystać z szerokiego zakresu prerogatyw, jakie oferowała mu konstytucja. Jedną z nich była możliwość wskazywania przez prezydenta Rzeczypospolitej Polski jako głowy państwa swojego następcy. Było to rozwiązanie niedemokratyczne, ale paradoks historii polegał na tym, że okazało się wręcz zbawienne w 1939 roku, kiedy to Polska została zaatakowana przez dwóch potężnych sąsiadów – najpierw 1 września przez niemiecką Trzecią Rzeszę z Adolfem Hitlerem na czele, a następnie 17 września przez komunistyczny Związek Sowiecki kierowany przez Józefa Stalina.

Po krótkiej, ale bohaterskiej obronie przed agresorami władze polskie zostały zmuszone do przekroczenia granicy z sojuszniczą Rumunią, chcąc dostać się do Francji, gdzie zamierzały kontynuować działalność. Jednakże wbrew zapewnieniom strony

rumuńskiej i zobowiązaniom sojuszniczym prezydent, premier wraz z całym rządem, a także naczelny wódz Wojska Polskiego zostali internowani, wpadając w pułapkę zastawioną przez Rumunów, którzy znajdowali się pod naciskiem nie tylko Niemiec i Związku Sowieckiego, ale także Francji. Ten ostatni kraj, także sojusznik Polski, nie życzył sobie, aby na jego terytorium polityczną działalność kontynuowali ludzie związani wcześniej z marszałkiem Piłsudskim, prowadzącym zbyt samodzielną i niezależną politykę. Dokonano zatem czegoś w rodzaju zamachu stanu na legalne władze polskie zmuszone do opuszczenia własnego kraju. W związku z tym pojawiła się kwestia legalnego, czyli zgodnego z konstytucją z 1935 roku, przekazania władzy ludziom, którzy zostaną zaakceptowani przez Francuzów i będą mogli we Francji utworzyć nowy rząd.

Paradoks niedemokratycznej konstytucji polegał na tym, że przedstawiciele opozycji wobec rządów Piłsudskiego i jego następców, którzy wcześniej kontestowali ustrój panujący w Polsce, teraz mieli się stać największymi beneficjentami zasad ustalonych przez przeciwników politycznych.

Po pewnych perturbacjach internowany w Rumunii prezydent Rzeczypospolitej Ignacy Mościcki wskazał jako swego następcę przebywającego już we Francji doświadczonego polityka w osobie Władysława Raczkiewicza. On też został formalnie głową państwa. Premierem i zarazem naczelnym wodzem polskiej armii został gen. Władysław Sikorski, dobrze widziany i szanowany we Francji przeciwnik polityczny marszałka Piłsudskiego. Powołany przez niego rząd początkowo urzędujący w Paryżu miał charakter koalicyjny. Weszli do niego nie tylko przedstawiciele partii opozycyjnych wobec rządów przedwojennych, ale także kilku polityków związanych z Piłsudskim, których traktowano jako umiarkowanych. Szerokie wcześniej kompetencje prezydenta państwa ograniczono na rzecz premiera jako szefa rządu. Zadał o to gen. Sikorski i jego otoczenie.

Legalności władz polskich przebywających najpierw we Francji, następnie w Wielkiej Brytanii nikt nie kwestionował. Wynikało to z kilku powodów. Po pierwsze, władza przekazana została legalnie za zgodą ustępujących władz i zgodnie z regułami konstytucji. Po drugie, Wielka Brytania i Francja jeszcze 3 września 1939 roku wypowiedziały Niemcom wojnę, stając się tym samym koalicjantami Polski w wojnie z przynajmniej jednym z agresorów, to jest Trzecią Rzeszą. Oba mocarstwa nie miały zatem żadnych

powodów, aby nie uznawać władz polskich na uchodźstwie, tym bardziej, że wraz z politykami Rzeczpospolitą opuściło kilkaset tysięcy jej obywateli, w tym oficerów i żołnierzy, którzy przystąpili na ziemi francuskiej do budowy armii potrzebnej także sojusznikom. Po trzecie wreszcie, w Paryżu i Londynie dobrze pamiętano casus Belgii z okresu pierwszej wojny światowej, kiedy to rząd tego kraju po agresji niemieckiej oraz okupacji niemal całego terytorium belgijskiego został przyjęty i funkcjonował na terenie Francji w latach 1914-1918. Warto dodać, że poza władzami państwowymi Polski na politycznej emigracji w Wielkiej Brytanii znalazły się z czasem także inne rządy okupowanych przez Trzecią Rzeszę państw, w tym Czechosłowacji, Norwegii, Francji i Jugosławii.

W rzeczywistości pozycja rządu polskiego na uchodźstwie nie była, bo i być nie mogła, tak silna jak w przed wojną w niepodległej Rzeczypospolitej. Wyrazem tego było ingerowanie Francuzów w wewnętrzne sprawy polskie, a nawet przeniesienie siedziby rządu z Paryża do niewielkiego prowincjonalnego miasta Angers. Po klęsce militarnej Francji zaatakowanej wiosną 1940 roku przez Hitlera władze polskie z prezydentem Raczkiewiczem i premierem Sikorskim znalazły się na terenie Wielkiej Brytanii. Od tego czasu aż do końca swego istnienia miały one swoją siedzibę w Londynie. Nie będzie przesadą stwierdzenie, że pozycja polskiego rządu uchodźczego wynikała ze zmian dokonujących się na arenie międzynarodowej i sytuacji na frontach drugiej wojny światowej. Przykładowo, po upadku Francji Anglicy wręcz namawiali Polaków do manifestowania swej obecności na Wyspach Brytyjskich, aby ich mieszkańców przekonać, że Brytyjczycy wciąż mają sojuszników i nie walczą z Hitlerem w osamotnieniu. Po agresji niemieckiej przeciwko Związkowi Sowieckiemu i uznaniu tego państwa przez Wielką Brytanię z premierem Winstonem Churchillem na czele za głównego sojusznika w walce z Trzecią Rzeszą pozycja władz polskich na emigracji stopniowo, ale wyraźnie słabła. Była ona odwrotnie proporcjonalna do wzrostu znaczenia Związku Sowieckiego w koalicji antyhitlerowskiej. Dawało się to zauważyć zwłaszcza po zwycięstwie armii sowieckiej pod Stalingradem na początku 1943 roku. Stalin chciał zainstalować w Polsce kierowany przez Moskwę rząd komunistyczny i czynił idące w tym kierunku coraz bardziej brutalne naciski na mocarstwa zachodnie – Wielką Brytanię oraz Stany Zjednoczone. Znajdowało to swoje odzwierciedlenie w postaci decyzji w sprawach polskich podejmowanych podczas

kolejnych konferencji Wielkiej Trójki, a zatem Stalina, Churchilla i prezydenta USA Franklina Delano Roosevelta, które odbyły się w Teheranie w 1943 roku oraz w Jałcie na Półwyspie Krymskim w lutym 1945 roku. Brytyjczykom i Amerykanom nie przeszkadzał w tych ustępstwach na rzecz Stalina nawet fakt wymordowania przez sowietów 22 tysięcy jeńców polskich, głównie oficerów, urzędników i policjantów, którzy dostali się do sowieckiej niewoli jeszcze w 1939 roku. Symbolem tej zbrodni pozostaje Katyń. W Londynie i w Waszyngtonie dobrze wiedziano jeszcze przed zakończeniem drugiej wojny światowej, że mord na Polakach dokonał Stalin i jego policja polityczna, czyli NKWD. Dla polskiej opinii publicznej do dziś jest to dowód na daleko posunięty cynizm ówczesnych przywódców demokratycznych państw zachodnich. Ludzie tacy jak Churchill i Roosevelt przede wszystkim dbali jednak o interesy polityczne swoich państw. Wiedzieli dobrze, że potencjał militarny, jakim dysponowali Polacy nie przesądzi o zwycięstwie nad Trzecią Rzeszą. W porównaniu z potencjałem militarnym i zasobami ludzkimi Związku Sowieckiego był on niewielki. Na dodatek Brytyjczycy, a zwłaszcza Amerykanie liczyli na pomoc Stalina w pokonaniu Japonii na Dalekim Wschodzie. Rachunek zysków i strat był zatem klarowny – w sprawach polskich należało ustępować Stalinowi, który nie ukrywał, że zamierza uzależnić od Moskwy Europę Środkową, w tym Polskę. Demokratyczne i humanistyczne hasła przegrywała z kalkulacjami politycznymi oraz własnymi interesami.

W rezultacie, bez pytania władz polskich o zgodę, Brytyjczycy i Amerykanie wyrazili aprobatę na przesunięcie zgodnie z życzeniami Stalina granicy przyszłej powojennej Polski ze wschodu na zachód, odbierając jej tereny graniczące wcześniej ze Związkiem Sowieckim, a rekompensując terenami należącymi wcześniej do Niemiec. W ten oto sposób Polskę zamierzano zantagonizować z Niemcami, oddając na łaskę Związku Sowieckiego. Rachunek zmian terytorialnych był przy tym niekorzystny dla Rzeczypospolitej, która przed wojną liczyła 388 tysięcy km², a po wojnie 312 tys. km². Najgorsze było jednak polityczne uzależnienie od Moskwy, które trwało od 1944/1945 roku aż do 1989 roku, a zatem niemal pół wieku. Podczas konferencji w Jałcie Churchill i Roosevelt w pełni poparli propozycję Stalina, aby utworzyć Tymczasowy Rząd Jedności Narodowej, w skład którego wejść mieli wyłącznie akceptowani przez Stalina przedstawiciele władz polskich na uchodźstwie oraz zdominowani przez komunistów Polacy z obozu prosowieckiego. Ci ostatni mieli rzecz jasna dominować. Była to zatem decyzja nie narodu polskiego, ale obcych mocarstw. W

rzeczywistości oznaczała ona zgodę na sowietyzację i stalinizację Polski, którą Armia Czerwona zajęła całkowicie w latach 1944-1945. Bez wsparcia mocarstw zachodnich i w warunkach pobytu na ziemiach polskich potężnych oddziałów sowieckich wraz z organami bezpieczeństwa i policją polityczną szansa na odbudowę niezależnej od Moskwy Rzeczypospolitej nie istniała. Zgodna wielkich mocarstw na oddanie inicjatywy w sprawach polskich Stalinowi i powołanie do życia Tymczasowego Rządu Jedności Narodowej przekreślała dalsze uznanie większości państw zachodnich dla wciąż przecież legalnego rządu polskiego funkcjonującego na uchodźstwie w Londynie. Główne mocarstwa, w tym Wielka Brytania i Stany Zjednoczone, cofnęły swoje uznanie dla władz polskich w dniu 5 lipca 1945 roku, dokładnie tydzień po powołaniu w Warszawie Tymczasowego Rządu Jedności Narodowej, który faktycznie znajdował się pod kuratelą Stalina. Rząd na uchodźstwie uznawany był jeszcze przez jakiś czas przez państwa, które miały oblicze antysowieckie i nie liczyły się z postanowieniami mocarstw zachodnich. Należały do nich rządona przez gen. Francisco Franco Hiszpania (do 1968 roku), Irlandia (do 1957 roku), wreszcie Stolica Apostolska, która formalnie uznawała rząd emigracyjny najdłużej, bo do 1972 roku. W wymienionych przypadkach nie bez znaczenia pozostawały kwestie nie tylko polityczne, ale także religijne, ponieważ Polska w zdecydowanej większości pozostała krajem katolickim, mimo że władze komunistyczne walczyły z religią.

W okresie drugiej wojny światowej władze polskie na uchodźstwie próbowały szukać porozumienia ze Związkiem Sowieckim, mimo że wraz z Trzecią Rzeszą dokonał on agresji na Polskę w 1939 roku. Po rozpoczęciu wojny niemiecko-sowieckiej w 1941 roku premier gen. Sikorski, nie bez nacisku ze strony Anglików, rozpoczął pertraktacje ze stroną sowiecką na temat zawarcia paktu politycznego. Układ ten został dość szybko opracowany i podpisany jeszcze w lipcu 1941 roku. Jego najważniejsze postanowienia przewidywały nawiązanie zerwanych w 1939 roku z inicjatywy Moskwy stosunków dyplomatycznych na najwyższym szczeblu ambasad, zgodę Stalina na formowanie armii polskiej w Związku Sowieckim oraz uwolnienie z więzień i obozów koncentracyjnych obywateli polskich. Sprawę określenia przebiegu granicy polsko-sowieckiej odłożono na przyszłość bez wiążących rozstrzygnięć. Moskwa zgodziła się na anulowanie swoich układów zawartych z Trzecią Rzeszą jeszcze w 1939 roku, czyli faktycznego podziału i okupacji Polski. Nie oznaczało to bynajmniej, że Stalin wyraził aprobatę na przywrócenie poprzedniego

przebiegu granicy. W wyniku porozumienia wznowiono kontakty dyplomatyczne oraz utworzono Armię Polską na Wschodzie złożoną z uwolnionych jeńców i obywateli polskich przebywających w Związku Sowieckim. Gen. Sikorski odwiedził Moskwę w grudniu 1941 roku, kiedy to wojska niemieckie znajdowały się w jej pobliżu, czym dał wyraz wiary w skuteczną obronę miasta i sowieckie zwycięstwo. Wkrótce jednak zaczęły się piętrzyć problemy. Władze sowieckie nie godziły się na traktowanie jako obywateli polskich przedstawicieli mniejszości narodowych zamieszkujących przed wojną wschodnie tereny Rzeczypospolitej, do których Moskwa rościła sobie prawa. Armia Polska na Wschodzie była źle zaopatrywana przez sowietów i utrudniano obywatelom polskim docieranie do miejsc jej formowania. W rezultacie, za zgodą władz brytyjskich i aprobatą Stalina, została ona w 1942 roku ewakuowana na Bliski Wschód. Odkrycie przez Niemców grobów ofiar zbrodni katyńskiej w pobliżu miasta Smoleńsk spowodowało, że władze polskie na uchodźstwie zwróciły się do Międzynarodowego Czerwonego Krzyża o bezstronne zbadanie miejsca pochówku i okoliczności dokonania mordu. Ponieważ zupełnie niezależnie od działań Polaków Niemcy uczynili to samo, fakty te zostały wykorzystane przez stronę sowiecką do zerwania stosunków dyplomatycznych z rządem polskim na uchodźstwie i sformułowania absurdalnych oskarżeń o jego współdziałanie z Trzecią Rzeszą. W ten oto sposób Stalin, który był najlepszym sojusznikiem Hitlera w latach 1939-1941, cynicznie oskarżał stronę polską o to, co sam do niedawna czynił, wspierając Niemcy. Mimo prób ponownego nawiązania stosunków ze Związkiem Sowieckim, podejmowanych przez następcę gen. Sikorskiego premiera Stanisława Mikołajczyka jako kolejnego szefa rządu na uchodźstwie, nie udało się ich przywrócić. Stalin nie był już zainteresowany rozmowami z przedstawicielami władz polskich w Londynie. Postępy jego armii, które gromiły na froncie wschodnim Niemców oraz ustępliwość mocarstw zachodnich w sprawach polskich dawały mu pewność, że z polskim rządem emigracyjnym nie będzie się musiał liczyć. W zanadrzu miał już wierną mu grupę komunistów polskich, którym zamierzał przekazać władzę w Warszawie. Podejmowane przez rząd uchodźczy próby normalizacji relacji ze wschodnim sąsiadem zakończyły się zatem porażką.

Fenomenem w skali wcześniej niespotykanym w dziejach Polski była budowa struktur niepodległego państwa na uchodźstwie. We Francji i w Wielkiej Brytanii nie funkcjonowały bynajmniej tylko władze polityczne i armia polska. Namiastką parlamentu była Rada

Narodowa Rzeczypospolitej Polskiej, w której zasiadali przedstawiciele wszystkich partii politycznych stanowiących zaplecze rządu, osoby bezpartyjne, ale również przedstawiciele mniejszości żydowskiej. Polska służba dyplomatyczna była bardzo rozbudowana i posiadała swoje przedstawicielstwa niemal na całym świecie w państwach koalicji antyhitlerowskiej oraz w krajach neutralnych. W Paryżu, Angers, a potem w Londynie funkcjonowały ministerstwa i inne agendy rządowe, które zajmowały się nie tylko bieżącą polityką, opieką nad rozrzuconymi po świecie Polakami oraz gromadzeniem informacji na temat sytuacji na okupowanych ziemiach polskich, ale także przygotowywały zaskakujące nieraz swoją szczegółowością plany odbudowy powojennej Polski oraz opracowywały nowoczesne rozwiązania całokształtu życia politycznego, reform gospodarczych, społecznych i kulturalnych. Żołnierz polski bez przerwy od września 1939 do maja 1945 roku brał udział w walkach przeciwko Trzeciej Rzeszy i jej sojusznikom.

Innym fenomenem podległym władzom polskim na uchodźstwie było Państwo Podziemne, które istniało i działało w trudnych warunkach okupacji. Dzieliło się ono na pion wojskowy i cywilny. Do pionu wojskowego wchodziły formacje militarne takie jak ogólnopolski i bezpartyjny Związek Walki Zbrojnej, potem Armia Krakowa, związane z ruchem ludowym Bataliony Chłopskie czy powiązana z prawicą Narodowa Organizacja Wojskowa. Wszystkie te organizacje były podległe dowództwu wojskowemu działającemu na uchodźstwie i wykonywały płynące stamtąd rozkazy. Pion cywilny obejmował struktury partyjne oraz państwowe. Na czele tych ostatnich stał Delegat Rządu na Kraj w randze wicepremiera. Zdecydowana większość obywateli polskich uznawała zwierzchnictwo władz na uchodźstwie jako legalnego przedłużenia władz niepodległej Rzeczypospolitej. Wyjątek stanowili komuniści, którzy budowali swoje własne struktury militarne i polityczne. Byli oni jednak marginesem całego społeczeństwa i stanowili znikomą mniejszość.

Po wybuchu wojny w 1939 roku na emigracji znalazło się szerokie grono wybitnych Polaków – uczonych, działaczy kultury, artystów, publicystów, pisarzy, poetów, inżynierów, techników itd. To właśnie oni walnie przyczynili się do budowy państwa polskiego na uchodźstwie. W każdym większym skupisku Polaków pojawiały się instytucje naukowe i kulturalne, wydawano gazety polskie, publikowano książki w języku ojczystym, tworzono placówki oświatowe dla dzieci i młodzieży. Już w 1939 roku powstał Uniwersytet Polski

Zagranicą w Paryżu, który był pierwowzorem założonego dziesięć lat później w Londynie Polskiego Uniwersytetu na Obczyźnie. W 1942 roku w Nowym Jorku przebywający na emigracji polscy uczeni założyli Polski Instytut Naukowy w Ameryce, który został zaplanowany jako filia Polskiej Akademii Umiejętności istniejącej przed wojną w Krakowie. W 1943 roku, także w Nowym Jorku, powstał Instytut Józefa Piłsudskiego w Ameryce kontynuujący tradycje instytucji o tej samej nazwie, która do wojny działała w Warszawie. W maju 1945 roku powstał w Londynie Instytut Historyczny im. gen. Sikorskiego (później Instytut Polski i Muzeum im. gen. Władysława Sikorskiego) będący ważną placówką kulturalną i naukową utworzoną na cześć zmarłego w katastrofie lotniczej szefa rządu polskiego na uchodźstwie. Wszystkie wymienione instytucje działają do dziś, będąc naturalnymi ambasadorami polskości w Nowym Jorku czy w Londynie.

Jednym z najważniejszych ośrodków kulturalnych i intelektualnych polskiej emigracji stała się ponownie po drugiej wojnie światowej Francja. To właśnie tam, w Maisons-Laffitte pod Paryżem, od 1947 roku funkcjonował założony rok wcześniej w Rzymie Instytut Literacki. Jego nazwa jest o wiele skromniejsza niż faktyczny zasięg zainteresowań i oddziaływania. Poprzez publikacje książek, miesięcznika „Kultura” i kwartalnika „Zeszyty Historyczne” Instytut miał wpływ na kształtowanie postaw i światopoglądu kilku pokoleń Polaków, zarówno tych przebywających na emigracji, jak i tych, którzy mieszkali w Polsce znajdującej się w obozie sowieckim. Wydawnictwa Instytutu docierały bowiem do kraju przemykane różnymi sposobami przez granicę. Najważniejszą postacią związaną z tym ośrodkiem był Jerzy Giedroyc, który redagował wymienione wyżej periodyki i kształtował politykę wydawniczą Instytutu. W przeciwieństwie do wielu innych polskich ośrodków emigracyjnych nie tylko zajmował się on kultywowaniem przeszłości, ale i kształtowaniem teraźniejszości oraz – co może najważniejsze – formułowaniem planów politycznych na przyszłość. To właśnie kierowany przez Giedroycia emigracyjny ośrodek intelektualny szukał dróg porozumienia Polaków z sąsiadami, którymi będzie można kroczyć po upadku systemu komunistycznego, do czego należało się zawnocześnie przygotowywać. Szczególnym zainteresowaniem objęto relacje polsko-rosyjskie, a także – ściśle zresztą z tą kwestią powiązane – stosunki z Litwinami, Białorusinami i Ukraińcami, którzy kiedyś wraz z Polakami mieszkali na rozległych terenach Rzeczypospolitej, a po drugiej wojnie światowej znaleźli się w Związku Sowieckim. Instytut Literacki popierał dążenia naszych

wschodnich sąsiadów do niepodległości, której efektem byłoby powstanie między Polską i Rosją niepodległej Litwy, Białorusi i Ukrainy powiązanych jakąś formą federacji i bliskich związków z Rzeczpospolitą. Giedroyc i blisko z nim współpracujący Juliusz Mieroszewski byli zwolennikami poglądu, że suwerenność Litwy, Białorusi i Ukrainy sprzyja niepodległości Polski, zaś jej brak stanowi dla niej zagrożenie ze strony Rosji. Giedroyc starał się przy tym nie zaniedbywać stosunków z Rosjanami, dbając zwłaszcza o promocję kultury rosyjskiej wśród Polaków i polskiej wśród Rosjan. Idee te towarzyszą polskiej dyplomacji i wielu kręgom polskiej inteligencji do dziś, choć w zderzeniu z rzeczywistością ich realizacja bywa niekiedy bardzo trudna, może wręcz niemożliwa. W niemałym stopniu decydują o tym nie tylko bieżące problemy polityczne, geopolityczne i gospodarcze, ale także dziedzictwo trudnej przeszłości. Instytut Literacki, rzecz jasna już bez Jerzego Giedroycia zmarłego w 2000 roku, również istnieje do chwili obecnej. Jest on jednym z przykładów niezwykle bogatej spuścizny polskiego wychodźstwa po 1939 roku.

Współczesna Rzeczpospolita symbolicznie odwołała się do legalizmu polskich władz na uchodźstwie, akcentując tym samym jego znaczenie. Wyrazem tego było między innymi przekazanie w grudniu 1990 roku insygniów władzy przez ostatniego prezydenta Rzeczypospolitej na uchodźstwie Ryszarda Kaczorowskiego pierwszemu prezydentowi Rzeczypospolitej wybranemu w wolnych i powszechnych wyborach Lechowi Wałęsie. Innym symbolicznym wydarzeniem było zaprzestanie funkcjonowania Rady Narodowej Rzeczypospolitej Polskiej w 1991 roku, a zatem po przeprowadzeniu w Polsce całkowicie wolnych wyborów parlamentarnych. Doświadczenia polityczne, ale także kulturowe, naukowe, a nawet gospodarcze polskiego rządu na uchodźstwie oraz rzesz polskich przymusowych wychodźców po upadku Rzeczypospolitej zaatakowanej przez sąsiadów stanowią wciąż ważne elementy myślenia współczesnych Polaków i równie ważny punkt odniesienia w poszukiwaniu dialogu z sąsiadami, zwłaszcza zaś z Rosjanami, Ukraińcami, Białorusinami i Litwinami. Najczęściej gorzkie historyczne doświadczenia pozwalają przezwyciężyć własne ograniczenia, przełamać nacjonalistyczne bariery dzielące sąsiednie narody, które często wadzą się o tragiczną, ale zarazem przecież wspólną historię.

대한민국 임시정부, 카이로회의에서 자유 독립 보장

한시준(단국대)

1. 머리말

20세기 전반기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세계 각 민족들이 전개한 독립운동은 공통적인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은 세계사적으로 내세울만한 특별한 점이 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그 하나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으로부터 전후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았다는 점도 있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다. 카이로선언은 194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영·중 3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갖고, 회의에서 합의한 것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 “위의 3대국은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미·영·중 3국은 일제와 전쟁을 하고 있던 연합국이었고, 이들이 일제가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카이로 회담에 이어 연합국은 테헤란회담, 알타회담, 포츠담회담 등 모두 4차례 회담을 가졌

다. 이들 회담에서 한국 이외에 독립을 약속한 나라는 없다. 프랑스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드골이 이끄는 프랑스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것이었다.¹⁾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둔 독립운동의 성과였다.

이 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카이로회의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보장받았는가를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언급하려고 한다. 우선 미·영 사이에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한 사실, 장개석이 카이로회의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제의한 사실, 카이로선언에 한국문제가 포함되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후 문제에 대한 대처와 중국에 협조 요청

1)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한 임시정부의 대처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에 연합국 사이에서 戰後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국무부 관리와 외교관·학자·언론인 등이 전후 미국의 대외정책을 마련하고 자문하는 과정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내용의 일부가 1942년 중반부터 《포춘(Fortune)》 《타임(Time)》 《라이프(The Life)》 《아시안 매거진(Asian Magazine)》 등의 잡지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연합국 사이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1943년 3월 27일 영국 외상 이든(Anthony Eden)이 미국을 방문하여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루스벨트가 만주·한국·인도차이나·대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전후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든은 이에 찬성하였다.²⁾ 루스벨트와 이든 사이에 논의된 내용은 신문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4월 27일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태양보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대유럽외교 1).

2)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 역사비평사, 1995, 257쪽.

(The Chicago Sun)》가 “영국 외상과 미국 대통령이 전후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은 독립되기 전에 국제공동관리로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大公報》를 비롯한 중국의 각 신문들도 이를 워싱턴 전보로 보도한 것이다.³⁾

당시 重慶에서 활동하고 있던 임시정부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에 파견되어 있던 중국 언론의 특파원들이 그 소식을 전해왔고, 이러한 내용들이 중국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정부에서는 루스벨트와 이든 사이에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크게 긴장하였다. ‘국제공동관리’란 열강들이 한국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국제신탁통치를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는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이에 대해 크게 네 방향으로 대처하였다. 임시정부 명의로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그 하나다.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외무부장 趙素昂이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⁴⁾ 이는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한 임시정부의 첫 반응이었고, 중경에서 발행되는 《大公報》가 1943년 2월 1일자로 이를 보도하면서 세상에 공포되었다.

외무부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는 임시정부는 국제공동관리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 일제가 패망하는 즉시 한국은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일승 대통령이 여러차례 민족자결의 원칙을 언급한 바 있는데 위임통치나 국제공동관리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한국은 문화·정치·역사 등 모든 면에서 독립국가 건설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을 국제공동관리에 두는 것은 원동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하면서, 한국은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완전한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민족은 지난 30년간 혈전을 전개해 왔던 것처럼 어떠한 형식일지라도 외세의 간섭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 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국제공동관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3)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78호, 1943년 8월 4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2005, 290쪽).

4) 삼균학회, 『素昂先生文集』上, 햇볕사, 1979, 178~179쪽.

둘째는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인들을 동원하여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43년 5월 10일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한국애국부인회·한국청년회 등 각 정당 및 단체, 그리고 중경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중국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한 것이 그것이다.⁵⁾ 재중국자유한인대회는 국제공동관리를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운동을 위한 집회였다.

재중국자유한인대회는 먼저 각 단체의 대표들로 주석단을 구성하고, 대회를 총괄하는 총주석은 임시의정원 의장 洪震을 선임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입법기구였고, 그 수장으로 하여금 대회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홍진의 주관하에 자유한인대회가 진행되었고, 각 단체의 대표들이 나서서 ‘전후 한국은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각 단체 대표들의 연설이 있은 후, 재중국자유한인대회에서는 선언문과 결의안, 그리고 각국 원수들에게 보내는 전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내용이었고, 결의안은 “소위 국제감호나 다른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각 동맹국 원수들에게 “한국민족이 對日作戰의 주요한 力量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원조와 임시정부의 국제적 합법적 지위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각 동맹국 원수들에게 보내는 전문〉을 채택하였다.⁶⁾

셋째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국제공동관리를 반대한다는 전문을 보냈다. 루스벨트에게 전문을 보낸 사실은 임시정부 외무부가 임시의정원에 보고한 외무부 정부보고에 나타나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에 向하여 反對意思를 電報하얏으며 미국대통령으로부터 電文에 관한 答覆(答覆은 제5호 別紙와 如함)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⁷⁾ 임시정부에서 보낸 전문과 루스벨트의 答覆은 남아 있지 않지만, 임시정부는 루스벨트에게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하는 전문을 보냈고, 루스벨트는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중국 정부와 주요 인사들에게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해 줄 것과 이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요청하였다.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임시정부가 찾은 곳은

5) 《독립신문》 1943년 6월 1일자, 「在中國自由韓人大會」.

6) 《독립신문》 1943년 6월 1일, 「在中國自由韓人大會宣言」, 「致各同盟國領袖電文」.

7) 1943년 10월 임시의정원에 보고한 ‘외무부 정부보고’(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6, 2007, 66쪽).

중국정부였다. 외무부장 趙素昂과 申翼熙 등이 중국의 외교부와 국방위원회를 비롯하여, 입법원장 孫科와 행정원장 于右任 등을 방문한 것이 그것이다.⁸⁾ 이들은 중국의 외교부와 각 기관의 대표들을 찾아가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탐문하고, 중국측에서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지와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中韓文化協會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 그러한 활동이었다. 중한문화협회는 1942년 10월 11일 중국과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조직한 일종의 한중 민간우호단체였다.⁹⁾ 중한문화협회에는 중국의 당·정·군을 비롯한 각계의 주요 인사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중한문화협회를 통해 중국측 인사들에게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지와 후원을 요청하였다.

형식은 좌담회였다. 1943년 5월 9일 ‘전후 한국독립문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좌담회에는 임시정부 측에서 趙素昂·金奎植·張建相 등이, 중국측에서는 司徒德·胡秋原·程希孟·謝仁釗 등 80여명이 참가하였다.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중국인사들의 반대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중국측 인사들은 부당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인들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수십년 동안 반일투쟁을 전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남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증거”라거나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하지는 것은 일본에 침략의 기회를 주는 잘못된 것”이라면서,¹⁰⁾ 한국에 국제공동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지였다.

2) 장개석 면담과 중국에 협조 요청

임시정부가 국제공동관리에 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장개석 사이에 회담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회담을 제의한 것은 미국이었다. 루스벨트는 1943년 6월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宋美齡에게 장개석과의 회담을 제의하였고, 송미령이 귀국한 7월부터 시기·장소·참석대상 등 회담을 위한 구체적 교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¹⁾

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 2008, 108쪽. 「政情字第68號」.

9) 石源華, 「中韓文化協會研究」,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下, 民族出版社, 2009, 95쪽.

10) 《독립신문》 1943년 6월 1일자, 「中韓文化協會 戰後韓國獨立問題 座談會」.

11) 趙德天,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70, 2014, 140쪽.

루스벨트와 장개석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임시정부는 장개석에게 면담을 신청하였다. 면담 신청은 중국국민당 조직부장으로 한국담당자인 吳鐵城을 통해 이루어졌다. 1943년 7월 26일 오전 9시 주석 金九, 외무부장 趙素昂, 선전부장 金奎植, 광복군 총사령 李青天, 부사령 金元鳳 등 임시정부 요인 5명이 통역 安原生을 대동하고, 군사위원회 2층 접견실에서 장개석과 만났다. 중국에서는 吳鐵城이 배석하였다.¹²⁾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만나고자 한 데는 목적이 있었다.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해,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임시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즉각 독립을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개석을 만난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면담하고 나눈 담화의 내용을 기록한 「總裁接見韓國領袖談話紀要」라는 문건이 남아 있다.

총재 : 중국혁명의 최후 목적은 조선과 태국의 완전 독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한국혁명 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노력 분투하여 복국운동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김구·조소앙 : 영국과 미국은 조선의 장래 지위에 대해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중국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독립 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 : 영국과 미국 쪽에서는 확실히 그러한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爭執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문에 한국 내부의 精誠統一과 工作表現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국도 力爭할 수 있고, 이 일에 착수하기도 쉬울 것입니다.¹³⁾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만나 요청한 것은 전후 한국의 독립에 대한 문제였다. 미국과 영국이 국제공동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데, 중국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관철시켜 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개석은 비교적 명쾌하게 자

12) 石源華 蔣建忠 編著,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編年史』中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1098쪽.

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2(대중국 외교활동), 238~239쪽 ; 대한매일신보사, 『白凡金九全集』5, 1999, 251~252쪽.

신의 뜻을 밝혔다. 영국과 미국이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독립을 위해 ‘力爭(힘써 싸우겠다)’고 한 것이다.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力爭하겠다고 하면서,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다. “한국혁명 동지들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노력 분투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장개석은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진영에 여러 黨派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의 단결을 당부한 것이었다.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여러 당파가 단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장개석 일기에도 나타나 있다. 장개석의 일기는 현재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데,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난 날자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

조선혁명당 영수 김구 등을 만났다. 그들한테 내부 단결에 힘써 달라고 권하고 격려하였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려 하고 있는 전후 조선 독립 주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다.¹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담화기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장개석은 김구 등을 만나 내부적으로 단결할 것을 권하였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카이로회의 준비와 한국독립 제의

1) 중국의 카이로회의 준비

중국은 카이로회의 장소와 일자가 결정된 후, 카이로회의에서 중국이 제의할 문제들에 대해 사전준비를 하였다. 준비작업은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國防最高委員會秘書廳과 軍事委員會參事室에서 각각 별도로 준비사항을 정리하였다. 두 곳에서 준비한 사

14)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7쪽.

항은 카이로회의에서 중국이 무엇을 제안할 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담겨져 있는데, 두 곳 모두에 ‘한국의 독립문제’가 들어 있다.

우선 국방최고위원회비서청에서 작성한 준비사항에 ‘한국의 독립’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국방최고위원회에서 작성한 준비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戰時軍事合作方案」 「戰時政治合作方案」 「戰後中美經濟合作方案」이 그것이다.¹⁵⁾ 이 중 ‘한국의 독립’에 대한 것은 「戰時政治合作方案」에 들어 있다. 이는 모두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일 첫 번째 항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중국이 한국독립문제를 먼저 제안하는 데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중·미·영·소는 즉시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거나 조선의 전후 독립을 보장하는 선언을 발표한다. 기타 연합국가는 동일한 보조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설명 : 조선의 독립을 즉시 승인하거나 혹은 전후 조선의 독립을 보증하는 것에 관하여.

소련은 현재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은 인도문제에 끼칠 영향으로 인해 이에 대해 틀림없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과 소련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주저할 것이다. 이러한 정형하에서 만일 중국이 단독으로 승인한다면 앞으로 세계인과 더불어 동맹국가로서 분열되는 나쁜 인상을 줄 것이니, 이것이 단독으로 승인하는 단점이다.

이에 반해 일본과 소련의 충돌이 언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소련정부가 하여 우리보다 먼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면 소련이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소련보다 먼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아울러 현재 중경에 있는 조선혁명정부와 관계를 발생시킨다면, 앞으로 소련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 해도 조선정부와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는 불편한 것이 있다, 이것이 단독으로 승인하는 이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조선혁명정부를 승인하는 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할 것이니, 적당한 시기에 먼저 승인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⁶⁾

15)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03~506쪽. 「國防最高委員會秘書廳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準備在開羅會議中提出之戰時軍事合作, 戰時政治合作及戰後中美經濟合作等三種方案」

16)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04~505쪽. 「戰時政治合作方案」.

중·미·영·소가 즉시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도록 하거나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의 방침이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중국이 한국독립문제를 제안할 경우, 소·영·미가 보일 반응과 그것이 중국에 미치는 장단점을 언급하였다.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로 한국의 독립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은 인도문제 때문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과 소련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 또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련이 먼저 한국의 독립을 제안할 경우도 있으니, 장차 한국과의 문제를 고려하면 중국이 먼저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준비사항에도 ‘한국의 독립문제’가 들어가 있다. 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준비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에 대한 反攻戰略 설비와 遠東의 여러 문제에 관한 토론, 둘째는 일본이 무조건투항할 때 접수해야 하는 조항, 셋째는 전후의 중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¹⁷⁾ 이 중 한국의 독립 문제는 세 번째인 ‘일본이 무조건투항할 때 접수해야 하는 조항’에 들어 있다. 이 조항은 모두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7항목에 “承認朝鮮獨立”이라고 한 것이다.

두 실무부서인 국방최고위원회비서청과 군사위원회참사실 외에 장개석도 ‘한국의 독립’을 제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개석의 일기에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장개석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주요 사항, 그 날 해야 할 일, 그 날 한 일을 비롯하여, 금주 해야 할 일과 반성록 등을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 카이로에 도착한 이후의 일기에도 장개석은 루스벨트와 처칠을 만나 제안할 내용들을 적어 놓았는데, “전후 한국의 완전 독립과 자유”라는 조목을 빼놓지 않고 적어 놓았으며, 회담에 임하기 직전인 22일자 일기에도 ‘금주의 주요 예정 업무 요강’에 회담에서 제안할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후 조선의 독립”이었다.¹⁸⁾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카이로회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제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최고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에도, 군사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에도, 모두 한국의 독립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장개석도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안한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17)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498 ~499쪽. 「軍事委員會參事室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中我方應提出之問題草案」,

18)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8쪽.

2) 장개석의 한국독립 제의

카이로회의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영·중 3국 영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3국 정상 중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장개석이었다. 장개석은 11월 21일 오전 7시 5분 카이로 교외 Paynefield공항에 도착하였고, 첸놀트(陳納德) 장군과 미제9항공대 장교들의 영접을 받았다.¹⁹⁾ 그리고 카이로 서남쪽 나일강 서안에 있는 메나(米納, Mena) 호텔에 도착하여 제1호실에 숙소를 정하였다. 이어 21일 오후 3시 반에 처칠이, 다음날인 22일 오전에 루스벨트가 각각 도착하였다.

장개석은 정식회의에 앞서 처칠과 루스벨트를 만났다. 처칠이 도착 직후 장개석에게 만남을 제의하였고, 21일 오후 6시에 장개석은 왕충혜 비서장과 마운트배튼(Lord Louis Mountbatten) 경이 배석한 가운데 만나 약 30분간 처칠과 담화를 나누었다.²⁰⁾ 이어 루스벨트도 만났다. 22일 오후 5시에 장개석이 부인 송미령과 함께 루스벨트를 내방하여 만남을 가졌다. 이는 공식회의가 아니라 개별적인 인사차원의 만남이었다.

카이로회의의 공식회의는 23일에 개최되었다. 23일 오전 11시 루스벨트 숙소에서 루스벨트·처칠·장개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제1차 정식회의였다. 이후 오후부터 군사부문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3국의 실무담당자들 사이에 회담이 이어졌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영·중 3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즉 대일작전에 대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장개석이 한국독립문제를 제의한 것은 11월 23일 저녁이었다. 이 날 저녁 7시 반 장개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루스벨트 숙소를 찾아가 저녁 만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개석과 송미령,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 홉킨스 등 4명이 참석하였고, 시간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이때 장개석은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차지한 만주와 대만 팽호도는 중국에 귀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전후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 梁敬鎔, 『開羅會議』, 81~82쪽.

20)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510쪽.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1. 일본이 차지한 중국의 영토는 중국에 귀환하도록 한다.
2. 태평양상에서 일본이 강점한 島嶼들은 영구히 박탈한다.
3. 일본이 패망한 후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 독립을 획득하도록 한다.²¹⁾

이는 왕충혜가 작성한 카이로회의 일지에 들어 있는 것으로, 장개석과 루스벨트의 회담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기록해 놓은 것이다. 미국측에는 장개석과 루스벨트의 만찬에서 협의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측에는 왕충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고, 장개석도 자신의 일기에서 루스벨트에게 한국독립문제를 제의하였음을 기록해 놓았다.

장개석이 루스벨트에게 한국독립문제를 제의하였다는 것은 장개석의 일기에서도 확인된다. 장개석은 11월 24일자 일기에 “어제 일을 계속 적는다”고 하면서, 23일 밤 루스벨트와 나눈 이야기를 10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적었는데, 그 중 7번째 항목에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조선독립 문제에 대해 나는 특별히 루스벨트의 중시를 끄는 데 힘을 넣었다. 나는 루씨한테 (조선문제에 관한) 나의 주장에 찬동하고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²²⁾

장개석은 11월 23일 루스벨트 숙소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전후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제의하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찾아와 요청하였던 한국의 독립문제를 루스벨트에게 제의한 것이다. 장개석은 루스벨트에게 특별히 한국독립 문제에 대해 찬동하고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루스벨트는 이에 동의하였다.

4.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 포함 과정

1) 카이로선언 작성과 초안

21)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28쪽.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22)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8쪽.

카이로선언의 초안은 장개석과 루스벨트가 11월 23일 저녁에 만나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초안을 작성한 것은 미국측이었다. 장개석과 만찬을 가진 후 루스벨트는 그의 특별보좌관 홉킨스(Harry L. Hopkins)에게 장개석과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루스벨트의 지시를 받은 홉킨스는 초안을 작성하였다.²³⁾

홉킨스가 초안을 작성한 과정은 미국측 기록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홉킨스는 24일 오후 루스벨트 숙소의 조용한 일광욕실로 백악관 문서기록관인 코넬리우스(Albert M. Cornelius)를 불러, 자신이 구술하는 내용을 타이프로 받아 적으라고 하였다. 당시 홉킨스는 아무런 문서나 쪽지를 갖지 않은 채 초안을 부르기 시작했고, 코넬리우스는 이를 타이프로 정리하였다고 한다.²⁴⁾

홉킨스는 코넬리우스가 타이핑한 것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부 잘못된 글자와 내용을 수정하였고, 이를 코넬리우스에게 다시 타이핑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초안이 마련되었다. 홉킨스가 마련한 초안에는 한국문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반역적인 한국인의 노예화를 잊지 않으면서 일본패망이 있을 후 한국을 가능한 가장 빠른 순간에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다.²⁵⁾

홉킨스는 자신이 마련한 초안을 루스벨트에게 제출하였다. 루스벨트는 이를 검토하고 5곳 정도 문장을 빼거나 단어를 바꿨다.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순간에(at the possible earliest momen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적절한 순간(at the proper moment)’으로 고쳤다.²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홉킨스가 작성한 초안이 완성되었다.

홉킨스가 작성한 초안은 먼저 중국측에 전달되었다. 홉킨스가 11월 24일 오후 4시에 초안 1부를 가지고 와 송미령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왕충혜와 더불어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개할 의견이 있으면 다음 날 오전 회담을 할 때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왕충혜는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장개석에게 보여주었다. 장개석은 ‘澎湖島’가 ‘小笠

23)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28쪽. “羅總統遂命霍布金斯根據討論之內容起草公報”.

24)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30~31쪽.

25)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32쪽.

26)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37쪽.

原島'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²⁷⁾ 장개석이 초안을 검토한 사실은 그의 일기에 나타나 있다.

미국 대표가 루 총통이 작성한 회의 성명서 초안을 가지고 와 부인한테 건네며 내 뜻을 물어보라고 했다. 나는 그 안의 모든 사항이 완전히 전날 밤 내가 루 총통한테 제기한 요지 그대로임을 알고 마음속 깊이 루씨가 중국에 대한 성심성의를 자세와 정신을 알 수 있었다.²⁸⁾

장개석은 미국측에서 가지고 온 초안을 검토하였다. 초안을 검토한 장개석은 이에 대해 만족해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개석은 초안에 자신이 전날 저녁 루스벨트와 협의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루스벨트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성심성의를 다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홉킨스가 가지고 온 초안에는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日本對朝鮮人民之奴隸待遇 吾人初未忘懷. 日本潰敗後 於適當時期 吾人決定使朝鮮成爲一自由與獨立之國家.²⁹⁾

일본이 패망한 후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었다. '적당한 시기에'라는 문구였다. 이는 루스벨트가 고친 'at the proper moment'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장개석은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장개석은 23일 저녁 루스벨트에게 제안한 '일본이 패망한 후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 독립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27)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28쪽.

28) 이상철, 「장제스, “전후 한국의 완전독립과 자유” 다짐」,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8~539쪽.

29)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29쪽.

2) 한국독립에 대한 영국의 반대와 중국의 관철

홉킨스가 작성한 초안은 중국에 이어 영국측에도 전달되었다. 영국측에 초안이 전달된 것은 11월 25일 오전이었다. 영국이 중국보다 늦게 초안을 받게 된 것은 영국 외상 이든(Anthony Eden)과 차관 카도간(Alexander Cadogan)이 11월 24일 카이로에 도착한 때문이었다. 영국측은 초안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초안이 중국측에 먼저 전달되었다는 점도 그렇고, 내용도 유럽전쟁 보다 중국에 주는 선물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도 그랬다.

홉킨스로부터 초안을 전달받은 영국은 여러 곳을 수정하였다.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 島嶼들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령했거나 차지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³⁰⁾ 영국은 인도를 비롯하여 남양군도의 여러 섬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1914년 이후 점령했거나 차지한 것으로 고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국이 불만을 가진 것이 있었다.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영국의 불만은 3국 실무자들의 회합에서 폭발하였다. 중국과 영국의 검토를 거친 후, 3국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11월 26일이었다. 이 날 오후 3시 30분 중국의 왕총혜, 영국의 카도간, 그리고 미국에서 주소미국대사 해리만(William A. Harriman)이 참석하였다. 이때 한국의 독립문제를 둘러싸고 파란이 일어났다. 영국측이 한국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영국은 초안에 들어있는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되게 한다(成爲一自由與獨立之國家)”는 내용 대신에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脫離日本之統治)”로 고치자고 하였다.³¹⁾

영국은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한다’는, 즉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대해 반대한 것이다. 영국이 한국의 독립에 대해 반대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카이로회의에서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의도 때문이었지만, 특히 인도문제 때문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다.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경우, 인도를 독립국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측이 수정을 요구하자, 중국의 왕총혜는 강력히 반대하였다. 왕총혜는 “한국은

30)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46 - 49쪽.

31)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30쪽.

일본의 침략으로 병탄되었고, 일본의 대륙정책은 한국을 병탄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단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과 “선언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 및 원동방면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다.³²⁾

왕총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자,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카도간은 “영국은 내각에서 한국독립에 대해 토론한 일이 없다”, 그리고 “소련의 한국독립 문제에 대한 태도와 반감에 대해 의견을 나눈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한국독립에 관한 것을 모두 빼버리자”고 하였다.³³⁾ 영국측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초안에서 한국독립 문제를 완전히 빼버릴 것을 주장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은 한국의 독립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이를 수습한 것은 주 소미국대사 해리만이었다. 해리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견으로 볼 때 한국독립 문제에 대해서 소련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별히 소련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³⁴⁾ 루스벨트의 의견이란, 11월 23일 만찬에서 장개석이 제의한 한국의 자유와 독립에 동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미국측이 중국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초안에 있는 그대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왕총해 카도간 해리만 3인의 실무자들은 협의를 마친 후, 3국 영수들이 회담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당시 3국 정상들은 세 번째 만남을 갖고 있었다. 회의장에는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과 송미령이 참석해 있었다. 3인의 실무자들은 정상들 앞에서 자신들이 협의한 초안의 내용을 낭독하였다. 한국독립 문제에 이르렀을 때, 루스벨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련의 의견을 헤아릴 것이 없다”고 하였고, 낭독을 마치자 3영수는 모두 찬성한다고 하였다.³⁵⁾

32)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32쪽. “王秘書長對此表示不贊成 聲稱朝鮮原由日本侵略併吞 而日本之大陸政策即由吞併朝鮮而開始 僅言「脫離日本之統治」而不言其他 則祇為將來留一重大之問題 殊非得計 宜於此時決定將來自由獨立之地位 並為公報中關於此點 在中國及遠東方面視之 甚為重要”.

33)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32쪽. “賈德幹次長謂關於朝鮮問題 英內閣前此並未討論 英係內閣制 若未經閣議而在此間決定 殊為不宜 且蘇聯對此問題之態度與反感 事前未與接洽 無從知悉 事宜顧及 故如不能照修正案更改 轉不如全段刪去也”.

34)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32쪽. “哈立曼旋謂照羅斯福總統之意見 此一問題似與蘇聯無甚關係 殊不必與蘇聯商量”.

35)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32~533쪽. “其時三領袖及蔣夫人正在會談中 上述商談會議公報草案之各員即前往參加 將最後稿朗讀一次 讀至關於朝鮮一段 羅斯福總統謂蘇聯對於此點 諒無意見 讀畢 三領袖贊成 遂作為定稿”.

이로써 한국독립 문제가 카이로선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다. 3국 영수들이 카이로선언문을 결정한 후, 처칠이 별도로 ‘在相當時期內(in due course)’라는 文句를 삽입한 것이다.³⁶⁾ 영국측은 끝까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in due course’라는 文句를 삽입한 것은 영국과 미국이 원래 주장하였던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한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³⁷⁾

장개석은 카이로회의에서 보여준 처칠의 행태에 대해 커다란 불쾌감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일기에 영국이 한국의 독립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처칠에 대한 인상을 기록해 놓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것을 짐작케 한다.

이번 카이로선언문이 성사된 경과에 대해 기록을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성명문을 마무리하기전 3국 대표가 토론할 때 영국은 조선독립 문제에 대해 견결히 제기하지 않으려 했고, 또 동북 문제에 관해서는 입으로는 일본이 만주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북을 중국에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나 우리 대표가 미국 대표의 찬동과 도움을 쟁취했기에 선언문이 무탈하게 원안대로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처칠은 벌써 나한테 네 번이나 빚을 지고 있다. 이 耆는 영국식 정치가로서 앵글로색슨 민족의 전형적 인물인데 그 사상과 정신, 기백과 인격은 절대 루 총통하고는 同列에서 운운할 수도 없다. 협애하고 교활하고 자사적이며 완고(狹隘 浮滑 自私 頑固)하다는 여덟 자가 딱 들어맞는 놈이다.³⁸⁾

영국이 한국의 독립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장개석의 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카이로회의에서 자국의 실리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한국의 독립문제나 중국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았다.

36) 邵毓麟, 『使韓回憶錄』, 傳記文學出版社, 1980, 54쪽.

37) “決議維持原草案文字. 但英方其後在三國領袖作最後核定「開羅宣言」文稿時, 又由英首相邱吉爾本人, 另行提出插入「在相當時期(in due course)」一句, 而使英美原有將韓國於戰後獨立前先行交付國際托管之議, 重又死灰復燃(邵毓麟, 『使韓回憶錄』, 傳記文學出版社, 1980, 54쪽).

38) 이상철, 「장제스, “전후 한국의 완전독립과 자유” 다짐」,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이러한 처칠의 행태에 대해 장개석은 커다란 불쾌감을 갖고 있었고, 처칠을 루스벨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처칠에 대해 ‘狹隘·浮猾·自私·頑固’의 여덟자로 혹평하고 있다.

11월 26일 3국의 정상들이 카이로선언에 합의하였지만, 이는 곧바로 발표되지 못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카이로회의에 이어 테헤란에서 소련의 스탈린과 회담을 갖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1월 27일 장개석은 중국을 향해 떠났고, 루스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 테헤란으로 떠났다. 루스벨트·처칠·스탈린이 참석한 테헤란회담에서 스탈린은 카이로선언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였다.³⁹⁾ 이로써 카이로선언은 미·영·중·소 4개국 영수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고, 12월 1일 대내외에 발표되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사이에서 한국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카이로회의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합의되어 선언으로 발표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1943년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긴장하였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외상 이튼이 워싱턴에서 만나 전후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에 대해 국제공동관리를 결정하였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국제공동관리’란 열강들이 한국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국제신탁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제공동관리 소식이 전해졌을 때, 임시정부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에 대처하였다. 하나는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외무부장 조소앙으로 하여금 이에 반대하는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이란 성명서를 발표한 것, 그리고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각 단체와 한인들을 모아 재중국자유한인대회를 통해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하나는 중국정부와 중국 인사들에게 국제공동관리에 대해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외무부장 조소앙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의 외교부 국방위원회 등 중

39) 梁敬鎔, 『開羅會議』, 149쪽.

국정부의 각 기관과 입법원장 孫科 행정원장 于右任 등을 찾아다니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고, 중한문화협회의 중국측 인사들과 ‘전후 한국독립문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한 것이다.

임시정부가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장개석과 루스벨트 사이에 회담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임시정부에서는 장개석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은 1943년 7월 26일 이루어졌다.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 등 임시정부 요인들은 장개석에게 미국과 영국이 국제공동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지지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개석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써 싸우겠다(力爭)고 한 것이다.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요청한 것을 실행하고 관철시켰다. 카이로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한국의 독립을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회의에 앞서 국방최고위원회비서청과 군사위원회참사실에서 각각 중국측이 제안할 내용에 대해 사전준비를 하였는데, 두 곳 모두 한국의 독립을 제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장개석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주요 제안사항으로 기록해 놓고 있었다.

카이로회의에서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을 제의하였다. 1943년 11월 23일 장개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루스벨트 숙소에서 만찬을 가졌다. 여기서 일본이 차지한 만주 대만 팽호도 등의 영토는 중국에 반환한다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와 더불어 일제가 패망하면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장개석의 제안에 루스벨트는 동의하였다.

장개석과 루스벨트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카이로선언 초안이 작성되었다. 루스벨트는 그의 보좌관 홉킨스에게 장개석과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홉킨스는 백악관 문서기록관 코넬리우스를 불러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11월 24일 오후 초안을 가지고 와 송미령에게 건넸고, 왕충혜에게 수정할 것이 있으면 다음 날 회담 때 제출해달라고 하였다. 왕충혜는 초안을 번역하여 장개석에게 보여주었다. 장개석은 전날 루스벨트와 협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동의하였다.

11월 25일 영국측에도 초안이 전달되었다. 중국보다 하루 늦게 전달된 것은 영국 외상 이튼과 차관 카도간이 24일 도착한 때문이었다. 영국측은 초안에 불만이 많았다. 초안이 중국측에 먼저 전달되었다는 점, 내용도 유럽전쟁보다 중국에 주는 선물이 너

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이 크게 불만을 가진 것이 있었다.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경우, 식민지인 인도를 독립국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은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11월 26일 3국의 실무자인 중국의 왕총혜, 영국의 카도간, 미국의 주소미국대사 해리만이 모였다. 이때 영국측은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한다’는 내용 대신에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자고 하였다. 영국측의 수정요구에 대해 왕총혜는 강력히 맞섰다. “일본의 대륙정책은 한국을 병탄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선언에 이를(한국의 자유 독립)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 및 원동방면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다.

영국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카도간은 “영국내각에서 한국독립에 대해 토론한 일이 없다” “소련과 한국독립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국독립에 관한 것을 모두 빼버리자”고 하였다. 한국의 독립문제를 두고 중국과 영국이 격렬하게 대립한 것이다. 이를 수습한 것은 해리만이었다. 해리만은 루스벨트와 장개석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소련은 한국독립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별히 소련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발언하였다. 미국측이 동조하면서, 초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3인의 실무자들은 협의를 마친 후, 3국 영수들이 회담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회담장에는 루스벨트·처칠·장개석·송미령이 참석해 있었다. 3인의 실무자들은 이들 앞에서 협의한 초안의 내용을 낭독하였다. 한국독립문제에 이르렀을 때, 루스벨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련의 의견을 헤아릴 것이 없다”고 하였고, 3국 영수는 이에 찬성을 표시하였다. 그렇지만 영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처칠이 별도로 ‘in due course’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이로써 ‘순서를 밟아서’ ‘절차를 거쳐서’라는 뜻을 가진 ‘in due course’라는 조건이 붙은 한국의 독립보장이 카이로선언에 들어가게 되었다.

카이로선언은 소련의 동의를 얻어 발표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카이로회의에 이어 11월 27일부터 테헤란에서 소련의 스탈린과 회담을 가졌다. 테헤란회담이었다.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참석한 회담에서, 스탈린은 카이로선언에 대해 동의하였다. 스탈린의 동의를 얻은 후, 카이로선언을 12월 1일 발표되었다. 한국의 자유 독립은 미·영·중 소가 카이로와 테헤란에서 회담하고 합의한 것이었다.

카이로선언은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으로, 한국독립운동이 거둔 가장 커다란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중국을 움직인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카이로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장개석을 움직여서 얻어낸 성과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1부]

국제적 맥락에서 본 임시정부 활동과 공화주의의 확산

제2세션

공동역사연구 및 공동교과서 편찬을 위한 국제협력

폴란드 공화정의 전통과 역사: 군주제와 공화주의

발표: 모니카 루다시-그로즈카(Monika Ruda -Grodzka, 폴란드문학연구소)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 한국에서의 '민주' · '공화'의 수용과 결합

발표: 윤대원(서울대)

폴란드 공화정의 전통과 역사: 군주제와 공화주의

모니카 루다시-그로즈카(Monika Ruda -Grodzka, 폴란드문학연구소)

왕이 있을 때나 더 낫나? 아니면 없을 때 더 낫나? 마귀은 “마귀가도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라고 말한다. 코르디안에서 제기 된 이 질문은 폴란드의 딜레마를 보여주며, 1918년에 폴란드의 독립과 국가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비로소 해결되었다. 966년에서 1795년까지 폴란드는 군주국이었고, 분할 기간에는 3개의 전제 군주제의 일부가 되었다. 1918년 이후, 다당제 체제에 기초한 현대 감각의 공화국이였다.

수세기 동안 폴란드는 국왕 살해가 없었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찬사를 보냈다. 이것은 최고 권위가 언제나 존중 받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폴란드 시민의 탁월한 덕목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학을 다루는 것인데, 양립 할 수 없는 모순을 두고 있다. 폴란드의 정신력의 두 개의 극: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사랑,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의 기초와 모든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다. 특히 폴란드의 특징으로 이 양면의 가치는 피아스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1924년에, 피우수드스키는 민주주의와 군대를 읽고 이렇게 썼다: “힘과 능력을 위한 사랑과 자유의 퇴색하는 힘 사이에 주저하는 것, 나는 문제를 풀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는 변영기에 고귀한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유형의 군주제였다. 피아스트 왕조에 의해 지배 된 국가는 최후에 국가 군주국이되고, 16세기에 “국가”의 임금이 선출 된 귀족 공화국이였다.

1. J. Słowacki, *코르디안*,
2. 5월 봉기 후 대통령주의 국가로 재탄생 - 독재적 형식
3. 폴란드가 왕이 살해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사죄적인 국가적 신화의 일부였다. 흠이 없는 국가, 즉 “immaculata”라고 표현했다. 왕에 대한 두 번의 공격 (Zygmunt III와 Piekarski와 Stanisław August Poniatowski의 공격)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첫 번째는 광인의, 두 번째는 희극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1922년 이미 새로운 정치 현실 속에서 폴란드의 첫 번째 대통령인 가브리엘 나루토비츠 (Gabriel Narutowicz)는 우파 운동가에 의해 살해되었다. J. Adamus, 폴란드 역사의 군주제와 공화주의, Łódź 1961, p.172; 일괄 저서 J. Piłsudski, 민주주의와 군사, “도르” 1924 권. III / IV, 제 9 권. VIII, 바르샤바 1937, p. 7. 귀족은 민족을 통해 이해되었고, 타 유럽 국가 보다 폴란드에 더 많이 있었다.

공화국인 이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수사학적인 모습인가, 정치적 환상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coincentia oppositorum)인가? 13세기의 작품 - Wincenty Kadłubek의 폴란드 크로니클(Chronicle of Wincenty Kadłubek) - Oratio ad Catylinam Cicero에서 취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한 때 이 폴란드공화국에 미덕이 있었다. 있었다. “피아스트의 유산을 설명하는 저자는 로마 공화국의 전통을 먼저 언급한다. “Rzeczpospolita”라는 단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번역어이다. 사이론(Cicero)의 정의에 따르면, 공화국은 지역 사회의 삶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법률과 특권이 적용되는 모든 시민들의 공통된 일이다. “사르마트”라는 이름을 가진 폴란드 공화주의는 로마의 전통을 언급하는 몇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했다. 그들은 정치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자유와 평등”과 자유의 기초이자 독선에 대한 보호라는 법칙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메커니즘 일뿐만 아니라 개인 이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규칙은 대표자, 즉 왕과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다.

이미 16세기부터 폴란드 공화국은 귀족에 의해 법의 국가, 즉 왕이 아닌 법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의 명령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군주

와 관련이 있었다. “우리와 한 법 아래 있는 왕.” 1594년 스타니스와프 사르니츠키 (Stanisław Sarnicki)가 썼다.

이렇게 이해된 국가—공화국에서 시민의 삶에 대한 비범한 가치에 대한 신념이 나왔다. 이것은 자유 시민 또는 귀족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함)의 공동체인 정당한 국가의 이미지에 반영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공공의 프리즘에 반영되어야 한다.

16세기부터, 국가의 공식 명칭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Rzeczpospolita Obojga Narodów)’이다. 폴란드에서는 카시미르 대왕(1370년)이 사망한 이후로 왕좌가 선출되었다. 야기엘론 사람들은 연공 서열에서 이를 받아 들였다. 그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왕의 권력은 컸다. 군주는 외교 정책을 집행했다. 그는 심지어 의회나 상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쟁을 선언 할 수 있었다. 마지막 야기엘론, 지그문트 아우구스트(Zygmunt August)의 죽음으로 폴란드는 사실상 선거 군주국이 되었고, Pacta Conventa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선거는 공화국의 몰락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폴란드인들에게 권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답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 그것은 국가에 대해 결정할 기회이고,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 관한 것이라며 “국가는 우리”라는 모토로 요약되었다. 왕을 선출하는 것은 모두가 자랑스러워했던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고귀한 힘 중 하나이다. 18세기에 선거는 대외적인 간섭과 대내적인 고관족의 사적 이익을 다루는 정면이었다. 하지만 Konarski와 같은 개혁자들은 Sejm만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Sejm은 우리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화당 군주제의 역설에 이른다. 왕이 필요한 요소였을뿐만 아니라 국가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크르바비취(Krwawicz)는 정치 이론에서 채택된 혼합 정부 모델(rząd mieszany)은 민주주의, 귀족 정치 및 군주제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왕의 존재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왕 없이는 공화국의 존재, 그리고 자유가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남긴다. 동시에 위협과 불안

정의 요인인 두 번째 비전인-왕이 있다. 그는 폴란드 공화국과 시민의 자유에 대해 외 부적이고 위협적인 존재였다. 어떤 의미에서, 공화국과 왕은 협정으로 묶인 두 개의 외 세로 취급 받았다. 당연히 국가의 군주 역할에 대한 문제는 개혁주의자들의 마음을 혼 란스럽게 했다. 4년 상원통치 기간에 왕위 계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여 군주는 강력한 족의 힘에 맞서기 위해 논쟁을 벌이며, 국가를 지배하려는 열망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왕 암살에 유의해야하며 통치자는 그들을 지켜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에서 공화당 군주제가 존재한다는 다소 특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 우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 자유에 관하여, 군주국과 폴란드 공화국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범주를 놓칠 수 없다. 이것은 철저히 정치적인 범주이지 만, 폴란드 신화, 폴란드의 애국심 및 정체성의 토대 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이 다. 정치 영역에서의 자유가 없으면 개별 영역에서 자유가 실현 될 수 없으며, 국가가 자유라면 시민은 자유라고 믿는다. 자유는 가장 소중한 재화로 간주되었고, ‘황금빛, 달콤하고 거룩했으며, 하늘의 선물이었다.’라고 부여받은 별칭이 말한다.

폴란드 공화당은 타르고비찬 중 하나였지만, 4년 상원 개혁주의자를 포함했다. Michał Wielhorski, Stanisław Konarski, Hugo Kołłątaj, Stanisław Staszic의 개혁자들은 공 화당으로 간주되었으며 공화당은 Montesquieu와 Rousseau의 공화정 이상에 가깝다.

1 Krwawicz, j.w, s.108.

1 Krwawicz, j.w s. 116.

1 Krwawicz, j.w, s.199.

1 Krwawicz, j.w, s. 209-219.

1 Por. D. Gawin, 자유의 화려함과 쓴맛, 크라쿠프 2006, s. 228.

그들은 현대 법의 개념을 보호 차원으로 받아 들였고, 동시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 유의 한계를 사회를 창조 할 때 받아 들였다.

자유는 이론일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가장 큰 열정이었고, 해방과 파괴의 힘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은 폭동을 동원하였으나, 자유는 자유주의 거부권을 의미했으며, 이는 폴란드 국가를 재앙과 분열로 이끌었다. 자유는 연맹, 즉 왕의 명령에 거역 가능한 것이며, 극단적인 형태는 타고비차의에 대한 국가적 배신이었다. 안나 그제시코비악-크르바비취(Anna Grześkowiak-Krwawicz)는 “이러한 특정 이해 관계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경우 음행, 장난기, 무정부 상태와 같은 범주가 정의되었고, 이에 자유는 잘 못 이해된, 거짓되고, 공동선을 파괴하는 자유로 이해되었다.” 자유는 이론 일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가장 큰 열정이었고 해방과 파괴의 힘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은 폭동에 동원되었지만 자유는 자유주의 거부권을 의미했으며,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존재 초기(실제로 이전)부터 좋은, 진정한, 적당한 권리와 과도한 자유, 그리고 장난기와 임의의 자유를 명확하게 구별했다. 오파린스키(Opaliński)와 다른 작가에게는 18세기에 저술한 쾌활함은 위협적이고, 더구나 자유의 대한 부인이었다.

통치자가 절대 정부나 이웃 국가를 도입하여 국가의 독립을 침해했을 수도 있다. 쾌활함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개인의 자유의 평등한 권리 준수만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유를 부인했다. 한편 쾌활함이란 기존 법에 대한 불복종과 다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부 시민들의 과도한 자유를 의미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무정부 스스로의 전제 정치 상태와 외국의 간섭으로 이해되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아서, 폴란드의 무정부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사안에 복종하고 공동선의 이름으로 행동 할 수있는 유토피아를 가정한 체제로서의 공화국에 대한 생각의 결실이었다. 그것의 기초는 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이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미덕(virtus)이 정치의 주요 도구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표현된 항의는 공화국의 존재와 그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온 나라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었고, 국가를 책임졌습니다. 현실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 질서를 고려했다"는 "사적 사회"가 창안되었습니다.

우리 시인들, 민주주의 지지자였던 아담 비츠키에비취(Aadam Mickiewicz), 율리우

시 스워바츠키(Juliusz Słowack)도 자유주의 거부권(libenum veto)을 옹호했으며 재미있는 점은, 그것을 정치적 성향이 아닌 윤리적 잠재성으로 보았다. 자유주의 거부권을 사용했던 첫 번째 인물은 우피타의 라지비우(Radziwił) 의뢰인인 시칠린스키(Siciński) 의원이었다. 1652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국회를 파기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1926년의 5월 쿠데타를 옛 법의 유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폴란드의 반대자는 자유와 동일시되었다.

1 Krwawicz, j.w, s. 104

1 Krwawicz, s. 217

1 J. Rawls, 정의 이론, 옮긴이 M. Panufnik, J. Pasek, A. Romaniuk, Warszawa 1994, s. 706

오늘날까지 모든 형태의 야당은 사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로맨티시즘에서 요아킴 레웰렐(Joachim Lelewel)은 공화주의적 사상의 주요 보호자이자 전파자였다. 공동체 권력에 관한 그의 이론은 계몽주의 이론과 국가 관련 현대의 반영하는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는 폴란드의 선사 시대 조상이 지역 사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공동체의 무성한 공적생활은 시민 정신, 법 앞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숭배로 구분되었다. 이전의 폴란드/슬라브 족은 토지의 소유권과, 폴란드 땅에 서구에서 나타났던 봉건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기독교와 더불어 왕을 물려받는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학자의 공화주의에 대한 보편적 전형은 그리스의 폴리스였고, 레레벨(Lelewel)에 의하면 이는 폴란드 국가의 민족법 (“법적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미래에도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폴란드는 평생 동안 왕의 직함을 얻은 공화국이었다. 형제애와 평등은 모든 왕조와 타이틀을 금지했다. 모든 선거인은 국가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후보자였다. 백성의 권세는 모든 권력에서 나타났다. 독립적이고 대표적인 사법부, 대표적인 행정부는 국가의 결과였다. 그들은 입법 의지를 준수했다. 법적으로 토지를 되찾으려는 폴란드 사람들은 법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독립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그리고 공화주의 원칙으로 탐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아야 할 부분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선하고 새로운 생각과 소망이 아닌, 그들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것을 옛날의 법으로 요청을 한다.

추후 역사 학자들에 의해 레엘과 그의 학생들의 역사서에 미확인 된 초기 슬라브 지 역사회의 권력 그것은 과거의 유토피아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았고, 현재의 정치 논쟁에 참여했으며,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레엘 웰이 접근한 지역사회에 근거한 이론은 서구의 군주적 전통에 대한 폴란드의 차이점과 동양에 있는 러시아의 차르(car)에 대한 폭군 역사의 차이를(러시아는 노르만 영향으로 왜곡된 슬라브주의를 상징 함)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 투쟁에서이 공동체의 적시성과이 개념의 엄함은 “농민 문제(kwestii włościańskiej)”로 요약된다. “농민의 폐지와 폴란드의 헌법 국가의 시민권 상실”로 구성되는 역사적 정치 및 사회적 불의의 해법이다. 국민/공동체의 해방과 계급을 국가에 다시 포함시켜 시민권을 보장 한 것은 빌뉴스 (Wilno)의 정치 및 사회 잡지에서 르와웰 (Lelewel)을 바르샤바와 파리를 거쳐 브뤼셀로 갈 때까지 걸렸다.

농민 문제의 출현은 공화주의 사상 발전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유럽의 근대화시기는 병합 된 폴란드 영토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현대화 시대는 침략 아래 있는 폴란드에도 찾아왔다. 장래에 폴란드 체제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상은 무시 하지 못할 일이다. 지금까지 해결책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고귀한 국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후반기 19세기에 국가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사회 계급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농부와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는 반란이 있다. 1830년 11월 봉기 때 처음으로 공화국의 정의를 재구성하고 소작농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돌파구는 1월 봉기다. 1863년 봉기에서 패배한 후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고, 증언으로는 대중 운동, 사회, 국가, 민족적인 탄생이었다. 입증 된. 우크라이나인과 리투아니아인의 소수 민족에 대한 국가 의식은 이와 함께 깊어졌다.

정치 사상의 새로운 단계는 근대화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성찰의 주제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여성 및 유대인 관련 문

제가 포함되었다. 신흥 정당 : PPS와 민주주의자들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있으며 폴란드의 정치 체제가 공화국으로만 보였으나, 많은 운동가들은 군주국으로의 귀환을 최소한 일탈로 여겼다. 게다가, 1918년 폴란드의 여성들이 선거권을 갖게되었다. 이것은 1919년 여성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였고, Lublin에서 임명된 다실스키(Daszyński) 정부 덕분이었다.

종종 간과되는 폴란드 공화주의는 유토피아, 신화 일뿐만 아니라 여성, 농민, 노동자, 유대인, 마을 사람들 및 기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시민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억압적인 시스템이었다. 자유와 정의에 대한 꿈은 현실에 거의 뿌리를 짓지 못했고, 종종 정치적 현실을 포함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환상적인 영역으로 옮겨갔다. 폴란드 공화당이 자신의 꼬리를 삼키고 있는 뱀으로 밝혀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Tradycje republikańskie w Polsce.

Monarchia i republika

Monika Ruda -Grodzka (Instytut Bada Literackich, PAN, Warszawa)

Czy lepiej, kiedy jest król, czy kiedy go nie ma? Szatan odpowiada, że tej zagadki nawet „diabeł rozwiązać nie umie”¹⁾. Pytanie to postawione w Kordianie pokazuje dylematy Polaków, które zostały rozwiązane dopiero w 1918 r., wraz z odzyskaniem niepodległości i ukonstytuowaniem państwa – Rzeczypospolitej Polskiej. Od 966 do 1795 r. Polska była monarchią, w okresie rozbiorów stała się częścią trzech monarchii absolutystycznych. Od 1918 r. stanowiła republikę w sensie nowoczesnym, opierała się na systemie wielopartyjnym²⁾.

Przez wieki podkreślano i chwalono się, że Polska jest krajem, w którym nigdy nie dokonano królobójstwa³⁾. Czy to oznacza, że zawsze szanowano władzę zwierzchnią, czy raczej mamy do czynienia z pewną retoryką polityczną, podkreślającą niezwykle cnoty polskich obywateli, za którą jednakże skrywają się sprzeczności nie do pogodzenia – dwa

1) J. Słowacki, Kordian,

2) Po zamachu majowym stała się państwem prezydenckim – o znamionach autokratycznych.

3) Wyobrażenie, że Polska jest krajem, w którym nie rodzą się królobójcy, było częścią apologetycznego mitu narodowego, przedstawiającego ją niemal jako państwo bez skazy – „immaculata”. Dwa zamachy na królów (Piekarskiego na Zygmunta III i potem na Stanisława Augusta Poniatowskiego) trudno traktować poważnie. Pierwszy był dziełem szaleńca, drugi – farszą. Ale jednak już w 1922 roku, w nowej rzeczywistości politycznej, zostaje zabity przez prawicowego działacza pierwszy prezydent RP, Gabriel Narutowicz. Można się zastanawiać, do jakiego stopnia mechanizmy nowej republiki umożliwiły zabicie głowy państwa.

bieguny polskiej mentalności: z jednej strony umiłowanie wolności, z drugiej postawa oporu i nieposłuszeństwa wobec każdej władzy. Tę ambiwalencję, jako cechę szczególnie polską, odnajdujemy w naszej historii, zaczynając od czasów piastowskich, aż do obecnych. W 1924 r. Piłsudski w odczycie *Demokracja a wojsko* pisał: „wahając się między miłością do siły i mocy a między mdlejącą siłą swobody, problemu nie rozstrzygam”⁴⁾.

Polska była szczególnym typem monarchii, w okresie jej największego rozkwitu opartej na systemie demokracji szlacheckiej. Państwo rządzone przez dynastię Piastów z czasem stało się monarchią stanową, a w XVI w. Rzeczpospolitą szlachecką z wybieralnym z woli „narodu”⁵⁾ królem.

Co to za królestwo, które jest republiką? Czy to rodzaj figury retorycznej, fantazji politycznej, czy może *coincidentia oppositorum*. Trzynastowieczne dzieło – *Kronika polska* Wincentego Kadłubka – zaczyna się zdaniem wziętym z *Oratio ad Catylinam* Cycerona: „była, była ongi cnota w tej rzeczpospolitej”⁶⁾. Autor, opisując dziedzictwo Piastów, odwołuje się najpierw do tradycji republiki rzymskiej. Słowo „Rzeczpospolita” jest tłumaczeniem łacińskiego „*res publica*”. Według definicji Cycerona republika to wspólna sprawa ogółu obywateli objętych prawem i przywilejami, wynikającymi z życia we wspólnocie. Republikanizm polski, który nosił też nazwę „sarmatyzmu”, opierał się na kilku zasadach odwołujących się do tradycji rzymskiej. Należały do nich: wolność polityczna, równość wobec prawa, co miała odzwierciedlać formuła „równi w wolności”, następnie prawo jako fundament wolności i ochrony przed samowolą. Prawo miało być mechanizmem ochrony wolności indywidualnej, ale także bronić wspólnego dobra przed zagrożeniem ze strony prywatnych interesów z nim sprzecznych. Ostatnią zasadą była legitymizowana władza reprezentantów, czyli króla i sejmu.

Już od XVI w. Rzeczpospolita była postrzegana przez szlachtę jako państwo prawa, a

4) Za J. Adamus, *Monarchizm i republikanizm w syntezie dziejów Polski*, Łódź 1961, s. 172; J. Piłsudski, *Demokracja a wojsko*, „*Droga*” 1924, t. III/IV, nr 9, w: *Pisma zbiorowe*, t. VIII, Warszawa 1937, s. 7.

5) Przez naród rozumiano szlachtę, była ona w Rzeczypospolitej bardziej liczna niż w innych państwach europejskich.

6) W. Kadłubek, *Kronika Polska*, przeł. B. Kurbis, Wrocław 2003, s. 7.

więc takie, w którym prawo, a nie król, jest suwerenem. Jego nakazami byli związani nie tylko obywatele, ale przede wszystkim monarcha. „Król pod jednym prawem z nami – pisał w 1594 r. Stanisław Sarnicki⁷⁾.

Z tak pojmowanego państwa-republiki wyrastało przekonanie o niezwyklej wartości życia obywatelskiego. Miało się to przejawiać w wyobrażeniu sprawiedliwego państwa, będącego wspólnotą wolnych obywateli, czyli szlachty (która stanowiła 6-7% całego społeczeństwa), oraz w prymacie dobra publicznego jako przestrzeni warunkującej wolność jednostkową.

Od XVI w. oficjalna nazwa państwa brzmiała: Rzeczpospolita Obojga Narodów. W Polsce tron był elekcyjny już od śmierci Kazimierza Wielkiego (1370). Jagiellonowie obejmowali go w linii starszeństwa. Aż do końca ich epoki władza królewska była duża. Monarcha prowadził politykę zagraniczną. Wolno mu było nawet wojnę wypowiedzieć, nie pytając o zdanie sejmu ani senatu⁸⁾. Wraz ze śmiercią ostatniego Jagiellona, Zygmunta Augusta, Polska stała się monarchią elekcyjną de facto, a pacta conventa miały zabezpieczać przed nadużyciami władzy i zabezpieczać prawa obywateli. Ale w krótkim czasie elekcja stała się jedną z przyczyn upadku republiki.

Nasuwa się pytanie, czym dla Polaków była władza. Odpowiedź jest stosunkowa prosta: była możliwością decydowania o państwie, ale przede wszystkim o sobie, streszczało się to w dewizie „państwo to my”⁹⁾. Władza wyboru króla to jedno z najważniejszych szlacheckich uprawnień obywateli, z której wszyscy byli dumni, chociaż w XVIII w. elekcja była od dawna fasadą kryjącą obcą ingerencję i prywatne interesy wielkich rodów magnackich. Nic dziwnego, że reformatorzy, tacy jak Konarski, uważali, że tylko sejm gwarantuje wolność: „Sejm najwyższy nasz rządcą”¹⁰⁾.

Tu dochodzimy do paradoksu monarchii republikańskiej. Uważano bowiem, że król jest koniecznym elementem, ale i największym zagrożeniem dla państwa. Krwawicz pisze,

7) Krwawicz, j.w., s. 88.

8) P. Jasienica, Polska anarchia, Warszawa 1988, s. 123-124.

9) Krwawicz, j.w., s.108.

10) Krwawicz, j.w s. 116.

że w modelu rządu mieszanego, przyjętym w polskiej teorii politycznej, a złożonym z trzech elementów: demokratycznego, arystokratycznego i monarchicznego, istnienie króla było koniecznością. Bez niego istnienie republiki, a tym samym wolności, stałoby pod znakiem zapytania. Jednocześnie funkcjonowała druga wizja – króla, który stanowi czynnik zagrożenia i destabilizacji. Był wobec Rzeczypospolitej i wolności jej obywateli czymś zewnętrznym i niebezpiecznym. W pewnym sensie traktowano republikę i króla jako dwie obce siły, partnerów związanych kontraktem¹¹⁾.

Nic dziwnego, że sprawa roli monarchy w państwie zaprzętała głowy reformatorów. Podczas Sejmu Czteroletniego, w dyskusjach o konieczności wprowadzenia sukcesji tronu pojawił się argument, że monarcha stanowi przeciwwagę potęgi możnych rodów i dzięki temu może skutecznie hamować ich dążenia do dominacji w państwie: „obywatele powinni strzec się królewskich zamachów na wolność, a władca powinien strzec ich, by sami nie naruszali swej wolności”¹²⁾.

Żeby zrozumieć dość niezwykły fenomen istnienia monarchii republikańskiej w Polsce, trzeba pamiętać o niezwykle jej ważnym konstytutywnym elemencie. O wolności. Jeżeli mówimy o monarchii i republice polskiej, nie możemy tracić z oczu tej kategorii. Jest to kategoria na wskroś polityczna, ale nie tylko, to fundament polskich mitów, polskiego patriotyzmu i tożsamości. I przedmiot troski jej obywateli. Uważano, że bez wolności w sferze politycznej nie może być realizowana wolność w sferze indywidualnej, jeśli kraj jest wolny, to wolni są obywatele¹³⁾. Wolność była uważana za dobro najcenniejsze, świadczą o tym epitety, jakimi ją obdarzano; bywała złota, słodka, święta, była darem niebios.

Polski republikanizm miał wśród swoich szeregów targowiczán, ale także reformatorów Sejmu Czteroletniego, za republikanów uważali się Michał Wielhorski, Stanisław Konarski, Hugo Kołłątaj, Stanisław Staszic, którym bliskie były ideały republikańskie Monteskiusza i Rousseau. Przyjmowali oni nowoczesną koncepcję prawa jako ochrony, a zarazem granicy wolności naturalnej człowieka, gdy tworzy on

11) Krwawicz, j.w., s.199.

12) Krwawicz, j.w., s. 209-219.

13) Por. D. Gawin, *Blask i gorycz wolności*, Kraków 2006, s. 228.

społeczeństwo¹⁴⁾.

Wolność była nie tylko teorią, ale największą namiętnością Polaków, miała zarówno siłę wyzwalającą, jak i niszczącą. Pragnienie wolności mobilizowało do powstań, ale wolność oznaczała też liberum veto, które doprowadziło państwo polskie do katastrofy i rozbiorów. Wolność to były konfederacje, czyli możliwość wypowiedzenia posłuszeństwa królowi, a jego skrajną formą była zdrada sprawy narodowej, czyli Targowica. Anna Grześkowiak-Krwawicz pisze: „Działanie w imię partykularnych interesów określały kategorie takie, jak nierząd, swawola, anarchia, przez które rozumiano wolność źle pojętą, fałszywą i niszczącą dobro wspólne. Od początku istnienia Rzeczypospolitej Obojga Narodów (a właściwie już wcześniej) wyraźnie rozróżniano wolność dobrą, prawdziwą, umiarkowaną prawami i wolność nadmierną, fałszywą, wreszcie swawolę czy samowolę. Dla Opalińskiego i innych autorów piszących w XVIII swawola była zagrożeniem, a nawet wręcz zaprzeczeniem wolności. Mógł to wykorzystać władca, wprowadzając rządy absolutne, lub sąsiedzi, naruszając independencję kraju. Swawola zaprzeczała wolności, gdyż wolność indywidualną zapewniało tylko jednakowe przestrzeganie praw przez wszystkich członków społeczności. Tymczasem swawola oznaczała właśnie nieposłuszeństwo ustanowionemu prawu, a tym samym nadmierną wolność części obywateli kosztem ograniczanie swobód pozostałych”¹⁵⁾. Formą najbardziej skrajną była anarchia rozumiana jako własny despotyzm i obca ingerencja.

Patrząc z perspektywy współczesnej, polska anarchia była owocem myślenia o republice jako systemie, który w rzeczywistości zakładał utopijnie, że wszyscy będą podporządkowywać się wspólnej sprawie i będą działać w imię wspólnego dobra. Jego fundamenty opierały się nie na prawie, ale na wierze w ideały etyczne, cnota (virtus) miała być głównym narzędziem polityki. Protest wyrażony w formie: „nie pozwalam” miał być gwarantem istnienia republiki i jego zabezpieczeniem. Osoba, która wypowiadała te słowa, miała to czynić w imieniu całego narodu, na niej spoczywała odpowiedzialność za państwo. W rzeczywistości wytworzyło się „społeczeństwo prywatne”, w którym „każdy uważał

14) Krwawicz, j.w., s. 104

15) Krwawicz, s. 217

porządek społeczny wyłącznie za środek do osiągnięcia własnych celów”¹⁶⁾.

Nasi poeci, którzy byli demokratami, Adam Mickiewicz, Juliusz Słowacki, byli również obrońcami liberum veto, i co ciekawe, oni również widzieli w nim potencjał etyczny, a nie polityczny. Uważa się, że pierwszym, który zrobił użytek z liberum veto, był poseł Siciński z Upity, klient Radziwiłłów, który w 1652 r. zerwał sejm dla własnych celów. Możemy też spojrzeć na zamach majowy w 1926 r. jako na relikwyt dawnego prawa. Do tej pory w Polsce sprzeciw utożsamia się w wolnością. Do dziś każda forma opozycji cieszy się ogromną popularnością w społeczeństwie.

W romantyzmie głównym obrońcą i propagatorem idei republikańskich był Joachim Lelewel. Jego teoria gminowładztwa jest ogniwem przejściowym między oświeceniowymi teoriami a współczesną refleksją na temat państwa. Utrzymywał on, że przedhistoryczni przodkowie Polaków skupiali się w gminy, a bujne życie publiczne tych wspólnot wyróżniało się duchem obywatelskim, kultem wolności i równości wobec prawa. Dawni Polacy/Słowianie nie znali zatem własności ziemi i feudalizmu, który na ziemiach polskich pojawił się z Zachodu, wraz z chrześcijaństwem, nie uznawali też królów jako dziedzicznej władzy dynastycznej. Republikanizm, którego ucieleśnieniem i archetypem dla tego historyka dziejów powszechnych było greckie polis, należy zdaniem Lelewela do niezbywalnych praw („prawności”) narodu polskiego, który nie może odstąpić od swoich republikańskich zasad również w przyszłości.

Była Polska Rzeczpospolitą, która sobie obierała dożywotniego naczelnika z tytułem króla, a każdy elektor był razem kandydatem, bez różnicy, ni z urzędu, ni z dodatków: braterstwo i równość wzbronila wszelkich dynastii i tytułów. Wszechwładztwo ludu objawiało się we wszystkich gałęziach władzy; sądownictwo niepodległe i reprezentacyjne, administracja reprezentacyjna wynikały z narodu; dopełniały woli prawodawczej. To jest prawność Polski i Polaków, którzy jeśli się prawnie o odzyskanie swej ziemi ubijają, jeśli się prawnie o swój byt i niepodległość upominają, również prawnie i swych republikańskich zasad poszukiwać powinni, bo ta im puścizna po przodkach zostawiona jest do odzyskania.

16) J. Rawls, Teoria sprawiedliwości, przeł. M. Panufnik, J. Pasek, A. Romaniuk, Warszawa 1994, s. 706

Nie świeżym i nowotnym pomysłem i pożądaniem o to wołają, ale dawnym odwiecznym prawem, które się im w całości należy¹⁷⁾.

Pierwotne gminowładztwo słowiańskie, niepotwierdzone przez późniejszych historyków, w historiografii Lelewela i jego uczniów¹⁸⁾ nie odgrywało tylko roli utopii z przeszłości, służyło bowiem aktualnym polemikom politycznym, było również projektem na przyszłość. Przede wszystkim jednak teoria gminowładcza doskonale wypowiedała, w ujęciu Lelewela, różnicę historyczną Polski wobec monarchicznych tradycji Zachodu oraz tyranii carów Rosji na Wschodzie (Rosji symbolizującej Słowiańszczyznę wynaturzoną przez wpływy normańskie).

Aktualność gminowładztwa i uwikłanie tej koncepcji w walkę polityczną w tym okresie najczęściej jednak sprowadzało się do „kwestii włościańskiej”: zniesienia pańszczyzny i rozwiązania historycznej niesprawiedliwości o charakterze polityczno-społecznym, polegającej na „straconym obywatelstwie stanu kmiecego w Polsce”. Wyzwolenie ludu/gminu i ponowne włączenie tej klasy do narodu, obdarzenie jej pełnią praw obywatelskich zajmował Lelewela w pismach politycznych i społecznych od Wilna, przez Warszawę i Paryż, po Brukselę.

Pojawienie się problematyki włościańskiej zwiastowało nową epokę i nowy etap w rozwoju myśli republikańskiej. Okres modernizacji w Europie nie mógł ominąć ziem polskich będących pod zaborami. Pojawiają się nowe zjawiska, które nie pozostawiają obojętnymi dla tych, którzy chcą reformować polski ustrój w przyszłości. Do tej pory przedmiotem rozważań był lud utożsamiany z narodem szlacheckim. W II poł. XIX wieku coraz częściej mówi się o nowych klasach społecznych, które przynależą także do kategorii narodu, a są to chłopci i robotnicy. Przełomem w pojmowaniu tych kwestii były powstania. W czasie powstania listopadowego w 1830 r. po raz pierwszy pojawia się próba przeformułowania definicji republiki i włączenia w nią chłopów. Przełomem było powstanie styczniowe. Od klęski powstania 1863 r. zaczyna się początek zmian społecznych, których

17) J. Lelewel, Prawność narodu polskiego, cyt. za: D. Zawadzka, Lelewel prasowy. Artykuły Joachima Lelewela w pismach periodycznych, Warszawa 2018, s. 321.

18) F. Bronowski, Idea gminowładztwa w polskiej historiografii. [Geneza i formowanie się syntezy republikańskiej J. Lelewela], Łódź 1969.

świadectwem są narodziny ruchów emancypacyjnych, socjalistycznych, narodowych, ludowych. Wraz z nimi pogłębiła się świadomość narodowa mniejszości etnicznych Ukraińców, Litwinów.

Nowy etap w myśli politycznej nie mógł pomijać już zmian modernizacyjnych. Przedmiotem rozważań o przyszłości państwa stały się nie tylko tożsamość narodowa, ale sprawa socjalna, kwestia kobieca i żydowska. Powstające partie polityczne: PPS i endecja, mające diametralnie różne programy, widziały ustrój Polski wyłącznie jako republikę, powrót do monarchii dla wielu działaczy wydawał się co najwyżej aberracją. Co więcej w 1918 r. w Polsce kobiety otrzymały prawa wyborcze, stało się to za sprawą rządu Daszyńskiego powołanego w Lublinie, po raz pierwszy kobiety wzięły udział w wyborach w 1919 r.

Polski republikanizm – co często się pomija – był nie tylko utopią, mitem, ale także systemem opresyjnym, nieuwzględniającym praw niemal wszystkich obywateli, poczynając od kobiet, chłopów, robotników, Żydów, mieszczan i pozostałych. Marzenia o wolności i sprawiedliwym państwie rzadko kiedy były zakorzenione w rzeczywistości, często przenosiły się w sferę subiektywną, fantazmatyczną, nieliczącą się z realiami politycznymi. Nic dziwnego, że polski republikanizm okazał się wężem, polykającym własny ogon.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한국에서의 ‘민주’·‘공화’의 수용과 결합

윤대원(서울대)

머리말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하여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정체를 변혁한 것은, 1899년 고종이 ‘대한국 국제’를 통해 전제군주제를 천명한 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1910년 8월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 직후 국내외에서는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과 함께 정체는 공화국으로 모아졌다. 이런 흐름이 1919년 대내외적으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한 3.1운동을 전후하여 임시정부 수립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결실이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때까지 서구는 물론 임시정부 수립 주체들이 참고했을 법한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 이후 제정된 여러 헌법 어디에도 국체 내지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명문화한 예가 없었다. 예컨대 서구의 경우는 1920년 2월 체포슬로바키아헌법, 그해 10월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 중국은 1925년 제정된 ‘중화민국헌법초안’에서 민주공화국을 찾아볼 수 있다. ‘민주’ 내지 ‘공화’는 1876년 개항 이후 수용된 서구적 개념이다. 여기서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적 개념인 ‘공화’, ‘민주’의 수용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

타난 인식의 특징 그리고 그것이 한말 근대국민국가가 수립을 위한 정체변혁 과정에서 ‘공화’라는 용어에 ‘민주’라는 수식어가 결합하여 ‘민주공화’로 안착한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민주’·‘공화’의 초기 수용과 특징

한국에 서구적 개념인 ‘민주’·‘공화’라는 용어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던 민중묵이 견문서에서 세계 각국의 정체로 군민공치(君民共治), 입군독재(立君獨裁), 귀족정치와 함께 공화정치를 언급한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최초의 언급이다. 이후 적극적인 문호개방과 서구화를 추구한 개화파들이 자신들의 개화정책을 계몽·선전하고 지지 세력을 넓힐 목적으로 1883년 박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하면서 ‘민주’·‘공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예컨대 《한성순보》는 〈歐美立憲政體論〉이란 기사에서 구미 여러 나라의 정체로서 ‘군민동치’와 ‘합중공화’로 나누고 모두 ‘입헌정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군주 및 민주를 막론하고 헌법을 통한 삼권 분립이 제일 이익이라고 하였다.¹⁾ 또한 〈民主主義와各國의章程 및 公議堂에 대한 解釋〉이란 기사에서는 서양 각국의 여러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된” “근본 원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주권자에 의한 헌법 제정과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²⁾ 서구의 정치제도를 소개한 《한성순보》의 기사는 외국 신문의 기사나 백과사전 등을 주로 번역한 것으로 적극적인 수용보다는 소개에 집중되었다. 다만 번역자들은 간혹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이들 제도를 실행하려면 인민들이 문명화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즉각적인 적용이나 실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개화파들이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국체 내지 정체 변혁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 예컨대 1888년 박영효는 고종에게 올린 〈건백서〉에서 군

1) 〈歐美立憲政體論〉, 《漢城旬報》, 1884.1.30

2) 〈民主主義와各國의章程 및 公議堂에 대한 解釋〉, 《漢城旬報》, 1884.2.8

권을 제한하고 민권을 신장시켜야 백성과 나라가 모두 안정되고 부강할 수 있다며 ‘군민공치’ 즉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³⁾ 또한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각국의 정치제도를 ‘군주가 천단하는 정체’, ‘군주가 명령하는 정체(압제정체)’, ‘귀족이 주장하는 정체’, ‘군민이 공치하는 정체(군민공치)’, ‘국민이 공화하는 정체(합중정체)’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 가운데 영국식 정체인 군민공치를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했다. 그러나 유길준은 조선과 같이 “인민의 지식이 부족한 나라는 갑자기 인민에게 국정참여의 권리를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며 군민공치제로 나아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⁴⁾ 한편 ‘구본신참’을 내세우며 전제군주제를 강화해 간 고종의 ‘광무개혁’에 반발한 독립협회는 민권론에 기초한 의회 설립과 군주권의 제한을 주장하며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다만 독립협회가 하원 설치를 반대했듯이 이들의 민권신장 주장 역시 앞서 인민을 불신한 개화파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개화파나 독립협회는 처음부터 ‘공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구미 각국의 정체를 소개한 바 있는 《한성순보》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합중공화국’을 소개하면서 정당정치에 의한 정권 교체와 선거 과정에서의 정쟁을 이유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더구나 1898년 정부에서 독립협회가 ‘공화국쿠데타’를 꾀했다며 탄압, 해체했듯이 ‘공화’는 곧 ‘반역’의 의미로 인식되었다. 또한 인민을 불신하고 현존하는 군주를 부정할 수 없었던 개화파나 독립협회에게도 ‘공화’는 ‘군주’를 부정하는 ‘혁명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2. 국체 내지 정체에 대한 논의와 인식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 이후 많은 계몽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발간하는 잡지나 신문 등을 통해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정체변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보호정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개화파를 뒤이은 계몽운동가나 개신유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의 시정을 개선하여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일본의 보호정치를 선의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이들은 일본

3) 박영효 〈박영효건백서〉, 《日本外交文書》21, 1964

4) 유길준, 《西遊見聞》, 1889

의 보호정치가 끝나고 건설될 새로운 국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정당정치, 지방자치 그리고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를 집중했다. 특히 이런 논의들은 국체와 정체를 다룬 서양의 정치이론을 다룬 책을 출판하거나 신문·잡지를 통해서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당시 국체 내지 정체에 대한 계몽운동가들의 논의를 보면 이들은 ‘민주’와 ‘공화’의 개념을 매우 혼동했다.

목사 최병헌은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한 연설에서 “정체는 국가주권을 집행하고 정치조직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며 정체를 군주정체와 입헌정체, 민주정체로 분류했다. 이때 입헌정체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으나 정령을 헌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입헌군주제로, 민주정체는 곧 공화정치인데 여기에는 국민대표자인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하는 것과 국민이 직접 주권을 집행하는 직접 민주제로 분류했다.⁵⁾ 또한 원영익은 〈정체개론〉이란 글에서 정체를 군주정체와 공화정체로 분류하고 다시 군주정체는 전제와 입헌으로, 공화정체는 귀족과 민주로 나누면서 “공화는 군주가 신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체이고, 공화정치는 지극히 공평무사하여 상하가 화합하는 것으로 귀족과 민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민주 즉 민주공화라고 했다.⁶⁾ 필자 미상의 〈국체의 구별〉이란 논설에서는 공화국을 寡人的 공화국, 귀족적 공화국, 민주적 공화국으로 분류하여 민주적 공화국을 민주국이란 용어로 대치하여⁷⁾ ‘민주’와 ‘공화’를 동일 개념으로 사용했다.

반면에 유성준이 《법학통론》에서 공화정체를 “통치권이 인민 전체에 있어 국가의 정치를 인민이 스스로 행”하는 정체라고⁸⁾ 한 것이나 또 다른 〈국가의 개념(속)〉이란 글에서 “공화제도의 폐단은 다수한 압제에 있어 시정의 방침이 하층의 衆意를 영합함을 갑자기 하니 지금에 민주제도라 칭”한다고 하여 ‘민주’와 ‘공화’의 개념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다. 드물게는 선우순이 주권의 소재에 따른 국체를 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하고 공화제는 다시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로 분류하면서 민주공화제는 전 인민의 의지가 직접 또는 간접(대의적)으로 독립 고유의 최고권이 된 경우라고⁹⁾ 했듯이 ‘민주’를 ‘공화’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5) 〈皇城基督教青年會에서〉, 《皇城新聞》, 1906.10.5

6) 원영익, 〈政體概論〉, 《대한협회회보》3, 1908

7) 법률독서인, 〈國體의 區別〉, 《대동학회월보》8, 1908

8) 유성준, 《法學通論》, 박문사, 1905

9) 선우순, 〈國家論의 概要(續)〉, 《서북학회월보》12, 1909

이처럼 1905년 이후 근대국민국가의 건설 방안으로 계몽운동가들이 논의했던 정체 변혁론에서 먼저 이들은 민주를 공화와 구별없이 내지 민주를 공화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두 용어를 동일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일반적 사례였다. 다만 여기에는 ‘공화’가 공공의 이익 추구라는 정치적 이상 내지 헌법상의 원리를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국가 내지 정부 형태의 문제로만 이해되어 그 개념도 크게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계몽운동가들이 대체로 정체를 군주제와 공화제로 구분하듯이 이들은 군주제와 공화제를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했다. 이것은 19세기 들어 공화국이 비군주국이란 의미로 축소되었던 서구의 정치사상을 수용한 측면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수용한 중국이나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지향한 국체 내지 정체는 입헌군주제였다. 그것은 현존하는 군주제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과 함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더욱 깊어진 인민주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3. ‘민주’·‘공화’의 결합과 민주공화제

1905년 이후 계몽운동가들이 추구한 정체변혁론에서 ‘민주’와 ‘공화’는 동일 개념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었다. 그리고 국체 내지 정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권의 소재 내지 행사 주체가 누구인가였기 때문에 민주 개념은 다만 주권 소재의 대상으로 ‘국민’을 인식하되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민주’는 군주 1인의 주권을 반대하는 공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병합 직전에는 ‘민주공화’를 정체를 소개 내지 주장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있었다.

예컨대 미국을 ‘민주공화국의 開祖’로 표현한 것이나¹⁰⁾ 선우순이 귀족공화제와 대비하여 “전 인민의 의지가 직접 또는 간접(대의적)으로 독립 고유의 최고권이 된 경우”를 곧 민주공화제라고¹¹⁾ 했듯이 ‘민주공화’라는 용어가 국가형태의 하나로서 이미 사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이 명기된 것이 전혀 뜻밖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재사용 내지 재인용이 아니다. 민주와 공화의 결합에

10) 〈國家의 主動力〉, 《대한유학생회보》2, 1907

11) 선우순, 〈國家論의 概要(續)〉, 《서북학회월보》12, 1909

는 아래로부터의 요구 즉 민권신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 이래 농민들은 여러 항쟁을 통해서 민권시장을 투쟁을 계속해 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일어난 1894년 농민항쟁은 비록 실패했지만 농민군이 내건 폐정개혁안은 민권신장의 방향성을 잘 보여 준다. 농민군은 궁극적으로 봉건왕정을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토지의 평균 분작’, 신분적 차별의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직접 개혁의 주체로 나섰다. 이런 농민군의 민권 요구는 1904년 이후 지방의 하층 인민이 중심이 된 일상적 생활상의 민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비록 그것이 일진회 지회들을 통한 것이지만 하층 인민은 일진회라는 ‘지방 주민 단체’를 조직하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과도한 세금 징수와 지주들의 압박,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 등을 정치 이슈화하여 저항했다. 물론 이후 일진회가 친일 단체가 되지만 초기 지방의 하층 인민이 중심이 된 활동은 민권운동의 연장이었다.

이런 민권의 신장은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제를 강제로 양위시키면서 이에 저항하여 일어난 의병들의 인식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당시 평민의병장이 주축이었던 의병들은 이 황제양위를 보고 “우리 황실은 있으나 없는 것과 같”고¹²⁾ “국가는 있으되 그 實은 없는 것과 같”은¹³⁾ ‘망국’ 상태로 인식했다. 그러면서 의병을 일컬어 “대한민족의 대표자”라고¹⁴⁾ 스스로 정의했다. 이처럼 망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주권을 앞세운 평민 중심의 의병항쟁과 일상 생활상의 투쟁을 통해 민권 신장을 꾀해 온 민권운동은 망국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일부 계몽운동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 의한 강제 병합 직전인 1910년 2월 《대한매일신보》는 〈20세기신국민〉이라는 사설에서 지금 나라의 흥망은 국민의 전체 실력에 있고 이를 위한 사회 각종의 불평등의 타파를 주장하며 신국민의 도덕으로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다.¹⁵⁾ 그리고 〈신국가관념의 변천〉이란 사설에서 신국민이 건설할 신국가의 3요소 토지, 인민, 주권을 들고 “국가는 국민의 나라이며 그 존망이 오직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나라의 인민이어야 한다”고¹⁶⁾ 하며 새롭게 건설될 국가의 원리로 주권재민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개화파 내지 계몽운동가들이 ‘인민무지론’을 근거로 주장했던 주권재민의 민주적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어진 〈20세기 신국민(속)〉이란 사설에서 새로이 건설될 국

12) 金東臣, 〈八域忠義士에게 泣告함〉, 1908.3

13) 湖南義所, 〈告示〉, 1907

14) 沈魯術, 〈歸順勸誘書에 對한 返書〉, 1908.5.7

15) 〈二十世紀新國民〉, 《대한매일신보》, 1910.2.22

16) 〈新國家觀念의 變遷〉, 《대한매일신보》, 1909.7.15

가는 “전제봉건의 낡은 제도를 제거하고 입헌공화의 복음을 널리 펼쳐 국가는 인민의 낙원이 되며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¹⁷⁾ 주권재민의 입헌공화국의 건설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민주’와 ‘공화’의 결합에는 ‘민주=공화’로 인식한 개념상의 혼동은 있었지만 병합 직전 현실을 망국 상태로 인식하고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내적 변용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변용이 1910년 8월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과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 등을 계기로 ‘반역’의 개념이었던 ‘공화’가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빠르게 수렴되었고 그 결과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민주공화국’을 헌법에 명문화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개항 이후 수용된 서구적 개념인 ‘민주’, ‘공화’는 수용 초기에는 서국 각국의 정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근대국민국가의 대안으로서 검토되었다. 이때 위로부터 개화를 주도하던 개화파나 계몽운동가들은 기본적으로 공화제에는 부정적인 반면 입헌군주제를 선호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문명화되지 않은 무지한 인민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현존하는 군주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세기 서구에서 공화국이 비군주국의 개념이듯이 한국에 수용된 ‘공화’ 역시 ‘반역’의 용어였고, 공공의 이익 추구하고 같은 정치적 이상 실현 내지 헌법정신과 같은 공화의 본래 의미보다가 아닌 정부 형태의 하나로서 그 의미 역시 크게 축소되었다. 이런 인식은 1905년 이후 계몽운동가들이 일본의 보호정치 이후 건설될 국가와 정부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인민무지론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이래 반봉건 농민항쟁을 즐기치게 벌여 온 인민들은 1894년 농민항쟁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차별없는 사회 ‘평등’을 향한 민권신장을 주장하였고 이 운동은 초기 일진회의 지방 지회를 중심으로 하층 인민이 중심이 된 민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907년 고종의 황제양위 이후 평민 의병들은 이런 현실을 ‘망국 상태’

17) 〈二十世紀新國民(續)〉, 《대한매일신보》, 1910.2.23

로 인식하고 의병 스스로 자신을 ‘대한민족의 대표자’로 자부하고 국민 주권에 바탕한 국권 회복을 주장하였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민권운동과 국민주권 의식은 강제병합 직전 일부 계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봉건제 폐단을 제거한 주권재민의 입헌공화제를 주장하며 이전 개화파나 계몽운동가들의 ‘인민무지론’을 극복하였다.

이런 민주, 공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1910년 8월 일제의 강제 병합을 계기로 ‘반역’의 용어였던 ‘공화’가 새로운 건설의 용어로 등장하였다. 또한 이런 전환에 앞서 이미 국체와 정체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민주공화’가 사용되기도 하였고 이런 흐름이 3.1운동을 계기로 한 곳에 모여져 ‘민주’와 ‘공화’가 결합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기초했던 조소앙이 나중에 “임시헌법이 초기에는 막연한 민주공화국만을 목표로했다”고 회고했듯이¹⁸⁾ 당시 ‘민주’, ‘공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그 원리에 대한 인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18) 대한민국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1974, 323쪽

[제1부]

국제적 맥락에서 본 임시정부 활동과 공화주의의 확산

제3세션

폴란드의
독립 100주년 기념

11월 11일이 의미하는 전통과
폴란드 독립기념일

발표: 라파엘 부눅(Rafał Wnuk, 루블린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

11월 11일이 의미하는 전통과 폴란드 독립기념일

라파엘 부눅(루블린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

1918년 11월 11일, 독일군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킨 협약 국가(영국, 프랑스, 미국)와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부 유럽에서 전쟁 이전에 패배한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및 혁명에 의해 폐지된 러시아 제국 지역에 체코 슬로바키아, 발틱 국가들, 유고 슬라비아 및 폴란드와 같은 주권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 했습니다.

폴란드 독립운동 선두에는 수년간 독립 사회주의자이자, 민족주의 반대자이며, 중부 유럽에 독일과 러시아 같은 큰 이웃에 저항 가능한 중앙 연맹국가들의 탄생을 지지자인 유제프 피우수트스키가(Józef Piłsudski) 셧습니다. 전쟁이 종료되기 전(마지막 기간)에 피우수트스키는 독일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석방되어 1922년 11월 10일에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즉, 11월 11일), 독일인이 만든 폴란드 리젠시 위원회(Rada Regencyjna)는 피우수트스키를 군 최고 사령부로 임명하였고, 며칠 후 (11월 14일) 그는 시민의 권위를 이어 받아 11월 16일 협약 국가들에게 급송 공문을 통해 모든 해방된 폴란드 땅의 독립을 발표했습니다. 11월 22일 피우수트스키는 자신을 임시 수장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폴란드 독립 기념일은 11월 11일에 개최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1월 11일의 선거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선포가

당시에 발행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대한 중앙 정부가 없었고, 폴란드 존재에 대한 선거도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국권을 되찾고 8년 동안 11월 11일은 폴란드 역사상 특별한 날짜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독립 기념일의 날짜 탄생에는 Pilsudski의 “역사적 정치”와 1926년 군사 쿠데타로 폴란드 권력을 잡은 그의 캠프가 기여합니다. 그리고 Pilsudski는 11월 11일을 국가 및 교육의 휴일로 지정했고, 군대는 국가 의식을 수행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상원 당국(władza sanacyjna) (1926-1939년 폴란드 정부의 명칭)의 “역사의 정치”의 일환으로 11월 행사는 점차 막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패배의 의미는 서서히 상실되어갔고, 11월 11일은 유제프 피우수트스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를 다양한 사기 혐의로 몰아넣었고 (공식적으로, Pilsudski가 11월에 폴란드에 와서 다른 시기의 사진들을 공개하여 거짓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음.) 11월 11일의 날을 민족주의 지지자들 (한민족 지지자, 소수 민족 적대자, 중부유럽연맹 신념 반대자)이 특별히 비판했습니다. 피우수트스키가 살았을 동안 지정 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피우수트스키 총사령관은 자신이 살아 있을 동안 자신이 주변으로 인해 많이 힘들지 않도록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망한(1935년) 후에 이런 한계는 사라졌습니다. 1937년 11월 11일에 공식 공휴일로 선언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날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의식은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많은 전문 단체의 참여가 의무적이었습니다. 물론, 성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은 이런 행사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엘리트와 사회에 의해 크게 분열되었습니다.

1939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3제국(III Rzesza)과 소련(ZSRR)은 함께 폴란드를 공격했고, 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공휴일의 공개 기념 행사는 불가능했습니다. 1940년부터 11월 11일 이전에 폴란드 지하(polskie podziemie)에서 선전 운동이 조직됐습니다. 벽, 정원 울타리, 인도에는 “폴란드는 살아있다”, “폴란드가 승리할 것이다.”, “폴란드는 싸운다.”, “폴란드는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 “11.XI.1918-11.XI.1943”등에 포스터, 전단지, 글이 등장했고, 1942년부터는 ‘싸우는 폴란드’(Polska Walcząca)의 표적이 등장되었다. 기념비는 종종 빨간색과 흰색 꽃과 작은 깃발들로 꾸며졌으며, 결국 독일인들은 기념비 밑에 꽃을 두는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금지하였습

니다. 지하 보도(prasie konspiracyjnej)를 비롯한 전국 언론 보도에서는 독립 기념일을 연상케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휴일에 대한 분열이 멈추었고, 반독(Anti-german)으로 여겨지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적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1945년 ‘붉은 군대’(Armia Czerwona)는 폴란드 땅에서 독일군을 물리치고 소련은 폴란드에 공산주의 체제를 강요했습니다. 독립 기념 행사를 금지되었고, 이는 1944년 새로운 폴란드 공산주의 정부(폴란드민족해방위원회) 및 선언문의 도입을 기념하는 공휴일로 7월 22일에 대체되었다. 와 소프트웨어 선언에 설립을 기념 7 월 22 일에 기념 소개했습니다.

다음 33년 동안, 독립 기념일은 공공 영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베테랑 그룹만이 Pilsudski의 묘가 있는 크라쿠프 바벨에서 혹은 독립을 위해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묘지에서 그 날 만났습니다. 1975년에 CSCE(유럽 안전 보장 협력 회의)의 최종 법안이 헬싱키에서 서명되어, 서명국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직후, 1976년에 CSCE 최종 작전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야당 조직이(인권 및 시민 방위 운동, 노동자 방위위원회) 폴란드에 나타났다. 1978년과 1979년 11월 11일에 이 그룹들은 바르샤바, 크라쿠프 및 그단스크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최자 중에는 미래의 폴란드 대통령 Bronisław Komorowski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념일을 주관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1980년 8월 폴란드에서는 “피가 없는 혁명”이 일어났고 리다르노시치(결속)가 창안되었습니다. 이에 결과 중 하나는 여전히 불법이었지만, 독립 기념일의 광범위하고 엄숙한 축하였습니다. 1981년 12월 공산당 당국은 계엄을 선포하고, 독립 기념일을 금하였습니다. 1982~88년 11월 11일에 교회에서 조국을 위한 예배를 드렸고, 시위가 벌어졌으며, 전단지를 퍼트렸습니다. 기념일을 갖는 것은 공산주의 통치에 대한 반대의 표명이었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당국의 첫 번째 결정 중 하나는 독립 기념일의 회복이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과 구 공산정권의 대표자 모두 당시

지배 세력의 일부였습니다. 이 결정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공휴일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고, 폴란드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함이었다. 198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들은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약간 진부하게(무명의 군인 무덤에 꽃을 놓기, 연설, 군사 퍼레이드), 부흥에 힘을 쓰지 않고 가졌습니다. 권력의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시나리오는 동일했습니다.

2010년에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Lech Kaczyński) 폴란드 대통령과 수십 명의 폴란드 국가 엘리트 대표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기존 분할을 심화시키고 공개 토론의 언어를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차례로 민족주의 환경에 “뚝에 바람”을 쐈습니다. 11월 11일에 그들은 독립의 행진을 하였고, 파시즘과 급진적 축구 팬 그룹들 (소위 울트라시 (ultrasi))이 참여했습니다. 전통적인 애국 구호 외에도 유럽 연합과 성적 소수자를 겨냥한 인종 차별적, 반유대주의적, 극단적 민족주의 슬로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행진에 약 2만 명이 참여했으며, 행진을 막으려고 하는 무정부주의자들과 반 파시스트들(Antifa) 그룹과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언론인을 공격했고, 차량 등을 부숴졌습니다. 2013년 참가자들은 바르샤바 중심에 설치된 미술품 "레인보우"(게이 같은)를 태우고 러시아 대사관 근처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해가 갈수록 행군은 점점 더 많아졌고, 2015년에는 약 7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2014년 브로니스와프 코모로브스키(Bronisław Komorowski) 대통령은 “독립을 위해 함께”라는 대안적인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공휴일이 즐겁고, 분열적이지 않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서유럽 통일주의 행진이었으며, 주최자들은 민족주의적 슬로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코모로프스키(Komorowski)의 주도로 민족주의자들의 행진을 지지했던 일부 야당 대표자들이 (오늘날의 권력 진영) 끊임없이 단절되었습니다.

2015년은 비극적으로 사망한 대통령의 쌍둥이 형제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Jarosław Kaczyński)가 이끄는 이전 야당이(“법과 정의”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폴란드 대통령인 안제이 두다 (Andrzej Duda)와 후속 총리들도 본 당의 출신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코모로브스키(Komorowski) 대통령이 시작한 “독립을 위해 함께” 행진의 전통을 파괴하였고, 동시에 독립 민족 행진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독립 행진은 발전되어 갔고, 관련 구호는 점점 과격하고, 반 이슬람교적이었으며, 인종차별주의적이었고, 파시즘 전통을 언급하는 상징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2017년에는 유럽 전역에서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해 약 6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수도에서 대체 공식 기념 행사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행진에 대한 보도는 유럽과 세계의 모든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타났습니다. “독립”은 행진을 파시스트들의 가장 큰 모임으로 또한 유럽의 극우파로 인정했고, 외국인 혐오증, 반유대주의의 선포를 지적하고, 백색 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Associated Press는 6만 명의 민족주의자들의 행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자지라(Al-Jazeera)는 행진의 반 이슬람적인 분위기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독립 행진’을 외국인 혐오와 파시스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결의안에서는 유럽 연합 의회(Parlament Europejski)는 행진과 관련하여 강하게 비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폴란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외교부는 2017년 11월 12일 순전히 부수적인 행진을 지배적 요소로 묘사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폴란드 당국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주의와 반유대주의의 관련한 견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급진적 민족주의적인 환경을 멀리하기를 원치 않으며, 독립기념 행진의 주최자들을 비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민족주의자들의 행진에 대해 “있어도 안 되고, 폴란드에서 정직한 사람이 동의해서도 안 되는 슬로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배너들의 존재와 주최측의 무반응을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일부 폴란드 유럽 의회 의원의 투표를 비난했으며, 두다(Duda)의 견해로는 “사실상 폴란드와의 전투”에 참여한 유럽 연합 의회(Parlament Europejski)에서 실시된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독립 기념일 행진에 수천 명의 나치가 참여한다는 것은 과대 일반화라고 표명했습니다. “배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러 온 이들은 애국심을 갖춘 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폴란드가 되찾은 독립을 기념하러 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정기적으로 2018년에 축하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를 “반역자”로 인정한 민족주의자들의 격렬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독립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독립 기념일은 이제 우선적인 기념일이 되었고, 특히 그들만의 특별한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상황은 전쟁 전후와 매우 다르므로, 현재 독립 기념일인 11월 11일은 그 자체가 폴란드 사람들을 구분 짓지 않고, 폴란드에 독립 기념 행사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다루는지에 있습니다.

Tradycja 11 listopada i obchody stulecia niepodległości Polski

Rafał Wnuk(루블린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

11 listopada 1918 r. Niemcy podpisały rozejm z państwami Ententy (Wielka Brytania, Francja, USA) co zakończyło II Wojnę Światową. W Europie Środkowej, na obszarach należących przed wojną do pokonanych Niemiec, Cesarstwa Austro-Węgierskiego oraz obalonego przez rewolucję Cesarstwa Rosyjskiego zaczęły powstawać suwerenne państwa – Czechosłowacja, państwa Bałtyckie, Jugosławia i Polska.

Na czele polskiego ruchu niepodległościowego stał od lat Józef Piłsudski – niepodległościowy socjalista, przeciwnik nacjonalizmu, zwolennik stworzenia w Europie Środkowej federacji państw mogących się przeciwstawić wielkim sąsiadom: Niemcom i Rosji. W końcowym okresie wojny Piłsudski przebywał w niemieckim więzieniu. Tuż przed podpisaniem rozejmu został z niego uwolniony i 10 listopada 1918 r. przyjechał do Warszawy. Dzień później (czyli 11 listopada) stworzona wcześniej przez Niemców polska Rada Regencyjna przekazała Piłsudskiemu naczelne dowództwo nad siłami zbrojnymi. Kilka dni później (14 listopada) przejął on władzę cywilną, a 16 listopada w depeszy do państw Ententy, Piłsudski ogłosił powstanie niepodległego państwa polskiego obejmującego wszystkie wyzwolone ziemie polskie. 22 listopada Piłsudski ogłosił się Tymczasowym Naczelnikiem Państwa. Dziś w Polsce Święto Niepodległości obchodzone jest 11 listopada. Jednak nie zawsze tak było. Wybór 11 listopada nie był oczywisty, nie wynikał z faktu, iż wydano wówczas ważną odezwę, akt odrodzenia państwa, nie powstał

wtedy żaden istotny organ władzy centralnej, nie odbyły się decydujące o polskim istnieniu wybory.

Przez pierwsze osiem lat polskiej państwowości 11 listopada nie był uważany za datę szczególną w historii Polski. Za wykreowaniem tej daty na Święto Niepodległości stoi „polityka historyczna” Piłsudskiego i jego obozu, który przejął władzę w Polsce w drodze zbrojnego zamachu stanu w 1926 r. Wówczas Piłsudski zarządził traktowanie daty 11 listopada jako dnia wolnego od pracy w administracji państwowej i oświacie. Wojsku zaś powierzono organizację uroczystości państwowych. W ramach „polityki historycznej” władz sanacyjnych (tak określano rządy w Polsce w latach 1926-1939) listopadowym uroczystościom stopniowo nadawano coraz większą wagę. Klęska Niemiec i Austro-Węgier przestawała mieć znaczenie, a 11 listopada stawał się dniem wielkiego tryumfu myśli i czynu Józefa Piłsudskiego. W tym celu dopuszczano się różnego rodzaju fałszerstw (oficjalnie twierdzono, że 11 Piłsudski przyjechał do Polski i publikowano pochodzące z innego okresu zdjęcia z nieprawdziwymi podpisami). Datę 11 listopada szczególnie ostro krytykowali zwolennicy partii narodowych (zwolennicy państwa jednonarodowego, wrogiego mniejszościom, przeciwnicy koncepcji federacji środkowoeuropejskiej)

Dopóki żył J. Piłsudski święto miało charakter środowiskowy, nie było świętem państwowym. Można by rzec, iż za życia marszałek Piłsudski tak budować otaczający go kult, by nie zrażać do siebie zbyt wielu środowisk. Po jego śmierci (1935) zniknęło to ograniczenie. W 1937 r. 11 listopada został uznany za oficjalne święto państwowe i zaczęto je hucznie obchodzić. Dzień ten był wolny od pracy, uroczystości organizowały instytucje państwowe, obowiązkowe było w nich uczestnictwo wielu grup zawodowych. Stanu tego oczywiście nie akceptowały rosnące w siłę ugrupowania nacjonalistyczne. Święto mocno więc dzieliło ówczesne elity i społeczeństwo.

Wszystko zmienił 1939 r. III Rzesza i ZSRR wspólnie zaatakowały Polskę i rozpoczęła się okupacja. Jawne świętowanie polskich świąt państwowych było niemożliwe. Od 1940 r. polskie podziemie, w dniach poprzedzających 11 listopada, urządzało akcję propagandową. Na murach, ogrodzeniach, płytach chodnikowych pojawiały się afisze, ulotki i napisy „Polska żyje”, „Polska zwycięży”, „Polska walczy”, „Jeszcze Polska nie zginęła”, „11.XI.1918-11.XI.1943 itp., a od 1942 r. również znak Polski Walczącej.

Częstokroć pomniki przystrajano biało-czerwonymi kwiatami i proporczykami, co w końcu spowodowało, że Niemcy zakazali składania kwiatów pod pomnikami, uznając to za śmiecenie. W prasie konspiracyjnej, także tej narodowej, zamieszczano artykuły przypominające o Święcie Niepodległości. Święto przestało dzielić, zaczęto je uważać za antyniemieckie, w efekcie nabrało ogólnonarodowego charakteru.

W 1945 Armia Czerwona wyparła Niemców z ziem polskich i Związek Radziecki narzucił Polsce komunistyczny rząd. Obchodzenie święta niepodległości zostało zakazane, zamiast niego wprowadzono obchodzone 22 lipca święto upamiętniające utworzenie w 1944 r. komunistycznego rządu polski (Polskiego Komitetu Wyzwolenia Narodowego) i jego programowego Manifestu.

Przez następne 33 lata święto niepodległości pozostawało nieobecne w sferze publicznej. Jedynie grupy kombatanatów spotykały tego dnia przy grobie Piłsudskiego na Wawelu w Krakowie lub na cmentarzach, na których leżeli żołnierze polegli w walkach o niepodległość.

W 1975 r. podpisany został w Helsinkach akt końcowy KBWE nakładający na państwa - sygnatariuszy obowiązek przestrzegania praw człowieka i podstawowych wolności. Wkrótce potem, w 1976 r. w Polsce pojawiły się opozycyjne organizacje (Ruch Obrony Praw Człowieka i Obywatela, Komitet Obrony Robotników) wprost odwołujące się do aktu końcowego KBWE. W 1978 i 1979 r. 11 listopada grupy te zorganizowały obchody w Warszawie, Krakowie i Gdańsku. Wśród organizatorów znalazł się przyszły prezydent Polski Bronisław Komorowski – który za zorganizowanie tego święta trafił do więzienia.

W sierpniu 1980 r. w Polsce miała miejsce „bezkrwawa rewolucja” i powstała „Solidarność”. Jednym z jej przejawów było powszechne, uroczyste obchodzenie Święta Niepodległości, choć pozostawało one wciąż nielegalne. W grudniu 1981 r. komunistyczne władze wprowadziły stan wojenny, próbowały też bezskutecznie zakazać obchodzenia Święta Niepodległości. W latach 1982-88 11 listopada powszechnie organizowano w kościołach msze za Ojczyznę, manifestacje, rozrzucano ulotki. Obchodzenie święta było manifestacją sprzeciwu wobec komunistycznych rządów.

Gdy w 1989 upadł komunizm jedną z pierwszych decyzji nowych władz było

przywrócenie Święta Niepodległości. Skądinąd, w skład ówczesnej koalicji rządzącej wchodziłi zarówno opozycjoniści, jak i przedstawiciele starego komunistycznego reżimu. Decyzja ta miała wymiar symboliczny. Święto nabrało charakteru ogólnonarodowego i miało łączyć Polaków. Latach 1989-2010 obchodzone je oficjalne, nieco sztampowo, (złożenie kwiatów na Grobie Nieznanego Żołnierza, przemówienia, defilada wojskowa) bez pomysłu na jego ożywienie. Scenariusz był taki sam niezależnie od tego jakie stronnictwo polityczne było u władzy

2010 r. miała miejsce katastrofa lotnicza, w której zginął prezydent Polski Lech Kaczyński i kilkudziesięciu przedstawicieli polskich elit państwowych. Katastrofa ta pogłębiła istniejące podziały i zbrutalizowała język debaty publicznej. To zaś dało „wiatr w żagle” środowiskom radykalnie nacjonalistycznym. Organizowały one 11 listopada swój Marsz Niepodległości, do którego przyłączyły się też grupy faszystujące i radykalne grupy kibiców piłki nożnej (tzw. ultrasi). Obok tradycyjnych haseł patriotycznych pojawiło się tam wiele haseł rasistowskich, antysemickich, skrajnie nacjonalistycznych, wymierzonych w Unię Europejską oraz w mniejszości seksualne.

W 2011 w organizowanym w Warszawie marszu wzięło udział około 20 tysięcy osób i doszło do starć z grupkami anarchistów i antyfaszystów (Antifa) próbujących blokować marsz. Uczestnicy marszu atakowali dziennikarzy, niszczyli samochody itp. W 2013 jego uczestnicy spalili w centrum Warszawy instalację artystyczną „Tęcza” (jako „gejowską”) i wywołali zamieszki pod Ambasadą Rosji. Z każdym rokiem marsz ten stawał się coraz liczniejszy i w 2015 wzięło w nim udział już około 70 ludzi.

W odpowiedzi prezydent Bronisław Komorowski w latach 2012-2014 organizował alternatywny marsz „Razem dla Niepodległej”. Starał się by święto miało charakter radosny, na sposób niedzielący, niekonfliktujący. Był to marsz proeuropejski, jego organizatorzy dystansowali się do haseł nacjonalistycznych. Od inicjatywy Komorowskiego konsekwentnie odcinała się ówczesna opozycja (dzisiejszy obóz władzy), której niektórzy przedstawiciele wspierali marsz nacjonalistów.

2015 r. przyniósł zwycięstwo w wyborach dotychczasowej opozycji (partii „Prawo i Sprawiedliwość”), na czele której stoi Jarosław Kaczyński, brat bliźniak tragicznie

zmarłego prezydenta. Z tego ugrupowania wywodzi się też obecny prezydent Polski Andrzej Duda i kolejni premierzy.

Nowy prezydent zerwał z zapoczątkowaną przez prezydenta Komorowskiego tradycją organizowania marszu „Razem dla Niepodległej” i jednocześnie zaczął dystansować się do nacjonalistycznego Marszu Niepodległości. Tymczasem Marsz Niepodległości rósł, a jego hasła stawały się coraz bardziej radykalne, antyislamskie, rasistowskie, coraz więcej pojawiało się tam symboli nawiązujących do tradycji faszystowskiej. W 2017 r. wzięło w nim udział około 60 tysięcy uczestników, w tym radykalni nacjonaści z całej Europy. Władze polskie nie zorganizowały żadnych alternatywnych oficjalnych uroczystości masowych w stolicy.

Relacje telewizyjne z marszu w 2017 r. pojawiły się we wszystkie ważniejszych programach informacyjnych w Europie i świecie. „The Independent” uznał marsz za jedno z najliczniejszych zgromadzeń faszystów i skrajnej prawicy w Europie, zwracając uwagę na publiczne głoszenie poglądów ksenofobicznych, antysemitycznych i podkreślających supremację rasy białej. Associated Press mówiła o marszu 60000 nacjonalistów. Al-Dżazira zwróciła uwagę na antyislamski wydźwięk marszu. Za ksenofobiczny i faszystowski Marsz Niepodległości uznał Parlament Europejski. W rezolucji 15 listopada 2017 r. PE wezwał władze Polski do zdecydowanego potępienia marszu oraz podjęcia „stosownych działań” w związku z marszem. W odpowiedzi Polskie Ministerstwo Spraw Zagranicznych 12 listopada 2017 opublikowało oświadczenie, w którym stwierdzono, iż nieuprawnione jest opisywanie jako dominujących tych elementów marszu, które miały charakter wyłącznie incydentalny, oraz że polskie władze zdecydowanie potępiają poglądy bazujące na ideach rasistowskich, antysemitycznych i ksenofobicznych.

W tej atmosferze trwają przygotowania do obchodu 100-lecia niepodległości. Rząd Polski nie chce zrazić do siebie środowisk radykalnie narodowych i unika potępienia organizatorów Marszu Niepodległości. Prezydent Andrzej Duda w jednym z wywiadów zaś powiedział o marszu nacjonalistów „były hasła, których nie powinno być, i z którymi żaden uczciwy człowiek w Polsce zgodzić się nigdy nie powinien”. Potępił obecność tych transparentów i brak reakcji organizatorów. Jednocześnie nie zgodził się z oceną przedstawioną w Parlamencie Europejskim, potępiając głosowanie części polskich

europarlamentarzystów i ich przyłączenie się, w opinii Dudy, do „batalii prowadzonej de facto przeciwko Polsce”. Prezydent wyraził opinię, iż nadużyciem jest uogólnianie, że na marsz niepodległości przychodzą tysiące nazistów: „ci, którzy mieli te transparenty, stanowili jakiś promil, a zdecydowana większość przyszła z patriotycznych pobudek, w radosnej atmosferze świętować odzyskanie przez Polskę niepodległości”. Prezydent regularnie też apeluje o wspólne świętowanie w 2018 r

Wywołało to ostrą krytykę ze strony nacjonalistów, którzy uznali Andrzeja Dudę za „zdrajcę”. W tych warunkach organizacja oficjalnych obchodów Święta Niepodległości wydaje się wielkim wyzwaniem. Święto, przed wojną nieuznawane przez nacjonalistów, jest dziś przez nich zawłaszczane i uznane za należące przede wszystkim do nich. Sytuacja o tyle jest różna od przedwojennej, że obecnie dzieli Polaków nie tyle sam dzień 11 listopada jako Święto Niepodległości, co ukonkretnienie obchodów tego święta.

[제2부]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역사화해

제1세션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역사 갈등

동유럽에서의 역사 화해와 통합 그리고 남은 과제

발표: 마렉 라지본(Marek RADZIWIŃ, 중동부유럽연구소)

동아시아 역사갈등의 역사와 역사화해의 길

발표: 신주백(연세대)

동유럽에서의 역사 화해와 통합 그리고 남은 과제

마렉 라지본(Marek RADZIWIŃ, 중동부유럽연구소)

유럽의 역사와 화해에 관한 공동 토론에 대한 아이디어는 비교적 짧다.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두 번의 중대한 전쟁으로 20세기에 흔들린 오래된 대륙은 1945년 이후에 만 영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했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50년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을 공동으로 통제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이 유럽 경제 공동체와 함께 수년간 진화해온 유럽 석탄 사회가 태어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유럽 공동체-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치 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가장 강한 두 유럽 국가의 경쟁은 수세기에 걸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제 2 차 세계 대전의 대격변일 뿐이므로 두 선수 모두 진정한 화해를 가져왔다. 1963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독일 총리가 엘리제 조약에 서명했다. 청소년, 과학자 및 예술가의 집중적이고 대중적인 교환, 일반적인 언어 학습-독일어를 프랑스에서 그리고 프랑스어를 독일에서, 시민 간에 자유로운 비자 면제-오늘날 유럽인 젊은 몇 세대에게는 당연할 일일 수도 있다. 단지 반세기의 전통을 갖고 있다.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또 다른 중요한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20년이 필요했다. 1984년 베르덩(Verdun) 전쟁

모지에서, 사망한 독일과 프랑스 병사들을 위한 공동 기도가 있었다. 이 기념식에는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과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이 참석했다.

우리가 폴란드에서 목격하고 있는 화해 과정은 주로 독일 - 프랑스 경험에서 파생된다. 1989 년 폴란드에서 열린 원탁 회의와 그 뒤를 따르는 최초의 부분적으로 민주적인 의회 선거는 중부 유럽의 주요 정치적 변화였다. 거대한 사회적, 도덕적 변화였다. 폴란드 시장에 대한 대규모 외국 투자의 진입, 즉 자유 경제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정신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십 년의 정체 후, 폴란드는 점차 더 서구적인 문화가 되었다.

폴란드는 (인구와 경제 잠재력 면에서) 유럽 연합의 새로운 회원국 중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변화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은 이웃 국가의 경우보다 서구에 의해 더 철저히 관찰 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폴란드의 규모 때문에 폴란드에서 일어난 변화의 성공은 전체 지역의 안정성과 안전에 영향을 주었고, 중부 유럽 전체의 안보는 개개의 이웃국가와의 관계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변화의 첫 해인 1989-1991년에, 폴란드는 짧은 시간 내에 기존의 있던 모든 이웃을 잃어 버렸고 (3개국),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추후 유일한 유럽 국가로 새로운 (7개 이상의) 국가들과 이웃하였다. 폴란드는 서부에서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어 있고, 동쪽에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의 구소련이 붕괴 된 국가들이 있다. 이 변화는 분명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정치적, 법적 상황은 침해 당했고, 법적 상태가 침해 당했을 때, 국제법의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협상과 모든 이웃 국가들과의 새로운 양자 협상의 체결을 필요로 했다. 특별히, 새롭게 통일된 독일 국가와의 서쪽 국경을 구분 짓는데 있었다.

1970년 첫 번째 획기적인 상징적인 화해의 제스처가 바르샤바에서 일어났다. 즉, 1989년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20년 전이다. 바르샤바 게토 (Warsaw Ghetto)의 희생자들의 비석 앞에 독일 윌리 브란트 (Willy Brandt) 수상이 바치는 공물은 현재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이미지에 속한다. 브란트의 유명한 제스처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당시의 폴란드 공산당 정권은 정직한 사회 대화를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을 앞두고 진정으로 대답하고 획기적인 정치적 결정을 수반했다.

브란트 수상은 1970 년 12 월 현재 폴란드와 전쟁 후 오드라 강(Oder)에 국경 지대를 인정 받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25년 만에 끝냈다.

오드라 강 동쪽 땅의 상실에 대한 브란트의 동의는 많은 서독 사람들에 의해 배신으로 취급되어졌다. 이후 1990년 11월에 폴란드에 관한 통일 독일 간의 새로운 국경 조약에서 20년 후 그 발견이 확인되었다.

20년 후, 1990년 11월에 폴란드와 통일된 독일 간의 새로운 국경 조약에서 본 규 승인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인들이 때로는 시간을 빼앗아 야하고 선의의 이름으로 그들의 여론에 반하는 행동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인들의 때로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필요하다. 많은 역사가들과 국제 관계의 관측통들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과대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상징적인 제스처는 긴 과정을 거치고, 용감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증언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빈 상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서독의 예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일반적인 의식에서 Brandt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이미지가 살아 있다. 하지만 유럽 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 주체인 독일이 유럽 연합과 나토 회원 가입에 대한 폴란드의 포부를 옹호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제스처는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양자 관계에서 쉽게 식별 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전쟁에서 열친 대통령에 의해 레흐 바웬사(Lech Wałęsa)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쟁 시의 소련 문서의 공식 전달이었다. 특히, 1940년 4월 NKVD에 의해 수천 명의 폴란드 경찰관을 총격하기 위한 CPSU의 정치국 결정이 내용에 포함된다. 러시아는 이런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 소비에트 국가가 카틴 학살의 범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의 사건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상징적인 몸짓 뒤에는 더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인들은 현대 폴란드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와 국가를 연결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독일과 달리 러시아는 폴란드에 대해 중요하고 우호적인 동맹국이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 거대한 문화 및 과학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개방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러시아와 폴란드 측이 과학 및 문화 협력을 목표로 한 정부 기반(소통 및 협약 센터)을 설립했다.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것은 많은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거의 적대적 관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것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시는 비교적 간단하다. 이웃 간의 공개적인 관계, 역사적인 금기에 대한 토론은 자신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토론 할 수 있는 사회에 의해서만 이끌어 낼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1991년 이후 공산주의 테러와 다른 러시아인에 의해 살해 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에 대한 과거에 대해 솔직한 논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은, 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은 자신이 죄책감을 가지고 일했을 때만 가능하고, 사전에 정직한 자신과의 어려운 대화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화해가 없다.

독일과 프랑스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었다. 서독 사람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제국의 역할에 관해 극적으로 토론을 가졌다. 위대한 독일 철학자 칼 자스파스 (Karl Jaspers)의 전설적인 에세이 제목을 인용한 “유죄의 문제”는 독일의 수년간 역사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가들의 논쟁은 (Historikerstreit) 독일 전체주의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질문을 상기시키거나 또는 일부 토론자들에 따르면,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전쟁의 대한 독일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소비에트 전체주의와의 친화력에 대한 질문으로 축소될 수 있다. 서독 사회는 홀로 코스트 (Holocaust)와 2 차 세계 대전을 기념하면서 자체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고통스러운 교육을 실시했다.

프랑스에서는 비시 (Vichy)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하다. 페탕 원정대의 창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의 프랑스 전설은 사실주의와 물질 구조의 표상이었는가 아니면 전체주의적 괴물과의 공개적인 협력 이었는가? 아직도, 이백삼십 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활발하다. 1789년의 혁명은 많은 피를 흘리게 한 테러와, 동시에 추후 공화당과 프랑스의 민권과 공화당의 전통을 지원한 사건이다. 유명한 프랑스 역사학자 프랑수아 후렛 (Francois Furet)은 “20 세기 후반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에게는 이 사건이 여전히 근본적이어서, 현대 정치 의식을 압제하므로서 모든 지적 거리감이 즉시 적개심으로 간주된다” 고 말했다. 폴란드의 과거와의 투쟁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특히 혼란스럽거나 매우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가자들 사이에 모였고,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두 이웃 (독일, 러시아) 사이에 폴란드는 피해자 입장이

다. 종종 역사가들은 공격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고, 백퍼센트 옳은지에 대해서 정치인이 원하는 만큼은 확실하지 않다. 폴란드와 국경 짓는 민족과 국가들,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 예전에 폴란드의 끝에 있는 땅으로 주장했고, 동시에 우리는 문화와 서양 문명을 거기에서 옮겼다. 폴란드는 수 세기 전의 침략자와 침입자, 혹은 기껏해야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간주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인의 시각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토론은 사고력 문제를 필요로 했으며, 다양한 역사적 서술과 수십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권위주의 질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의 지배적 인 주제입니다. 양자 대화 프로젝트, 나는 유일하거나 심지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합의에 이르게 하는 긴 행진의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국가들의 합의와 화해는 수년간 지속되는 과정이다. 계약은 상대방이 옳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유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트들은 역사가들, 과학자들, 정치가들, 지식인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합의는 심포지엄 외부에서 발생하며, 고위급 회의를 제외하고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긴 길입니다. .

나는 또한 역사적 논쟁과 좋은 양자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공통의 과거와 마치 못해 적대적인 현대 관계에 대한 양립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정치의 개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커다란 경력을 쌓았지만 역사와 과거를 현재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폴란드는 1989년 개혁이 시작된 이래 거의 30년이 지난 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후퇴하고 있다. 역사적인 논란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다. 폴란드는 소련의 붕괴 직후 공식적으로 젊은 우크라이나 국가의 독립을 인정한 최초의 유럽 국가였다. 그 당시, 90년대에는 최근 역사에 대한 평가에서 지속적인 합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 년 후에, 역사적인 개정은 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책임에 관한 목소리와는 별도로, 우리는 폴란드를 위협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이민의 파도에 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유사한 메커니즘이 독일과의 관계에서 적용된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쟁의 책임을 독일에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은 오늘날 독일 경제의 지배적인 현대적 영향에 대한 대중주의자들의 슬로건과 운율을 붙이기 시작한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와 분쟁의 분야 중 하나는 소위 기념비적 동상이다.

또한 협약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지 알 수 있다. 수년간의 협상, 수십 번의 공동 연설, 프로젝트, 회의 및 간행물은 한 번의 대규모 경기장, 예를 들어 경기장에서 한 번의 시합으로 쉽게 파괴 될 수 있다. 공격적인 정치인이 포퓰리즘 연설에서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약간의 불균형과 불의가 있다.

Europa Środkowo-Wschodnia: Pojednanie jako proces niedokonany

Marek Radziwon(The Historical Disputes in the Northeast Asia and Europe)

Idea wspólnej debaty historycznej i pojednania w Europie jest stosunkowo krótka. Stary Kontynent wstrząsany w XX wieku dwiema wielkimi wojnami, które pochłonęły miliony ofiar, zaczął szukać sposobów na trwałe zachowanie pokoju dopiero po 1945 roku. W 1950 roku francuski minister spraw zagranicznych Robert Schuman ogłosił plan wspólnej kontroli produkcji i sprzedaży węgla i stali we Francji i w Niemczech. Tak narodziła się Europejska Wspólnota Węgla i Stali, która z latami wyewoluowała w Europejską Wspólnotę Gospodarczą, by wreszcie dzisiaj realizować się w idei Unii Europejskiej – nie tylko wspólnoty gospodarczej, ale przede wszystkim wspólnoty wartości.

Początki nie były łatwe. Konkurencja dwóch najsilniejszych państw europejskich miała wielowiekową krwawą historię, ale dopiero kataklizm II Wojny Światowej zmusił obydwu graczy do prawdziwego zbliżenia. W 1963 roku prezydent francuski Charles de Gaulle i niemiecki kanclerz Konrad Adenauer podpisali roku Traktat Elizejski. Intensywna i masowa wymiana młodzieży, naukowców i artystów, powszechna nauka języków – niemieckiego we Francji i francuskiego w Niemczech, swobodny bezwizowy przepływ obywateli – dzisiaj wydawałoby się rzeczy oczywiste dla kilku pokoleń młodych Europejczyków, mają tradycję zaledwie półwiecza.

Trzeba było kolejnych dwudziestu lat, żeby Niemcy i Francuzi okazali się gotowi

do kolejnego ważnego gestu symbolicznego: w roku 1984 na cmentarzu wojennym w Verdun doszło do wspólnej modlitwy za poległych żołnierzy niemieckich i francuskich. W uroczystościach brali udział kanclerz Helmut Kohl i prezydent François Mitterrand.

Procesy pojednawcze, których jesteśmy świadkami w Polsce w dużej mierze czerpią z doświadczenia niemiecko-francuskiego. Rok 1989 w Polsce, obrady Okrągłego Stołu i następujące po nich pierwsze częściowo demokratyczne wybory parlamentarne były wielką zmianą polityczną w Europie Środkowej. Okazały się także kolosalną zmianą społeczną i obyczajową: wejście na polski rynek wielkich inwestycji zagranicznych, a więc rozwój wolnej gospodarki, przede wszystkim zaś szybki rozkwit wolnych mediów sprzyjały zmianom mentalnościowym, Polska, stawała się po kilkudziesięciu latach zastoju krajem coraz bardziej zachodnim.

Polska była też spośród nowych członków Unii Europejskiej państwem największym (jeśli chodzi o populację i potencjał gospodarczy), było zatem zrozumiałe, że ewentualne sukcesy polskich przemian i możliwe porażki, będą obserwowane przez Zachód wnikliwiej niż u sąsiadów. Właśnie z powodu sporych rozmiarów Polski sukces przemian, jakie się w Polsce dokonywały, wpływał na stabilność i bezpieczeństwo całego regionu, a bezpieczeństwo całego regionu Europy Środkowej zależało w dużej mierze od stanu stosunków z poszczególnymi sąsiadami.

Polska była wreszcie jedynym bodaj krajem europejskim, to była sytuacja niezwykła, który w pierwszych latach przemian (1989-1991) stracił wszystkich dotychczasowych sąsiadów (trzech) i w krótkim czasie znalazł się w sąsiedztwie nowym (aż siedmiu nowych państw). Polska od zachodu graniczy ze zjednoczonymi państwem niemieckim, od południa z podzielonymi Czechami i Słowacją, od wschodu zaś z państwami powstałymi po rozpadzie Związku Radzieckiego: Ukrainą, Białorusią, Litwą, oraz Rosją.

Zmiana ta dotyczyła oczywiście stanu prawnego. Po bez mała półwieczu polityczne i prawne status quo zostało naruszone, nowa sytuacja w prawie międzynarodowym wymagała nowych ustaleń, wynegocjowania i podpisania nowych układów dwustronnych ze wszystkimi sąsiadami, w tym m.in. potwierdzenia granicy zachodniej z nowym zjednoczonym państwem niemieckim.

Do jednego z pierwszych przełomowych i symbolicznych gestów pojednania doszło w Warszawie w 1970 roku, a więc na dwadzieścia lat przed przełomowymi reformami roku 1989. Hołd kanclerza niemieckiego Willy'ego Brandta przed pomnikiem ofiar getta warszawskiego należy od tego czasu do najważniejszych obrazów symbolicznych współczesności. Słynny gest Brandta nie był przypadkowy. Towarzyszyły mu realne odważne i przełomowe decyzje polityczne, wyraźnie wyprzedzające swój czas, ponieważ rządzący w ówczesnej Polsce komuniści nie byli skłonni do uczciwego dialogu społecznego: kanclerz Brandt w grudniu 1970 roku podpisał z ówczesnym państwem polskim traktat uznający powojenne granice polsko-niemieckie na Odrze i zakończył w ten sposób trwający ćwierć wieku okres niepewności w stosunkach między obydwoma państwami. Zgoda Brandta na utratę terenów na wschód od rzeki Odry wielu Niemców zachodnich traktowała jak zdradę. Później, po kolejnych dwudziestu latach, w listopadzie 1990 w nowym traktacie granicznym między zjednoczonymi Niemcami o Polską potwierdzono tamte ustalenia. Dzisiaj widzimy, jak potrzebne jest, by politycy wyprzedzali niekiedy swój czas i w imię dobrej sprawy występowali niekiedy wbrew swojej opinii publicznej.

Tu potrzebne jest ważne zastrzeżenie. Wielu historyków i obserwatorów stosunków międzynarodowych grzeszy skłonnością do przeceniania gestów symbolicznych. Gesty symboliczne wykonywane przez polityków mają sens, jeśli stoją u początków długiego procesu i jeśli są świadectwem odważnych decyzji politycznych – w przeciwnym razie pozostają symbolem pustym. Przykład zachodnioniemiecki wyraźnie to pokazuje – w świadomości powszechnej żyje obraz klęczącego Brandta, należy jednak pamiętać, że to zjednoczone Niemcy, najsilniejszy w Unii Europejskiej podmiot polityczny i gospodarczy, były orędownikami polskich aspiracji do członkostwa w Unii Europejskiej i NATO.

Podobne gesty można bez trudności wskazać w dwustronnych relacjach Polski z Rosją. Jednym z najśłynniejszych było uroczyste przekazanie przez prezydenta Jelcyna ówczesnemu prezydentowi Lechowi Wałęsie dokumentów radzieckich z czasów wojny, w tym m.in. decyzji Biura Politycznego KPZR o rozstrzelaniu przez NKWD tysięcy polskich oficerów w kwietniu 1940 roku. Rosja przyznawała w ten sposób, ostatecznie i oficjalnie, że państwo radzieckie było sprawcą zbrodni katyńskiej.

Zdarzenia kolejnych lat potoczyły się jednak w kierunku przeciwnym, ponieważ za symbolicznym gestem nie poszły dalsze konkretne działania. Rosjanie, niewiele wiedzą o Polsce współczesnej, nic niemal nie wiedzą o historii łączącej obydwie społeczeństwa i narody. Rosja, w odróżnieniu od Niemiec, nie stała dla Polski ważnym, przyjaznym sojusznikiem i nic nie wskazuje, żeby miało się to zmienić w przewidywalnej przyszłości. Nie stworzono wielkich programów wymiany kulturalnej i naukowej, nie doszło do rzeczywistego otwarcia. W latach dwutysięcznych strona rosyjska i polska powołały fundacje rządowe (Centra Dialogu i Porozumienia), których celem miała być współpraca naukowa i kulturalna. Dzisiaj widzimy niestety, że te dwie instytucje nie współpracują ze sobą, a w wielu kwestiach traktują się niemal wrogo.

Przyczyn tego stanu jest pewnie wiele, ale wskazanie jednej najważniejszej wydaje się stosunkowo proste: otwarte relacje między sąsiadami, wspólne omawianie historycznych tabu mogą prowadzić tylko te społeczeństwa, które potrafią otwarcie dyskutować o swojej własnej historii. W Rosji po 1991 roku nie odbyła się uczciwa debata o własnej przeszłości, o terrorze komunistycznym i o milionach Rosjan mordowanych przez innych Rosjan. Przyznanie się do winy przed innymi, a tym bardziej przypominanie win innym jest możliwe tylko wtedy, kiedy najpierw przepracowało się swoje własne winy. Jestem przekonany, że nie ma uczciwej dyskusji i nie ma tym bardziej prawdziwego pojednania z innymi, jeśli wcześniej nie odbyła się trudna rozmowa z samym sobą.

Z podobnym problemem zmagali się Niemcy i Francuzi. Niemcy zachodni przeszli przez dramatyczną dyskusję o roli Rzeszy w II Wojnie Światowej, o tzw. „problemie winy”, by zacytować tytuł legendarnego eseju wielkiego filozofa niemieckiego Karla Jaspersa, w niemieckim środowisku historycznym przez lata całe odbywała się tzw. kłótnia historyków (Historikerstreit), dyskusję tę możemy sprowadzić do pytania o wyjątkowy charakter totalitaryzmu niemieckiego, czy może jego powinowactwa z totalitaryzmem radzieckim, co mogłoby zdaniem niektórych dyskutantów rodzić pokusę rozmywania niemieckiej winy za Holocaust i kataklizm wojny. Społeczeństwo zachodniemieckie wykonało bolesną pracę edukacyjną nad zrozumieniem własnej historii, nad pamięcią Holocaustu i II Wojny Światowej.

We Francji zaś wciąż żywa jest dyskusja o roli państwa Vichy – czy powstanie marionetkowego państwa marszałka Pétaina, francuskiej legendy czasów I Wojny było przejawem realizmu i ratowania substancji, czy jawną kolaboracją z totalitarnym potworem? Wciąż mimo dwustu trzydziestu lat żywa jest także dyskusja o Rewolucji Francuskiej. Rewolucja 1789 roku to wielki, krwawy terror, jednocześnie wydarzenie, które ufundowało późniejszą republikę i francuską tradycję praw obywatelskich i wolności republikańskich. Słynny francuski historyk Francois Furet pisał: „dla Francuza żyjącego w drugiej połowie XX wieku zdarzenie to jest nadal tak fundamentalne, tak tyranizujące współczesną świadomość polityczną, że wszelki intelektualny dystans jest natychmiast brany za wrogość”.

Polskie zmagania z przeszłością nie są więc ani wyjątkowe, ani szczególnie burzliwe, ani bardzo stare.

Zebraliśmy się w gronie historyków, mamy więc naturalną skłonność do utożsamiania kwestii pojednania, czy w każdym razie porozumienia międzynarodowego do spraw związanych z przeszłością. W rzeczywistości tak być nie jest. Wobec dwóch największych sąsiadów (Niemiec i Rosji) Polska zwykła uważać się za ofiarę. Często zasadnie, chociaż historycy wiedzą, że podział na agresorów i ofiary nigdy nie jest tak czysty i stuprocentowy, jak chcieliby tego politycy. Jednocześnie inne sąsiedzkie dla Polski narody i państwa, Ukrainę i Litwę, uważaliśmy za dawne krańce wielkiej Rzeczypospolitej, nieśliśmy tam kulturę i cywilizację zachodnią i z trudem przyjmowaliśmy optykę Ukraińców i Litwinów, w której Polskę widziano jako wielowiekowego agresora i zaborcę, lub w najlepszym razie nieproszonego gościa. Dyskusji wymagały zatem kwestie mentalnościowe, weryfikacji domagały się różne narracje historyczne, przez dziesięciolecia autorytarnego porządku nie mogły dojść do głosu.

Musimy przy tym pamiętać, że historia, chociaż jest tematem dominującym w tzw. dwustronnych projektach dialogowych, nie jest obszarem jedynym ani nawet najważniejszym. Przeciwnie – jest zaledwie pierwszym krokiem w długim marszu prowadzącym do porozumienia. Porozumienia i pojednania narodów to proces trwający długie lata. Porozumienie nie polega na przekonaniu przeciwnika do swoich racji, ale trudnym przyjmowaniu i rozumieniu racji drugiej strony. I wreszcie jest to proces, którego

nie dokonują elity – historycy, naukowcy, politycy, intelektualiści, chociaż to oni są zobowiązani go zapoczątkować. Prawdziwe porozumienie dzieje się poza sympozjami i poza spotkaniami na wysokim szczeblu, to długa droga wymagająca zmiany szerokiej, potocznej świadomości społecznej.

Myślę też, że możliwe są kontrowersje historyczne i dobra współpraca dwustronna oraz przeciwnie – zgodność co do wspólnej przeszłości i niechętnie albo wręcz wrogie relacje współczesne. Pojęcie polityki historycznej zrobiło w świecie w ostatnich dziesięcioleciach wielką karierę, ale popełniamy błąd widząc w historii i w przeszłości podstawową agendę bieżącej polityki.

Dzisiaj, po prawie trzydziestu latach od początku reform 1989 roku, Polska w relacjach z sąsiadami przeżywa regres. Kontrowersje historyczne stały się najpoważniejszą przeszkodą w relacjach z Ukrainą. Polska była pierwszym państwem europejskim, które tuż po rozpadzie ZSRR, oficjalnie uznało niepodległość młodego państwa ukraińskiego. Wtedy też, w latach dziewięćdziesiątych, wydawało się, że również w ocenie historii najnowszej osiągnęliśmy trwałą zgodę. Po kolejnym dziesięcioleciu okazało się jednak, że rewizje historyczne są łatwym instrumentem w politycznym zarządzaniu niechęcią i strachem i że sprzyjają odradzaniu się starych uprzedzeń. Dlatego obok głosów o ukraińskiej odpowiedzialności za mordy i przesiedlenia na Wołyniu słyszymy głosy o zagrażającej Polakom masowej ukraińskiej fali emigracyjnej.

Podobny mechanizm działa w relacjach z Niemcami. Bezustanne przypominanie Niemcom bezsprzecznych win wojennych zaczyna się dzisiaj rymować z populistycznymi hasłami o dominujących współczesnych wpływach niemieckiej gospodarki. W stosunkach z Rosją jednym z pól największych nieporozumień i sporów okazuje się tzw. wojna pomnikowa. Rosjanie, w odróżnieniu od zachodnich demokracji państwo prowadzące dzisiaj agresywne zarządzanie przeszłością (z rehabilitacją stalinizmu włącznie), protestuje przeciwko wszelkim próbom usunięcia dawnych pomników epoki radzieckiej w krajach sąsiedzkich, ponieważ uważa je za symbole radzieckiej chwały, podczas gdy dla Polaków są one raczej dawnym, propagandowym symbolem radzieckiej dominacji. Angażujemy się w te spory, chociaż rozumiemy jednocześnie, że kwestia pomników i miejsc upamiętnień ma znaczenie drugorzędne wobec mnóstwa realnych spraw i problemów, przed którymi stawia

nas współczesna Rosja, związanych m.in. z bezpieczeństwem i z polityką energetyczną. Ale to właśnie sprawy symboliczne dominują.

Widzimy także, jak łatwo zniweczyć wysiłki porozumienia. Lata negocjacji, dziesiątki wspólnych wystąpień, projektów, konferencji i publikacji łatwo zniweczyć jednym głośnym skandalem, np. jedną stadionową bijatyką, którą wykorzysta w populistycznej przemowie jakiś agresywny polityk. Jest w tym jakaś nierównowaga i niesprawiedliwość.

동아시아 역사갈등의 역사와 역사화해의 길

신주백(연세대)

동아시아 역사갈등의 역사와 역사화해의 길

신주백(연세대)

목 차

1. 갈등의 역사와 현주소
2. 진상규명과 갈등의 관리.협력의 경험들
3. 역사화해 논의의 현재 - 한국을 중심으로
4.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갈등의 역사와 현주소

• 역사

- 비판 : 1982,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문제. 각자 마무리 - '縫合'
- 반격 : 1990년대 일본 전후시스템의 총체적 동요(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 보통국가화
- 갈등의 본격화 : 2001, 우익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시장 진출과 역사갈등 →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의 본격화

• 현재 = 獨立變數 → 常數

- 다섯 가지 유형

- 1) 교과서문제
- 2)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 3) 중국의 역사인식 - 동북공정문제
- 4) 일본의 침략과 지배 처리문제
- 5) 영토문제(대륙, 해양)

- 특징적 양상

- 1) 연례화
- 2) 다양화
- 3) 광역화
- 4) 국민감정화
- 5) 구도(화) - 미국의 개입확대와 중국의 一帶一路

2. 진상규명과 갈등의 관리.협력의 경험들

- 시민운동
 - 진상규명 활동(노무동원 -> 일본군'위안부')
 - 일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
- 전후보상 움직임 사례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1995)
 - 花岡平和友好基金 (2000)
 - 종종 기업을 대상으로 화해와 협상 권유하지만, 이미 해결된 문제로 정부 책임 없다. → 제2의 가해=다른 형태의 폭력
- 역사(교과서)대화
 - 2002년 : 민간차원(한일/한중일), 정부차원(한일-> 한일, 중일)
 - 전후 첫 대화, 가능성을 열어줌.
 - 교육의 영역보다 외교 중심. 결국 '보험'상품 기능
 - 현재와 미래 전략과 연동지어 사고하지 못함
 - 일본정부는 외교현안으로 흡수했지만, 진전된 태도 없음

3. 역사화해 논의의 현재 - 한국을 중심으로

- 역사화해의 과정 : 책임자 중심의 처벌과 사회적 은폐.왜곡
 - 도덕적 단죄와 징벌적 정의의 실현
 - 비판적 성찰과 용서를 동반한 역사화
 - 질서로서 평화정착과 보편가치로서 역사문화에 기여그러면 지금 한국과 동아시아는 어디쯤?
- 질문 1 한국에게 역사화해가 대한민국, 한반도,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질문 2 동아시아 역사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문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일본사회가 스스로 과거를 인정하고 정체성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질문 3 한국(중국, 동아시아)사회는 밖으로 외치는 역사화해를 자신의 내부로까지 돌릴 수 있는가?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 구도의 절대화를 넘어서고 있는가?
- 어느 쪽도 질문에 답할 만한 준비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 미래 전략도 없다.

4.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대한민국이 이사갈 수도 없고,
한반도를 옮길 수도 없어서 화해해야 하는가?
갈등 자체가 싫어서 화해해야 하는가?
- 독일문제처럼 '한반도문제'도 있다는 자각.인정
- 한반도 = 분단체제 = 냉전체제의 지속 -> G2구도로 현상화
- 삼각 축 : 남북화해 - 역사화해+경제협력 - 동아시아 다자질서
→ 서독의 경험 = 빌리브란트의 신동방정책 - 동서독 긴장완화
= 동유럽 사회주의와의 국교수립 + 헬싱키협정
→ 우리는 동아시아를 일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가?
한반도와 지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양방향이 어려운가?
- '통일'이란 무엇인가? 단일 / 연합 : '통일 대비' or '남북(국)연합'
분단극복이라 말할 수 없는가?
- **NAHF paper=동아시아형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운가?

[제2부]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역사화해

제2세션

공동역사연구 및 공동교과서 편찬을 위한 국제협력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서의 폴란드와 러시아의 협력

발표: 미로스와프 필리포비츠(Mirosław FILIPOWICZ, 중동부유럽연구소장)

공동역사교재 편찬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

발표: 김정인(춘천교대)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서의 폴란드와 러시아의 협력

미로스와프 필리포비츠(중동부유럽연구소장)

수세기 동안 폴란드와 러시아는 공통의(그리고 동시에 분열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해 동안 순탄했던 이 역사는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점점 더 강한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아 2차 대전 후에 100년이 넘는 분할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소련에 의해 주권이 수십 년 결여되었다. 폴란드-러시아 관계의 역사는 폴란드 역사가들에게 폴란드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이 부분 없이는 폴란드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폴란드는 러시아 역사가들에게는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영토를 포함하여 위대한 다민족인 황제와 볼셰비크 계승자는 수많은 이웃들을 만나 수많은 민족을 지배했다. 역사가는 신화와 관련이 있으며, 심각하고 객관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결코 이와 멀리 할 수 없다. 이것은 역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므로 현대의 유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해결의 열쇠이고, 기록 보관자료와 현대 역사서에 대한 정상적이고, 손상되지 않은 접근이 필요하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 폴란드 역사가들은 폴란드-러시아 역사의 중요한 순간과 관련하여 기록 보관소에 매우 접근하기 어려웠다. 폴란드 연구원이, 특히 분할 기간과 관련된 출처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단 한번,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러시아의 부주의로 외국 연구원이 분할 시대의 자료를 볼 수 있게 했다. 연구원은 하버드 출신의 젊은 미국 역사가인 로버트 로이드 (Robert

Loyd)였다. 오랫동안 “폴란드의 제 2 분할” 자료가 유일한 출처였으며, 동시에 비 러시아 역사가가 작성한 문제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혁명 이후에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소비에트 독자들이 혁명 이전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을 매우 염려했다. 예시로 markiza de Custine의 유명한 작품인 “1939년 러시아”가 러시아어로 몇 년 후를 걸쳐서야 비로소 비치되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권력 체계의 변화에 관계없이 볼 수 없었다. 예리한 미국 외교관이자 역사 학자인 조지 케넌 (George Kennan)이 지적한 것처럼, “1839년 라루시 (La Russie)의 1839 년에 러시아에 관한 작품은 아주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이 책이 러시아 유제프 스탈린에 관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와 코지겐에 대한 나쁜 책이 아니다.”

현대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방 검열이 사라졌다. 후계자들은 종종 저자의 머리 속에서 살고 있고, 특히 공산주의 시대에 자급자적으로 검열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검열 체계는 과학 아카데미와 대학(Academy of Sciences and Universities)에서 책임 있는 러시아 과학자들을 진행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과 일한 경험을 통해 나는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연구 어느 단계에서도 거의 모든 비판적 언급이 국제 과학 또는 교육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추적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책임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언급이 남아 있다면, 공식적인 역사가들과 진정한 전투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하며, 러시아 공식적 역사 과학에 대한 약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러시아 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연방 러시아와 아시아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소개된 중세 시대의 몽골 포로 생활 문제와 같은 주제가 배제되었다. 이 모든 견해는 러시아 역사서 전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러시아에는 정직하고, 지적이고, 용감한 역사가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들은 책임 있는 학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지나치게 앞서가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MGIMO에서 발표된 Andrei Zubov 교수의 경우). 19 세기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Piotr Czaadajew)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다. 오늘 날 대부분의 경우 실직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폴란드-러시아의 핵심적인 질문은: 역사적인 연구 분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역사 학자의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 또는 일반적인 역사 학자들에 대해서 인가요? 후자는 일반적으로 “애국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지 않으며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쓰는 역사는 공식적으로 역사 교과서나 학교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보관 자료 검색을 위해 러시아에 가는 역사가는 두 가지 유형의 파트너를 만날 것이다. 동료와는 쉽게 의사 소통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또는 보존 자료 담당자)과는 친절하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다.

공통의 역사책은 양자 간 교과서위원회의 장기간의 작업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산주의 시대에 이미 폴란드에서 그러한 위원회는 1970년대에 독일인 (그 당시는 서독 독일과)과 형성되었다. 1980년대 중반, 1985년에 소련에서 그와 같은 위원회가 창설되었고, 나중에 폴란드-러시아위원회가 되었고, 그 범위에는 역사와 지리 모두 포함되었다. 나는 이 형성의 위기를 목격했다. 2001년에 저명한 폴란드 역사가 그룹과 함께 모스크바에 있었다. 당시 폴란드의 공동 위원장인 미에치스와프 탄트(Mieczysław Tanty) 교수는 소련의 붕괴 이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그는 더 이상 실질적인 위임을 받지 않고 의장직에 있었다며 후회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위원회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폴란드-러시아위원회로 재개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으며, 이 난관이 신속하게 패배 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추측은 교과서위원회 자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이고 관료적인 프로젝트이며, 엄청난 양의 전문가 의견이 준비되고, 양국의 역사 교과서를 평가하며, 이 전문가 보고서는 장관급 관리에게 보내진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에는 실질적인 변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민주사회가 클수록 그러한 위원회의 존재 가능성은 더 적다.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체제에서 교과서위원회 (교과서 내용에 잠재적으로 간단한 영향을 미침)가 상대적으로 거의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유망한 형식은 이제 관료적 공식위원회에 있지 않고, 연구자 집단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연구자 집단의 주도권은 국가의 양측이 지원하고, 심지어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형태라 할지라도 이 관료적인 안정기는 없다.

유럽의 공통적인 독일-프랑스 교과서의 출판이 가능한 것처럼, 공통 폴란드-독일 공통 역사 교과서 출현도 가능했지만, 합동 폴란드-러시아 교과서의 출판은 아직까지도 상상할 수 없다. 물론, 저명한 폴란드와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 그러한 교과서를 준비가 가능하다. 교과서 정의를 봐서라도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고 공동 과학적 워크숍

을 갖는 연구원 그룹으로만 책이 출판되지 않는다. 양국의 관련 부처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일종의 국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러시아가 전국에 하나의 보편적인 역사 교과서를 소개하고 러시아의 선전이 다양한 역사적 신화를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자기 역사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을 이해하려고 하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내면에서 역사가들의 냉담하고 비판적인 견해는 때로는 “수치의 교육학”의 모범으로 분류되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보다 더 센스 있는 역사 편찬이 없다는 걸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니스트 르난 (Ernest Renan)의 이웃 국가에 대한 과거와 증오에 대한 공통적인, 분명히 잘못된 시각의 비전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생생한 정의를 상기시켜준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 기록보다 다른 합리적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이는 유익한 대화를 구축하지 않고, 때로는 “수치의 교육학”으로 분류되는 역사의 내부 정신, 중요한 의견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 생각에 폴란드-러시아인 교과서가 생기면 그것은 먼 미래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비록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이 멈추더라도, 러시아가 폴란드 역사에서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러시아 역사상 작은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이러한 불균형은 훨씬 적다. 마찬가지로, 독일인과 프랑스인들이다. 러시아는 너무 크고, 다민족, 다 국가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크게 미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는 2008년부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룹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폴란드 측에서는 아담 로트펠드(Adam Rotfeld) 교수가 이끌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학자 Anatoly Torkunov가 있다. 두 공동 의장은 각국 정부 엘리트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졌다. 교수 로테르 펠트 (Rotfeld)는 과거 외교부 장관이었으며, 많은 책임 있는 국제 업무를 수행했다. Torkunov 학자는 러시아 외교 대학장인 MGIMO를 지칭하며 외무부 장관과 대통령 자신에 대한 긴밀한 자문위원 그룹에 속한다. 본 단체는 20세기의 폴란드-러시아 역사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하얀 반점-검은 반점”인 출판사를 준비했다. 폴란드어와 러시아어로 출판되었고, 추후 조금 요약된 영어 번역본 출판되었다. 이 출판물에서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가들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주제에 별도의 텍

스트를 썼다. 이 본문은 양 당사자의 승인을 얻었으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대편의 사유를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단계로 나아갔다. 불행하게도, 몇 년 후, 러시아의 크림미아 합병 이후, 그룹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폴란드 선거에서 ‘법과 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이 승부했을 때, Rotfeld 교수는 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사임했다. (그는 또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외무부 전권 위임을 역임했다). 동시에, 폴란드-러시아 관계는 1989/1991년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악화되었다. 그들의 개선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략과 폴란드 정부 매체 및 2010년 대통령 비행기 추락사건 재난에 대한 러시아에 비난 판결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16년에 폴란드에서 그룹의 업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나 러시아 측에서 기대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폴란드 측의 미로스와브 필리포비취(Mirosław Filipowicz)교수가 Rotfeld 교수의 의견을 구하고,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회원 선출의 자유를 보장 받고 재 설립 했다.

새로 임명된 몇몇 회원들이 몇 년 동안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 교사들을 위해 폴란드 - 러시아 출판사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제 말은 주도자인 필리포비츠 (Filipowicz)교수 외에도 비에스와브 카반(Wiesław Caban), 마리우스 보워스 (Mariusz Wofos)와 라파우 브눅 (Rafał Wnuk)교수 마렉 라지언 (Marek Radziwon)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를 위한 고등학생 수준의 학교 문제집을 선정했다. 폴란드-러시아 역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에세이는 공동으로 폴란드와 러시아 저자로부터 작성되었고, 폴란드와 러시아 학교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폴란드와 러시아 학교의 현실적 차이를 두고 폴란드와 러시아 교사들이 만들었다. 저자들은 텍스트에 대해 공동 동의한 후 작업을 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역사를 평범하게 하지 않기를 원했고, 읽는 이들이 러시아 역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대도도 그렇길 바랬다. 간단히 말해서, 공감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폴란드어와 러시아어로 인쇄된 이 단어들을 쓰는 순간, 14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역사 관련 두 권의 책이 있다.

20세기의 책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공식 러시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 책을 출판한 경험으로 러시아는 텍스트를 검열하는 것을 실제로 목표로 하고 텍스트의 변경을 암시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 오랜 토론 끝에 본문과 관련된 러시아어로

된 주의점은 삭제할 수 있었다. 이것은 20세기의 책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을 마지막으로 뒀다. 이 간행물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종이 형식의 폴란드 학교에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러시아 학교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모스크바에 있는 폴란드 연구소 덕분에, 또한 인터넷 덕분에,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 선생님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와 러시아가 상호간에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비하면 바다에 떨어진 방울 같을 것이다. 단지, 유용한 방울이다. 벨로루시의 역사 학자들은 이미 폴란드와 비슷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아마도 리투아니아와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오늘 우리가 서울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이전 합동 폴란드-한국 전문가 팀의 연구에서도 비롯된다. 나는 낙관적으로 마무리 하고 싶다. 당신이 유럽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을 한 경우 : 폴란드 및 러시아 저자는 역사에 대한 공동 글을 작성했고, 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이 방향으로의 이동은, 역사적으로 부상 가치와 역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으로, 국가의 약덕에 대한 약물도 제공한다. 폴란드와 러시아 작가들은 공동으로 역사에 관한 글을 썼다. 역사적으로 상처 받았고, 역사를 필요로 하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고, 국가의 자존심의 근원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약점의 약이 될 것이다.

Polska- Rosja: międzynarodowa współpraca na polu badań historycznych i edukacji historycznej

Mirosław Filipowicz

(Instytut Europy Rodkowo-Wschodniej/Katolicki Uniwersytet Lubelski Jana Pawła II)

Polska i Rosja przez wieki były złączone (i zarazem podzielone) wspólną historią. Ta historia, pierwotnie tocząca się ze zmiennym szczęściem, od XVIII po XX wiek zdominowana została przez różne fazy polskiej podległości wobec coraz potężniejszego sąsiada, z ponad stuletnim okresem rozbiorów i kilkoma dekadami braku pełnej suwerenności wobec ZSRR w latach po II wojnie światowej. To powoduje, że dla polskich historyków dzieje stosunków polsko-rosyjskich to jeden z istotniejszych tematów, bez których nie da się zrozumieć historii Polski. Polska jest natomiast o wiele mniej ważnym punktem dla historyków rosyjskich. Wielkie, wieloetniczne, obejmujące tak terytoria europejskie, jak i azjatyckie, państwo carów i jego bolszewicki sukcesor miały do czynienia z licznymi sąsiadami i zdominowały liczne grupy etniczne. Polacy wśród nich nie byli ani jedyni, ani chyba nawet najważniejsi. Problem wzajemnego postrzegania się przez pryzmat historii jest jednak ważny dla obu stron i obrósł w liczne stereotypy i głęboko zakorzenione mity historyczne. Historyk ma do czynienia z mitami i, nawet przy poważnych i zobiektywizowanych wysiłkach, nie wykorzeni ich nigdy. Taka jest bowiem natura historiografii. Można je więc poddawać analizie i przez to osłabiać ich współczesną szkodliwość. Ale, i to jest kluczem do sprawy, niezbędny jest normalny, nieustraszony dostęp do archiwaliów i znajomość dotychczasowej i współczesnej historiografii.

W Rosji przed rewolucją 1917 r. polscy historycy mieli bardzo utrudniony dostęp do archiwaliów dotyczących kluczowych momentów polsko-rosyjskiej historii. Dość powiedzieć, że potrzebne były specjalne zabiegi w kręgach dworskich by polski badacz mógł być dopuszczony do źródeł, zwłaszcza tych dotyczących okresu rozbiorów. Niewielu się udało. Symptomatyczne też, że tylko w jednym przypadku przed I wojną światową Rosjanie, trochę przez słabą orientację, dopuścili obcego badacza do źródeł rozbiorowych. Był to młody amerykański historyk z Harvardu, Robert Loyd, którego „Drugi rozbiór Polski” na długo pozostał jedyną źródłową, a przy tym napisaną przez nierosyjskiego historyka, monografią poświęconą temu zagadnieniu. Ten stan spraw pogorszył się jedynie w czasach po rewolucji. Komunistyczna Rosja, zrywając historyczną ciągłość z Rosją carów, dbała jednak bardzo by radziecki czytelnik nie mógł się zapoznać z krytycznymi relacjami cudzoziemców odwiedzających przedrewolucyjną Rosję. Spektakularnym przykładem jest tu słynne dzieło markiza de Custine, „Rosja w 1839 r.”, które mogło się po rosyjsku ukazać w kraju dopiero przed kilku laty, a przez wiek XIX i XX, niezależnie od zmian systemu władzy, pozostawało niecenzuralne. Nic dziwnego. Jak zauważył przenikliwy amerykański dyplomata i historyk, George Kennan, „jeśli nawet przyznamy, że *La Russie en 1839* nie była bardzo dobrą książką o Rosji 1839 r., stajemy wobec niepokojącego faktu, że jest to znakomita książka, przypuszczalnie nawet najlepsza, o Rosji Józefa Stalina i nie taka znów zła książka o Rosji Breżniewa i Kosygina”.¹⁾

We współczesnej Rosji znikła, formalnie, prewencyjna cenzura. Tyle, że jej sukcesorzy mieszkają często w głowach samych autorów, zwłaszcza tych wychowanych jeszcze w czasach komunistycznych, i przywykłych wtedy do autocenzurowania się. Jeszcze skuteczniej te mechanizmy cenzorskie wprowadzają wobec swych kolegów rosyjscy historycy urzędowi, zajmujący odpowiedzialne funkcje w Akademii Nauk i na Uniwersytetach. Z doświadczeń z pracy z nimi w ostatnich tylko latach mogę odpowiedzialnie stwierdzić, że właściwie każda krytyczna wzmianka o Rosji, w którymkolwiek jej etapie historycznego rozwoju, jest w międzynarodowych projektach naukowych czy edukacyjnych starannie tropiona i podejmuje się próby jej eliminacji. Każda taka wzmianka, jeśli ma pozostać, wymaga przeprowadzenia z owymi urzędowymi

1) G. F. Kennan, *The Marquis de Custine and His Russia in 1839*, Princeton 1971, s. 124. Princeton Univ. Press.

historykami prawdziwej batalii. Świadczy to o nieprzemyślanym stosunku do własnej historii, o braku do niej dystansu, jest ewidentną słabością rosyjskiej urzędowej nauki historycznej. A jednocześnie, we wprowadzanym ostatnio w Rosji jedynym podręczniku historii dla rosyjskich szkół, pewne etapy, kluczowe wcześniej dla dziejów Rosji i Rusi, jak choćby kwestia niewoli mongolskiej w średniowieczu, zostały wyeliminowane, bo narracja taka mogłaby urazić obywateli Federacji Rosyjskiej – Azjatów. Wszystkie te uwagi nie odnoszą się do rosyjskiej historiografii jako całości. W Rosji nie brakowało nigdy i wciąż nie brakuje uczciwych, odważnych intelektualnie historyków, tyle że z zasady nie zajmują oni jakichkolwiek odpowiedzialnych funkcji akademickich, a gdy posuną się w krytycyzmie zbyt daleko, mogą stracić pracę (przypadek prof. Andrieja Zubowa, zwolnionego z MGIMO). W dziewiętnastowiecznej Rosji za bezkompromisową krytykę swego państwa można było trafić do domu wariatów (Piotr Czaadajew), w dzisiejszej w takim przypadku – co najwyżej - grozi bezrobocie.

Stąd, w przypadku polsko-rosyjskim kluczowe jest pytanie: o jakich kontaktach na polu badań historycznych mamy tu mówić? O tych urzędowych, czy o normalnych kontaktach normalnych historyków. Ci ostatni zwykle nie czują się powołani do realizacji jakichś „misji patriotycznych” i z nimi można bez trudu znaleźć wspólny język. Tyle, że to co piszą rzadko trafia do oficjalnych podręczników historii i do szkół. Historyk wyjeżdżający do Rosji na kwerendy archiwalne będzie też miał do czynienia z dwojakiego rodzaju partnerami: znajdzie łatwe porozumienie ze swymi kolegami po fachu, jednak z historykami sprawującymi funkcje urzędnicze i kierującymi archiwami (czy jedynie działami archiwów) już niekoniecznie będzie mógł życzliwie i ze zrozumieniem rozmawiać.

Wspólny podręcznik historii rzadko powstaje bez wcześniejszej wieloletniej pracy bilateralnej komisji podręcznikowej. Takie komisje w Polsce, już w okresie komunistycznym, jeszcze w latach siedemdziesiątych, powstały z Niemcami (czyli wtedy Niemcami Zachodnimi). W połowie lat osiemdziesiątych, w 1985 r. komisję taką stworzono z ZSRR i stała się ona później komisją polsko-rosyjską, a swym zakresem objęła zarówno historię, jak i geografę. Byłem świadkiem kryzysu tej formacji, będąc w Moskwie z prominentną grupą polskich historyków w 2001 r. Ówczesny polski współprzewodniczący

Komisji, prof. Mieczysław Tanty, ubolewał, że komisja praktycznie przestała działać po upadku ZSRR, zaś on tkwił na stanowisku przewodniczącego, nie dysponując już żadną realną komisją, tyle że nikt go nie odwołał ze stanowiska! Po latach udało się formalnie wznowić prace tej komisji, już jako komisji polsko-rosyjskiej, jednak pozostaje ona wciąż w głębokim impasie i nic nie wskazuje na to by ów impas szybko został pokonany. Kłopotem jest tu, jak sędzę, sam format komisji podręcznikowej. Jest to zwykle twór na poły urzędniczy, biurokratyczny, przygotowuje się olbrzymie ilości ekspertyz, oceniających podręczniki historii w obu krajach, ekspertyzy te trafiają do ministerialnych urzędników, ale nie mają wielkiego wpływu na realne zmiany w treści podręczników historii. Paradoksalnie, im bardziej demokratyczne społeczeństwo, tym mniejsze możliwości takich komisji. Tyle, że w warunkach autorytarnego komunizmu komisje podręcznikowe (z potencjalnie łatwym realnym wpływem na treść podręczników) stosunkowo rzadko działały. Bardziej obiecującym formatem są więc obecnie nie tyle owe biurokratyczne, oficjalne komisje, ile inicjatywy grup badaczy, najlepiej wsparte po obu stronach przez państwo, choćby w formie zapewnienia finansowania prac, ale pozbawione owego biurokratycznego balastu.

O ile w warunkach europejskich powstanie wspólnego, niemiecko-francuskiego podręcznika historii okazało się możliwe i wykonalne, możliwe też było zainicjowanie idei wspólnego polsko-niemieckiego podręcznika historii i poważne zaawansowanie prac w tym zakresie²⁾, o tyle wciąż niewyobrażalna jest idea napisania takiego podręcznika wspólnymi siłami polsko-rosyjskimi. Oczywiście, jest możliwe przygotowanie takiego podręcznika przez wybitnych uczonych polskich i rosyjskich. Tyle, że podręcznik, już z samej swej definicji, zakłada, że to nie może być tylko prywatna inicjatywa grupy badaczy, zdolnych do posługiwania się podobnym językiem pojęć i wspólnym warsztatem naukowym. Efekt musi być możliwy do zaakceptowania przez odpowiednie ministerstwa w obu krajach, słowem powinien uzyskać rodzaj państwowej aprobaty. W warunkach, gdy w Rosji wprowadza się jeden uniwersalny podręcznik historii dla całego kraju, zaś propaganda rosyjska chętnie rozwija różne mity historyczne, trudno by o dialog zakładający próbę zrozumienia sąsiada, bo taki dialog musiałby się zacząć od pewnego zdystansowania się wobec własnej historii.

2) Celowo nie rozwijam tu tej kwestii, pozostawiając temat polsko-niemieckiego podręcznika do rozwinięcia w dyskusji przez prof. R. Wnuka, który jest członkiem zespołu przygotowującego ów podręcznik.

W ostatnich latach również w Polsce, ale też szerzej, w Europie, zwłaszcza w Europie Środkowo-Wschodniej, dochodzą do głosu nastroje nacjonalistyczne, zaś patriotyczne ożywienie zwykle odbywa się kosztem sąsiadów. Przypomina to, jako żywo, przypisywaną Ernestowi Renanowi definicję narodu, jako grupy połączonej wspólną, rzecz jasna mylną, wizją przeszłości i nienawiścią do sąsiadów. Nie buduje to korzystnego klimatu dla dialogu, zaś na gruncie wewnętrznym trzeźwe, krytyczne opinie historyków bywają klasyfikowane jako exemplum „pedagogiki wstydu”, przy jednoczesnym zapomnieniu, że nie ma innej sensownej historiografii niż krytyczna, nie tylko wobec innych, ale i wobec siebie. Słowem, w moim przekonaniu, jeśli polsko-rosyjski podręcznik historii powstanie, jest to kwestią dalekiej, nieprzewidywalnej przyszłości. Inna trudność, nawet gdyby ustały trudności zasygnalizowane wyżej, związana jest z faktem, że już tu wspomnianym, że o ile Rosja ma podstawowe miejsce w historii Polski, o tyle Polska jedynie marginalnie występuje w historii rosyjskiej. Między Polską i Niemcami te dysproporcje są znacznie mniejsze. Podobnie między Niemcami i Francuzami. Rosja jest zbyt wielkim krajem, zbyt wieloetnicznym i wielokulturowym, by problematyka polska mogła mieć dla niej podstawowe znaczenie.

Nie znaczy to, rzecz jasna, że niczego nie da się zrobić. W Polsce i w Rosji od 2008 r. działała Grupa do Spraw Trudnych, kierowana z polskiej strony przez prof. Adama Rotfelda, a z rosyjskiej przez akademika Anatolija Torkunowa. Obaj współprzewodniczący mieli solidną pozycję wśród elit rządowych swoich krajów. Prof. Rotfeld był w przeszłości ministrem spraw zagranicznych, pełnił też liczne odpowiedzialne funkcje międzynarodowe. Akademik Torkunow kieruje rosyjskim uniwersytetem dyplomatycznym, MGIMO i należy do grona bliskich doradców ministra spraw zagranicznych i samego prezydenta. Grupie udało się przygotować wspólnymi siłami ważne wydawnictwo, skoncentrowane na polsko-rosyjskiej historii XX wieku, tom „Białe plamy – czarne plamy”. Wydano go zarówno po polsku, jak i po rosyjsku, potem wyszedł też przekład angielski, nieco skrócony. W formule przyjętej w tym wydawnictwie polscy i rosyjscy historycy pisali odrębne teksty na ten sam lub bardzo zbliżony temat. Teksty te były aprobowane przez obie strony i w efekcie stanowiły mocny krok w kierunku, jeśli nie uzgodnienia stanowisk w kwestiach historycznie drażliwych, to zrozumienia racji drugiej strony. Niestety, w kilka lat potem, po rosyjskiej aneksji Krymu nastąpiło praktyczne zamrożenie prac Grupy, zaś

gdy wybory w Polsce wygrało Prawo i Sprawiedliwość, prof. Rotfeld podał się do dymisji jako współprzewodniczący Grupy (był też jednocześnie Pełnomocnikiem Ministra Spraw Zagranicznych ds. Grupy do Spraw Trudnych). W tym samym czasie stosunki polsko-rosyjskie pogorszyły się do stanu nie znanego po 1989/1991 roku. Na ich poprawę z pewnością nie wpływała rosyjska agresja na Ukrainie i powracające w polskich mediach rządowych i w części kręgów rządzących oskarżenia pod adresem Rosji za katastrofę prezydenckiego samolotu w 2010 r. Gdy w 2016 r. podjęto w Polsce decyzję o wznowieniu prac Grupy, ale nie spotkało się to z jednoznaczną reakcją Rosji, która przyjęła postawę wyczekującą. Grupę z polskiej strony skonstruował na nowo prof. Mirosław Filipowicz, zasięgając opinii prof. Rotfelda i uzyskując od ministra spraw zagranicznych gwarancję swobody doboru członków. I chyba nieprzypadkowo kilku z nowo mianowanych członków Grupy było od kilku lat zaangażowanych w przygotowanie polsko-rosyjskiego wydawnictwa pomocy naukowych dla nauczycieli historii w Polsce i w Rosji. Mam tu na myśli, poza kierującym tym projektem Filipowiczem, profesorów Wiesława Cabana, Mariusza Wołosa, Rafała Wnuka doktora Marka Radziwona. W projekcie tym przyjęto nieco inne założenia wyjściowe niż w „Białych plamach – czarnych plamach”. Poza wszystkim, była to pomyślana jako pomoc dla nauczycieli, zawierała też wybór źródeł i zadań szkolnych na poziomie szkoły średniej. Eseje o różnych aspektach polsko-rosyjskiej historii były napisane wspólnie przez polskiego i rosyjskiego autora, zaś zadania szkolne, zważywszy na różnice w programach nauczania i inne realia polskiej i rosyjskiej szkoły, przygotowali odpowiednio polscy i rosyjscy nauczyciele. Autorzy pracowali dopóki, dopóki uzgodnili wspólny tekst. Kluczowe było, by ów tekst nie był próbą banalizacji historii i omięcia niebezpiecznych raf, ale jednocześnie by uczulał polskiego odbiorcę na inny rodzaj rosyjskiej wrażliwości historycznej, i na odwrót. Słowem – kluczem projektu była więc empatia. W chwili, gdy piszę te słowa, wydane drukiem, po polsku i po rosyjsku, zostały dwa tomy, poświęcone historii od XIV do XIX wieku. Tom dwudziestowieczny jest już autorsko gotowy, oczekuje natomiast na oficjalną rosyjską aprobatę. Doświadczenia w pracy nad poprzednimi tomami sugerują, że kierownictwo rosyjskiej grupy zechce wprowadzić znaczne zmiany tekstowe, zmierzające faktycznie ku ocenzurowaniu tekstu. To też znamienne, bo polska strona nigdy do takich praktyk się nie uciekała, będąc gotową na krytyczne podejście do własnej historii. Ale jest też doświadczenie pozytywne: po

dłuższych dyskusjach wszystkie istotne dla tekstu rosyjskie zastrzeżenia udawało się usunąć. Tak też zapewne będzie w przypadku tomu dwudziestowiecznego, zostawionego – jako najtrudniejszy – na koniec. To wydawnictwo, dostępne do bezpłatnego pobrania w internecie, a bezpłatnie udostępniane szkołom w Polsce również w wersji papierowej, nie spotka się, bądźmy tego pewni, z popularyzacją w rosyjskich szkołach. Jednak, dzięki Polskiemu Instytutowi w Moskwie, a także dzięki internetowi, może trafić bez problemu do rosyjskich nauczycieli zainteresowanych tą problematyką. Oczywiście, projekt taki to zaledwie kropla w morzu potrzeb, gdy chodzi o wzajemne kontakty polsko-rosyjskie. Tyle, że to kropla pożyteczna. Już teraz zainteresowali się nim historycy na Białorusi, myśląc o podobnej inicjatywie z Polską, a zapewne też z Litwą. O zainteresowaniu sprawą w Korei świadczy nie tylko nasza dzisiejsza obecność w Seulu, ale też wcześniejsze prace naszych wspólnych polsko-koreańskich zespołów eksperckich. Chciałbym zakończyć optymistycznie: jeśli udało się coś, co w Europie było trudno wyobrażalne: polscy i rosyjscy autorzy napisali wspólne teksty o historii, chyba warto iść w tym kierunku także w innych regionach świata, poranionych historycznie i potrzebujących historii nie tylko jako źródła narodowej dumy, ale też i lekarstwa na narodowe przywary.

공동역사교재 편찬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

김정인(춘천교대)

1.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의 의미

최근까지 동아시아는 신냉전의 기류에 갇혀 있었다. 동아시아 신냉전은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을 수반했다.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의 유발자는 주로 일본 정부였다.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배와 전쟁이라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데는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이 크다. 사과와 배상·보상 문제는 차지고고서라도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등 엄연한 역사적 진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2001년에 일본 정부는 우익 출판사인 후소샤의『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중학교 교과서로 채택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입각한 역사교과서였다. 또한, 국가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상대주의 역사관을 내세웠다. 역사가 국민 동원의 도구라는 게 그들의 인식이었다. 일본에서는 이후에도 우익 역사 교과서들이 잇달아 중등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커다란 반발이 일어났다.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유발한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결의 주체로 나선 것은 시민이었다. 동아시아 시민들이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공존을 지향하며 역사 대화에 뛰어들었다.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는 공동 역사 교재 발간의 성과를 낳았다. 먼저, 한일 양국의 역사교사, 역사학자, 여성학자 등이 『조선통신사』(2005), 『마주보는 한일사』Ⅰ·Ⅱ(2006),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2005), 『한일 교류의 역사』(2006) 등의 공동 역사 교재를 출간했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운동가 등은 『미래를 여는 역사』(2005)를 발간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1단계 역사 대화가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2단계 역사 대화가 시작되었다. 2단계 역사 대화의 성과 역시 공동 역사 교재 발간으로 모아졌다. 1단계에서 『조선통신사』를 제작한 한일공동역사교재 제작팀은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2012)를 출간했다. 『미래를 여는 역사』를 출간한 한중일3국공동역사교재위원회는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2(2012)을 발간했다. 『마주보는 한일사』Ⅰ·Ⅱ를 선보였던 한국의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는 『마주보는 한일사』Ⅲ(2014)를 출간했다.

오늘날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는 3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중일3국공동역사교재위원회는 2020년 완간을 목표로 세 번째 공동 역사 교재를 위한 역사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일의 교사모임은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의 역사대화도 있었다. 2002년에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했다. 2006년에는 중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했다. 두 위원회는 각각 6년과 3년간 존속했다. 정부 간 역사 대화의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두 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역사 화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아니라 역사 갈등에 대한 외교적 대응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태생적 한계와 나름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지 못한 위원회의 추진력 미비로 결국 역사 인식의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1단계와 2단계에 걸친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재의 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역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시민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동아시아에서 쌍방 혹은 다자간 합의에 의해 시민 차원에서 공동 역사 교재가 발간된 것은 정부의 협조와 지원 아래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 「권고안」 혹은 공동교과서를 발간하는 유럽 사례와는 다른 동아시아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20여 년 간 이어진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는 각국의 역사 경험과 역사 정서의 차이를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인 동시에 동아시아적 범주에서 역사 인

식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지속적인 역사 대화가 역사 인식 공유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 역사 교재 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임을 겪고도, 그 필요성에 심분 공감하는 것은 역사 대화를 지속하면서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과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는 역사 인식의 공유를 통해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연대 의식과 정체성을 싹틔우는 평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대화 1단계 : 『미래를 여는 역사』(2005)

동아시아 최초의 삼국 공동 역사 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는 역사 대화 1단계의 성과물이다. 한중일 역사 대화는 일본 후소야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3월 난징에서 열린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포럼’ 제1회 대회에서 삼국의 참가자들이 공동 역사 교재 발간에 합의하면서 닷을 올렸다. 삼국은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를 조직했다. 한국 측 실무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일본 측 실무는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워크21이 담당했다. 중국은 사회과학원, 상하이사범대학, 난징대학살기념관 등 다양한 기관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삼국의 청소년들이 타국의 역사와 상호 관계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중등학교에서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역사 교재를 만들고자 했다. 내용에서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이 모두 필요했던 것처럼, 삼국간의 역사 대화의 길을 순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중일의 근현대사를 함께 묶어 체계적으로 서술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목차를 구성하고 합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삼국의 청소년이 다른 두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각국의 역사를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서술하면서 상호 관계사를 함께 서술하기 위해 어떤 목차 구성이 가능할지를 놓고 많은 시간을 들이며 갑론을박했다. 목차 구성에 합의한 이후에는 각국이 분담 집필한 원고를 일일이 검토, 논의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집필은 각국 집필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자국사를 집필해 조합하는 방식으로 취했다. 회의에서는 매번 각국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동시에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해야 했다.

난산 끝에 2015년에 출간된 『미래를 여는 역사』에는 한중일 삼국의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운동가 등 모두 53명이 집필자로 참가했다. 이 책은 출간 1년 만에 중국에서 11만 부, 한국에서 5만 부, 일본에서 7만 부가 판매되는 등 삼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에스페란토어로 번역되었으며, 하와이대학출판부에서는 영문판을 출간했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일본의 식민지배 및 침략 사실과 그로 인한 민중 피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일본이 가해 사실을 외면하면서 식민지배와 침략을 미화하는 데에 정면으로 대응할 목적에서 나온 공동 역사 교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침략과 지배, 식민과 피지배의 고통으로 점철된 20세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삼국의 시민이 역사 대화를 통해 함께 직시하면서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앞으로 동아시아 다자간 역사 대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관심이 높은 만큼 신랄한 비판도 뒤따랐다. 비판의 핵심은 삼국의 근현대사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삼국사에 그쳤다는 것이었다.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 역사상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공동 역사 교재가 국가사를 넘어 지역사회로서의 동아시아 역사상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시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평가였다.

3. 역사 대화 2단계 :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2(2012)

2006년 11월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는 한중일 삼국의 공동 역사 인식의 기반이 될 동아시아 근현대 통사를 집필하기 위한 전단계의 공동역사교재를 발간하는 데 합의했다. 한중일삼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의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실무도 역시 한국 측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일본 측은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워크21이 담당했다. 중국은 사회과학원이 담당했다.

삼국의 편찬위원들은 먼저 2단계의 공동 역사 교재의 독자 대상은 시민으로 하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책을 쓴다는 데에 합의했다. 내용은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구조적 변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중일 삼국의 국가 체제와 상호 관계의 구조적 변동을 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권-국제 관계의 변동으로 읽는 동아시아의 역사-』는 이렇게 탄생했다.

1권의 틀에 합의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변동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동아시아 민중의 삶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논의 끝에 세 나라 민중의 생활과 교류를 다루는 책을 한 권 더 집필하기로 했다. 이것이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테마로 읽는 사람과 교류의 역사-』이 나온 배경이다.

두 권의 책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함께 역사 대화 1단계처럼 각국 집필자가 자국사를 집필해 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장마다 한 나라가 책임지고 집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장마다 집필 책임 국가를 정하고 나머지 두 나라 집필자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은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따로 집필한 각국사를 조합하는 방식보다는 역사 인식 공유라는 역사 대화의 취지에는 더 부합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에 집필과 검토 과정은 1단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지난했다. 원고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용의 수준은 점점 높아졌고, 장별로 책임 집필 나라가 다른 까닭에 장별로 불균등한 서술이 이루어졌지만, 삼국 상호 간에 의견 조정 또한 쉽지 않았다.

역사 대화 2단계의 산물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2는 2012년에 출간되었고, 독일 게오르그-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에서 2017년에 영역본을 출간했다. 2단계 공동 역사 교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면서도 역사학자와 역사교사에게 시사점을 주는 학술서의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목에서 만들어진 까닭에 삼국의 근현대사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면서 1단계 공동 역사 교재보다 역사학계의 주목을 더 받았다. 또한 1단계를 거쳐 2단계에 이르는 공동 역사 교재인 만큼 역사 대화라는 안목에서 의의를 짚는 비평들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구조 변동 과정과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호 연동된 20세기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고, 화해와 공존의 동아시아를 상상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삼국 문화의 유사성 및 공통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삼국이 지역-문화공동체임을 재확인할 수 있

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웃으로서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삼국의 화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각국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상대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넷째, 전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평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은 또 다른 전쟁과 대결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민족적 입장을 넘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한 내용적인 비판으로는 첫째, 동아시아 삼국의 근현대사에서 예민한 상호 쟁점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1권의 전체적인 서술 구도가 중국중심→일본중심→미국중심으로 서술되어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 인식의 틀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양국, 혹은 삼국 간의 역사 쟁점을 역사 대화 안으로 끌어 들여 합의점을 찾고 이를 공동 역사 교재에서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역사 대화를 통해 역사 인식의 공유에 바탕을 둔 새로운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체계 혹은 역사상을 제시하는 일도 난망하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게 역사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4. 역사 대화 3단계,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시대의 도래

2015년부터 한중일의 3단계 역사 대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2단계 공동 역사 교재를 출간하고 3년 뒤에 출발한 만큼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30,40대의 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본에서도 30,40대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가 합류했다. 한국에서는 40대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가 새로 참여했다. 또한 한국 측 편찬위원에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전공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2단계와 달리 중국사 전공자를 새롭게 영입했다.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가 합의한 3단계 공동 역사 교재는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학습의 길잡이로서의 틀을 갖춘 중등학교 부교재였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중 주요한 학습요소를 추려내어 “민중들은 왜 다른 나라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답을 구하는 구성으로 본문을 서술하기로 했다. 앞선

1,2 단계의 역사 대화는 목차와 개요에 합의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 지에 대한 이견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처럼 1,2 단계의 역사 대화를 거친 덕에 3단계에서는 책의 집필 방향과 개요, 목차 구성에 있어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합의를 이루어냈다. 2020년 발간을 목표로 올 6월 말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부터 원고를 상호 검토할 예정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단계 공동 역사 교재를 준비하면서 3단계에는 본격적인 동아시아 근현대사 통사를 쓰는데 합의했음에도 막상 3단계 역사 대화에서는 오히려 중등학교 부교재라는 1단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상황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는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우익 교과서 역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중이다. 여기에 시민운동이 약화되면서 일본 측 편찬위원회는 한중일 삼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회의를 준비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은 우익 교과서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출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단계처럼 중등학교 부교재를 내놓자고 제안했고 한국과 중국이 동의했다.

동아시아 역사 대화는 21세기 동아시아 신냉전 체제하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정부가 아닌 시민 차원의 역사 대화였다.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과거사 부인-일명, 역사세탁-에 대응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대화의 산물은 오늘의 시민, 그리고 미래의 시민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역사 교재 발간으로 한정되었다.

2018년 봄, 동아시아는 평화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2단계 공동 역사 교재를 출간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이렇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하려는 노력 속에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 정착이 이루어질 것임을 공동 역사 교재 작업은 직접 보여준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2단계 공동 역사 교재가 나왔을 때, 북한에 대해 대외 정책만을 다룰 뿐, 소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상황을 볼 때, 3단계 역사 대화에서는 북한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나아가 화해와 평화 시대로 접어든 동아시아에서 역사 대화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세 가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동아시아 시민의 역사 대화에 이어 각 정

부가 역사 대화의 주체로 나서게 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역사 대화는 다양한 층위에서 시도될 것이다. 남북 간의 역사 대화 혹은 한중일에 북한과 타이완, 나아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몽골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역사 대화는 모색될 것이다. 셋째, 공동 역사 교재에 한정되었던 역사 대화의 방식이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처럼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공동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방식의 역사 대화는 동아시아에서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21세기에 들어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역사 대화는 평화의 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의식, 나아가 민주주의·인권·평화에 기반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memo

memo

memo
